연구보고서 2023-17

중년층 노동 생애 불안정성 측정과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이아영
박소은·황남희·한수진·배호중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아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박소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수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배호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 2023-17

중년층 노동 생애 불안정성 측정과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발 행 일	2023년 12월
발 행 인	이 태 수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 쇄 처	㈜에이치에이엔컴퍼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ISBN 978-89-6827-972-0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3.17

발|간|사

만혼화·비혼화·고령화에 따라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표준적인 은퇴 과정·노동 생애가 상당 부분 사라지고 있는 최근 사회에서 직면한 불안정성, 특히 중년층의 노동 생애 불안정성에 대한 관찰은 필수적이다. 중년층은 노후 준비, 부모부양, 자녀양육의 부담으로 일을 통한 지속적 경제활동이 중요한 대안 중 하나인 동시에 잦은 노동 이동 위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생애 단계이다. 자녀의 늦은 결혼·출산으로 양육의 기간이 길어짐과 동시에 부모세대의 연장된 평균수명만큼 부양의 기간도 늘어나 이중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길어진 수명에 대한 본인(부부)의 노후 준비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구 고령화와 재정적 압박에 직면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늦은 퇴직을 장려하기 위해 연금정책과 기타 사회 프로그램을 개혁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개혁 중 상당수는 조기 퇴직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잦은 노동 이동, 특히 비자발적인 노동 이동은 일자리 질 저하와 임금 손실, 그리고 공적 연금 및 퇴직 연금 감소 등 복리후생 불이익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노동시장 재진입 기회는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며, 후기중년은 연령에 대한 고정관념, 기술노후화, 건강 문제 등으로 노동 이동 및 노동시장 재진입 기회를 갖는 데 더 큰 장벽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의 정년연장, 계속근로, 주된 일자리에서의 근로 연장 등이 격차 유발 가능성을 만들거나 혹은 계층화를 고착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존재한다.

다양한 비자발적 사유로 노동시장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거나 실직으로 유발되는 불안정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중년층이 어떤 조건하에서 비자발적 조기 퇴직을 피하고 노년에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

에 대한 질문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중년층의 노동 생애 불안정성과 그로 인해 발생 가능한 결과, 그리고 관련한 지원 정책들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잘 살펴보고 정리하는 것이 이러한 질문에 답하며 늦은 퇴직을 장려하는 현 정책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단계 중 하나로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이아영 부연구위원의 주관하에 원내 박소은 부연구위원, 황남희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배호중 부연구위원, 그리고 원내 한수진 연구원이 참여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독일 사례 연구로 도움을 주신 한국노동연구원 김경아 박사님과 포럼의 방식으로 참여하여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적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힌다.

202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목 차

Abstract ····· 1

요 약 ····· 3

제1장 서론 ·····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7

제2장 이론적 배경 ····· 19

제1절 중년층의 개념 및 범주 ····· 21

제2절 중년층의 노동 생애 불안정과 소득 불안정 ····· 24

제3장 중년층의 경제활동 및 경제상태 실태 ····· 37

제1절 분석 개요 ····· 39

제2절 중년층의 경제활동 실태 ····· 43

제3절 중년층의 경제상태 실태 ····· 49

제4절 소결 ····· 66

제4장 중년층의 노동 생애 불안정성 측정 ····· 69

제1절 분석 개요 ····· 71

제2절 분석 결과 ····· 79

제3절 소결 ····· 106

제5장 중년층 노동 불안정(직업 상실)이 노동궤적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 ····· 109

제1절 분석 개요 ····· 111

제2절 분석 결과 ····· 117

제3절 소결 ····· 130

제6장 중년층 지원 정책 현황 및 한계점 ····· 133

제1절 분석 개요 ····· 135

제2절 중년층 지원 정책 현황 ····· 137

제3절 중년층 지원 정책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 ····· 152

제7장 결론 ····· 163

제1절 분석 결과 요약 ····· 165

제2절 정책 시사점 요약 ····· 170

참고문헌 ····· 177

표 목차

〈표 2-1〉 관련 선행연구의 흐름 ····· 25
〈표 2-2〉 선행연구의 노동 안정성 지표 예: 윤하림·홍백의(2020) ····· 28
〈표 2-3〉 선행연구의 불안정 노동 지표 예: 전예지(2022) ····· 30
〈표 2-4〉 선행연구의 불안정 노동 지표 예: 강지영·함선유·윤하림(2022) ····· 31
〈표 2-5〉 선행연구의 불안정성 지표 예: 박나리·김교성(2021) ····· 33
〈표 4-1〉 임금 불안정성 관련 변수: 시간당 임금 ····· 74
〈표 4-2〉 본 연구의 노동 생애 불안정성 지표 ····· 75
〈표 4-3〉 분석 대상 표본 ····· 78
〈표 4-4〉 연도별 45~64세 대상 표본의 불안정성 지표별 분포 추이 ····· 81
〈표 4-5〉 연령대별 불안정성 지표별 분포 추이 ····· 83
〈표 4-6〉 남성 중년 대상 최적 집단 수 추정 ····· 84
〈표 4-7〉 남성 중년 출생 코호트 1946년생~1955년생 대상 최적 집단 수 추정 ····· 89
〈표 4-8〉 남성 중년 출생 코호트 1956년생~1965년생 대상 최적 집단 수 추정 ····· 89
〈표 4-9〉 남성 중년 대상 노동 불안정성 궤적 유형 요약 ····· 92
〈표 4-10〉 여성 중년 대상 최적 집단 수 추정 ····· 95
〈표 4-11〉 여성 중년 출생 코호트 1946년생~1955년생 대상 최적 집단 수 추정 ····· 100
〈표 4-12〉 여성 중년 출생 코호트 1956년생~1965년생 대상 최적 집단 수 추정 ····· 100
〈표 4-13〉 여성 중년 대상 노동 불안정성 궤적 유형 요약 ····· 103
〈표 5-1〉 분석 대상 표본 ····· 116
〈표 5-2〉 후기 직업 상실 발생 비율 ····· 117
〈표 6-1〉 취업촉진수당 지원 요건 및 지원 내용 ····· 139
〈표 6-2〉 직업능력개발 지원 내용 ····· 141
〈표 6-3〉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요건 ····· 144
〈표 6-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 144
〈표 6-5〉 가구유형별 가구원 구성 ····· 147
〈표 6-6〉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 148
〈표 6-7〉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 ····· 149

〈표 6-8〉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 ····· 150

그림 목차

[그림 1-1] 만 35~64세 이하 사회보장제도 비수급층 비율 ····· 14
[그림 1-2] 연구 개요 ····· 16
[그림 3-1] 연령대별 인구 규모 ····· 44
[그림 3-2]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추이 ····· 46
[그림 3-3] 연령대×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비중 추이(2012~2022) ····· 48
[그림 3-4]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실질 균등화 소득 추이 ····· 50
[그림 3-5] 소득 5분위별 연령대 분포 ····· 51
[그림 3-6] 가구주의 연령대×교육수준별 가구 실질 균등화 소득 추이 ····· 52
[그림 3-7] 가구주의 연령대×성별 가구 실질 균등화 소득 추이 ····· 53
[그림 3-8] 가구주의 연령대별 실질화한 가구 균등화 지출 추이 ····· 54
[그림 3-9] 가구주의 연령대×교육수준별 가구 균등화 지출 추이 ····· 55
[그림 3-10] 가구주의 연령대×성별 실질화한 가구 균등화 지출 추이 ····· 55
[그림 3-11] 가구주의 연령대별 실질화한 가구 자산액 추이 ····· 57
[그림 3-12] 자산 5분위별 연령대 분포 ····· 58
[그림 3-13] 가구주의 연령대×교육수준별 실질화한 가구 자산액 추이 ····· 59
[그림 3-14] 가구주의 연령대×성별 실질화한 가구 자산액 추이 ····· 59
[그림 3-15] 가구주의 연령대별 실질화한 가구 부채액 추이 ····· 60
[그림 3-16] 가구주의 연령대×교육수준별 가구 평균 부채 추이 ····· 61
[그림 3-17] 가구주의 연령대×성별 실질화한 가구 부채액 추이 ····· 61
[그림 3-18] 가구주의 연령대×종사상지위별 가구 부채 추이 ····· 62
[그림 3-19] 가구주의 연령대별 실질화한 가구 순자산액 추이 ····· 63
[그림 3-20] 가구 순자산 5분위별 가구주 연령대 분포 ····· 64
[그림 3-21] 가구주의 연령대×교육수준별 실질화한 가구 순자산액 추이 ····· 65
[그림 3-22] 가구주의 연령대×성별 실질화한 가구 순자산액 추이 ····· 65
[그림 4-1] 남성 중년 대상 노동 불안정성 궤적 유형 ····· 87
[그림 4-2] 남성 중년 출생 코호트 1946년생~1955년생 대상 노동 불안정성 궤적 유형 ····· 93
[그림 4-3] 남성 중년 출생 코호트 1956년생~1965년생 대상 노동 불안정성 궤적 유형 ····· 94

[그림 4-4] 여성 중장년 대상 노동 불안정성 궤적 유형 ····· 99
[그림 4-5] 여성 중년 출생 코호트 1946년생~1955년생 대상 노동 불안정성 궤적 유형 ····· 104
[그림 4-6] 여성 중년 출생 코호트 1956년생~1965년생 대상 노동 불안정성 궤적 유형 ····· 105
[그림 5-1] 후기 직업 상실이 미취업에 미치는 효과 ····· 119
[그림 5-2] 직업 상실 연령이 이후 미취업에 미치는 효과 ····· 121
[그림 5-3] 출생 코호트별 후기 직업 상실이 미취업에 미치는 효과 ····· 122
[그림 5-4] 교육수준별 후기 직업 상실이 미취업에 미치는 효과 ····· 124
[그림 5-5] 후기 직업 상실이 소득에 미치는 효과 ····· 125
[그림 5-6] 직업 상실 연령이 이후 소득에 미치는 효과 ····· 127
[그림 5-7] 출생 코호트별 후기 직업 상실이 소득에 미치는 효과 ····· 128
[그림 5-8] 교육수준별 후기 직업 상실이 소득에 미치는 효과 ····· 129
[그림 6-1] 중년층 지원 정책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범위 ····· 136
[그림 6-2] 직업능력개발 사업 체계 ····· 140
[그림 6-3]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 147

Abstract

A Study on the Measurement of Working-Life Instability among Middle-aged People and Support Policies.

Project Head: Ayoung, Lee

In most advanced countries facing population aging and fiscal pressure, reforms in pension policies and other social programs have been implemented to encourage delayed retirement. A significant portion of these reforms involves strengthening penalties for early retirement. Therefore, it is crucial to examine under what conditions middle-aged workers, who are relatively more likely to experience labor instability, can avoid early retirement and achieve an adequate income in their later years. With this in mind, we looked at the working-life instability of the middle-aged, explored how it would affect their labor trajectories and income, and discussed potential support policies.

Firstly, we examined the economic activities and economic conditions of the middle-aged population using representative statistical data. Secondly, to understand the patterns of midlife labor market instability, we conducted a dynamic analysis targeting individuals aged 45 to 64 using the Korean Labor Panel data. Thirdly, we examined the impact of late-career job loss, specifically involuntary career unemployment among those be-

Co-Researchers: Park, Soeun · Hwang, Namhui · Han, Sujin · Bae, Hojoong

tween ages 45 and 59, a significant event leading to labor instability, on potential labor trajectories and income loss. Finally, we explored relevant support policies.

The negative effects on the labor market trajectory and income due to job loss and unstable labor for people in their late-40s and early-50s, as observed in this study, highlight a significant societal issue. Precarious labor existed in various types and forms. It is not simple to systematically include them and provide support to maintain an appropriate standard of living. Nevertheless, the fact that involuntary unemployment from the career job leads to subsequent losses in employment trajectory and income confirms that reintegrating workers who have experienced involuntary early retirement into the labor market is a major task not only for the labor market but also for social policy.

Key words : working-life instability, middle aged worker, labor trajectories, income loss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구 고령화와 재정적 압박에 직면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늦은 퇴직을 장려하기 위해 연금정책과 기타 사회 프로그램을 개혁했고, 현재도 개혁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개혁 중 상당수는 조기 퇴직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노동 이동이 어려운 특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노동 불안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중년 근로자가 어떤 조건하에서 조기 퇴직을 피하고 노년에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노후 준비, 부모부양, 자녀양육의 부담으로 중년층에게 일을 통한 지속적 경제활동은 중요한 대안 중 하나이다. 만혼화·비혼화·고령화에 따라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표준적 은퇴 과정·노동 생애가 상당 부분 사라지고 있는 최근 사회에서 중년층의 노동 생애 불안정성에 대한 관찰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중년층의 노동 생애 불안정성과 그로 인해 발생 가능한 노동궤적 및 소득 손실에 대해 살펴봤다.

2. 주요 연구 결과

통계청 통계자료를 이용해 중년층의 경제활동 실태와 경제상태 실태를 우선 살펴봤다. 전기중년층(45~54세) 및 후기중년층(55~64세) 모두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종사상지위를 기준으로 살폈을 때 전기중년층의 경우 상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가운데 이들 연령대의 해당 종사상지위의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았으며, 후기중년층의 경우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가 차지

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즉 종사상지위를 통해 살펴본 일자리 질에서는 중년층, 특히 후기중년층의 경우 노동 불안정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되는 종사상지위에 속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상태의 경우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중년층 가구의 경우 소득액이 타 연령대(청·장년층, 은퇴연령층)에 비해 높았다. 다만, 소득의 내부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소득 분위별 특성을 통해 이들(특히 후기중년)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양극단에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주의 학력별, 성별에 따른 가구 균등화 소득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집단 내 차이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년층은 가구를 형성해서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비율이 높음에 따라 소득액의 평균도 높지만, 소득액 대비 지출액 비중 또한 높다. 가구소득과 유사하게 연령에 따른 지출 양상에서도 중년층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교육수준, 성별에 따른 집단 내 차이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중년층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집단 내 이질성이 큰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이들 집단의 평균값은 다른 집단에 비해 집단을 대표 혹은 이해함에 있어 평균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도 볼 수 있음에 따라 이들의 동태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음으로 중년층의 노동 생애 불안정성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45~64세 중년층을 대상으로 동태 분석을 진행하였다. 노동 불안정성은 고용 지위(경제활동 상태 및 종사상지위), 시간당 임금 수준(최저임금, 저임금 및 생활임금 기준), 직업 숙련도(고숙련, 중숙련, 저숙련 등) 세 가지 하위 차원에서 지표를 구성하였으며, 각 연령 시점에서 노동 불안정성 지표를 측정한 후 집단중심 다중추세분석법을 활용하여 중장년층이 경험하는 노동 불안정성 궤적을 유형화하였다. 남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노동 생애 궤적은 6가지 유형

으로 나타나는데, 크게 보면 40대 중반에서 50대 중후반까지 임금근로자로 근로하다 이후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유형과, 40대 중반 이후 고용주 또는 자영업 상태를 유지하는 유형으로 나타난다. 코호트별 비교 시, 46~55년생 코호트에 비해 56~65년생 코호트에서 자영업 유형은 다소 감소한 모습을 보이며, 특히 저숙련 자영업 불안정형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56~65년생 코호트에서 50대 후반 이후 노동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후기 불안정형 비중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 있다. 반면, 50대 초중반부터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중숙련 조기 불안정형의 경우, 56~65년생 코호트에서 해당 유형의 구성비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노동 불안정성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연령대가 더 당겨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여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이들의 노동 생애 궤적은 7개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대체로 남성 중장년층에 비해 고용 불안정성, 임금 불안정성, 직업 숙련 불안정성이 모두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40대 중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비경제활동 상태로 있는 만성 미취업 유형 비중이 약 19.9%로 나타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저숙련 자영업 유지형으로 약 32.5%의 구성비를 보인다. 물론, 이러한 양상의 기저에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임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여성 중장년층 표본에서 더 특징적인 점은 중-저숙련 무급가족 유지형이 약 9.9%로 관찰되며, 50대 중후반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저숙련 후기 노동시장 진입형도 10.6% 수준으로 관찰된다는 것이다. 남성 중장년층 중 40~50대에 임금근로자였던 경우,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고용 지위, 임금 수준, 직업 숙련도 측면에서 측정한 노동 불안정성이 다소 높아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비임금근로자(고용주 및 자영업자)의 경우

에는 출생 코호트별로 특별히 불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볼 만한 현상은 관찰되지 않는다. 여성 중장년층의 경우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노동시장 참여가 더욱 증가하면서 노동 불안정성도 더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영업자와 일부 임금근로자를 제외하고는 50대 이후 연령에서 대체로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임금 불안정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노동 불안정을 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 후기 직업 상실, 즉 45세에서 59세 사이 주된 일자리에서의 비자발적 실직으로 발생 가능한 노동궤적과 소득 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45세에서 64세의 한국 중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직업 상실이 중장기적 취업궤적과 소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다. 45세에서 59세 사이에 비자발적으로 주된 일자리(main job)를 잃은 남성과 매칭한 비교집단의 미취업률 격차는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긴 하나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특히 직업 상실 연령별로 이들 집단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조기 직업 상실(45세에서 52세 주된 일자리에서의 비자발적 실직)이 이후 이들의 취업궤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3세에서 59세에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하는 경우 은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45세에서 52세의 비자발적 실직 경험 이후 노동궤적은 은퇴 행동의 반영이기보다는 실직 후 일자리를 잃고 쉽게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기 어려움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45세에서 59세에 비자발적으로 주된 일자리를 잃은 남성의 비교집단과의 연간 소득 격차는 단기에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나 실직 후 5년 차부터 격차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재취업 확

률이 남성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시간에 따른 소득 변화의 추세는 남성과 반대이나, 격차에 있어서는 남성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또한 조기 직업 상실이 이후 이들의 취업궤적뿐 아니라 소득에도 더욱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기 비자발적 직업 상실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됨에 따라 지속적인 흉터 효과(scarring effect)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후기 비자발적 직업 상실이 취업 참여 및 소득수준에 주는 영향은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직업 상실의 단기적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으나, 그 영향이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나타났다. 또한 고학력 근로자라도 주된 일자리에서의 비자발적 실직이 이들의 이후 취업궤적에 영향을 미치고 소득 손실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 중년층의 높은 비율이 이른 나이에 비자발적 퇴직을 경험하고 노동 생애에 걸친 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직업 상실, 노동 불안정은 이후 이들의 노동궤적뿐 아니라 소득에도 지속적인 부정적 효과를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10년 후까지 살펴봤으나, 평생 소득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다면 더 큰 경제적 충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중년층의 40대 후반과 50대 초반의 직업 상실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노동궤적 및 소득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관례적인 은퇴 연령과는 아직 한참 떨어진 연령대이다. 노동시장 재진입 기회는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며, 후기중년은 연령에 대한 고정관념, 기술 노후화, 건강 문제 등으로 노동 이동 및 노동시장 재진입 기회를 갖는 데 더 큰 장벽에 직면해 있다(Ebbinghaus & Radl, 2015).

게다가 최근 산업, 직종, 그리고 직업의 소멸과 생성의 속도는 중년층이 따라잡기 힘들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거기에 이중노동시장 구조의 특성을 가진 한국에서는 중년 근로자의 비자발적 실업, 노동 불안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문제로 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시각이 올바른 접근이라 생각된다. 특히 이러한 비자발적 실직 경험, 이로 인해 유발되는 노동 생애 불안정은 교육 수준에 따라 계층화되어 나타난다. 그럼에도 고학력 근로자 역시 주된 일자리에서의 비자발적 실직 이후 취업궤적 및 소득에서 손실을 경험한다는 사실은 조기에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한 근로자를 노동시장으로 재통합하는 것이 노동시장뿐 아니라 사회정책의 주요 과제임을 확인시켜준다고 볼 수 있다.

불안정 노동은 다양한 유형,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들을 체계적으로 포괄하며 적절한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단순하지 않다. 그럼에도 다양한 비자발적 사유로 노동시장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거나 실직으로 유발된 불안정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중년층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이 어떤 조건하에서 비자발적 조기 퇴직을 피하고 노년에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주요 용어 : 노동 생애 불안정, 중년 근로자, 노동궤적, 소득 손실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최근 탈산업화, 글로벌 경쟁, 노동시장 재구조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불안정 및 불평등이 발생하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메커니즘 중 하나가 '노동 생애 과정의 분화(differentiation)'이다(Brückner & Mayer, 2005). Beck(1992)은 위험사회를 대표하는 위험 중 하나로 '노동의 불안정성'을 언급했다. Billari & Liefbroer(2010)는 안정적인 노동 생애 궤적은 사회 권리(social rights), 소득 보장 등과 관련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측면에서 노동 불안정성, 노동 생애 불안정성은 고용 안정성(employment security)의 지표일 뿐 아니라 노동시장 세분화(labour market segmentation)와 사회 계층화(social stratification)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즉 사회 및 경제적 이동성의 지표이기도 하다(Biemann, Fasang, & Grunow, 2011; Riekhoff, Ojala, & Pyöriä, 2021).

불안정 고용상태를 야기하는 실직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실직 후 재취업하는 경우 일자리 질 저하와 심각한 임금 손실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Arulampalam, 2001, Dieckhoff, 2011, Brand, 2015). 또한 잦은 노동 이동은 공적 연금 및 퇴직 연금 감소 등 복리후생 불이익을 더욱 가중시키며(Zabel, 2022), 결국 은퇴 후 재정 상황에도 영구적인 상처(scar)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Chan & Stevens, 2004). 다수의 연구에서

이직이 임금 및 일자리 질에 미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 “상처 효과(scar effect)”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Arulampalam, 2001, Dieckhoff, 2011, Heisig & Radl, 2017). 특히 노동시장 재진입 기회는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며(Zabel, 2022), 후기중년은 연령에 대한 고정관념, 기술 노후화, 건강 문제 등으로 노동 이동 및 노동시장 재진입 기회를 갖는 데 더 큰 장벽에 직면해 있다(Ebbinghaus & Radl, 2015). 그리고 Shahbazian & Bihagen(2022)의 연구에서는 근로연령층(prime age)의 소득 격차가 종종 영구 소득과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한편 인구 고령화와 재정적 압박에 직면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늦은 퇴직을 장려하기 위해 연금정책과 기타 사회 프로그램을 개혁했고(OECD, 2015), 현재도 개혁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개혁 중 상당수는 조기 퇴직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것임에 따라 노동 이동이 어려운 특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노동 불안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중년 근로자가 어떤 조건하에서 조기 퇴직을 피하고 노년에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이중노동시장 구조에 더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 및 직종, 그리고 직업의 생성·소멸 등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의 정년연장, 계속근로, 주된 일자리에서의 근로 연장 등이 격차 유발 가능성을 만들거나 혹은 계층화를 고착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에 관한 우려도 존재한다. 특히 노후 준비, 부모부양, 자녀양육의 부담으로 중년층에게 일을 통한 지속적 경제활동은 중요한 대안 중 하나이다. 자녀의 늦은 결혼·출산으로 양육의 기간이 길어짐과 동시에 부모세대의 연장된 평균수명만큼 부양의 기간도 늘어나 이중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길어진 수명에 대한 본인(부부)의 노후 준비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변화된 사회환경을 고려하면 일을 하는 기간이 늘어나야 하지만 오히려 1997년 경제위기

를 시작으로 2008년 금융위기는 중년인구의 노동 불안(조기퇴직, 실업, 파산 등)을 가속화시켰다. 실제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은 약 10년 사이에 약 4년 7개월이 줄어들었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그만둔 연령은 53세에서 2023년 5월 기준 49.4세로 낮아졌다(통계청, 2023d). 한국의 실질적 은퇴 연령은 OECD 국가 중 단연 최고 수준으로, 열악한 저임금 혹은 주변부 일자리에서 70대까지 계속근로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다. 가족해체, 육아 및 돌봄, (장기)실업 등 다양한 사유로 노동시장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거나 불안정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중년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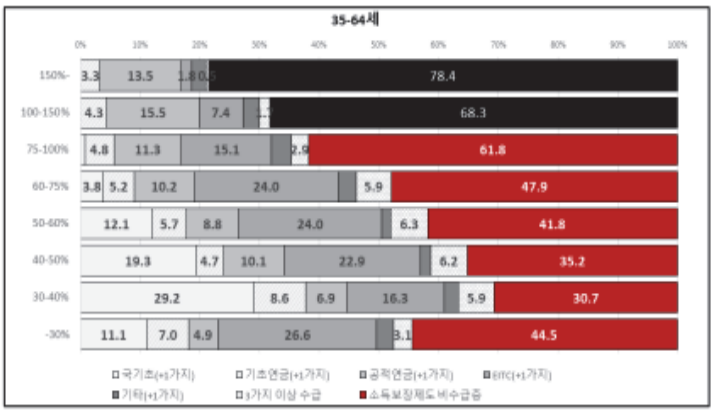
그동안 고령층, 청년층 양쪽에 사회적 관심과 정책이 집중되면서 그 중간에 낀 중년층은 관심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중년층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반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한다는 사회적 선입견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굳이 사회정책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보장)정책만으로 고령층과 청년층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 부족분을 중년층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되고 그 부담이 점차 가중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년층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당연히 일을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가졌을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관심을 덜 받는 집단이다. 하지만 그러한 전제가 옳지 않다면, 젊은 층과 고령층 노동시장의 가교 역할을 하는 집단이 부실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이아영, 2020). 이러한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당 집단의 노동시장에 관심을 기울여 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이아영, 2020). 현재 중년층[1]은 소득과 고용

1) 제2장 중년층의 개념과 범주에서 다루겠지만, 본 연구에서 중년층은 만 45~64세를 의미

보장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광범위한 적용 사각지대에 위치한다는 특성이 있다(김태완 외, 2022).

〔그림 1-1〕 만 35~64세 이하 사회보장제도 비수급층 비율

(단위: %)



자료: 김태완 외. (2020). 우리나라 소득분배 진단과 사회보장재구조화 방안 연구. p. 161.

만혼화·비혼화·고령화에 따라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표준적 은퇴 과정·노동 생애가 상당 부분 사라지고 있는 최근 사회에서 중년층의 노동 생애 불안정성에 대한 관찰은 필수적이다. 이들이 나이가 듦에 따라 2035년쯤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큰 규모의 인구집단이 다음 생애주기로 이동해 갈 것이다. 2022년에 우리나라 중위연령은 45세로 중년 사회가 시작되었으며, 2020년부터 청년과 고령층 사이에 낀 중년층의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중년층 노동 생애 불안정 양상에 대한 진단과 이를 고려한 사회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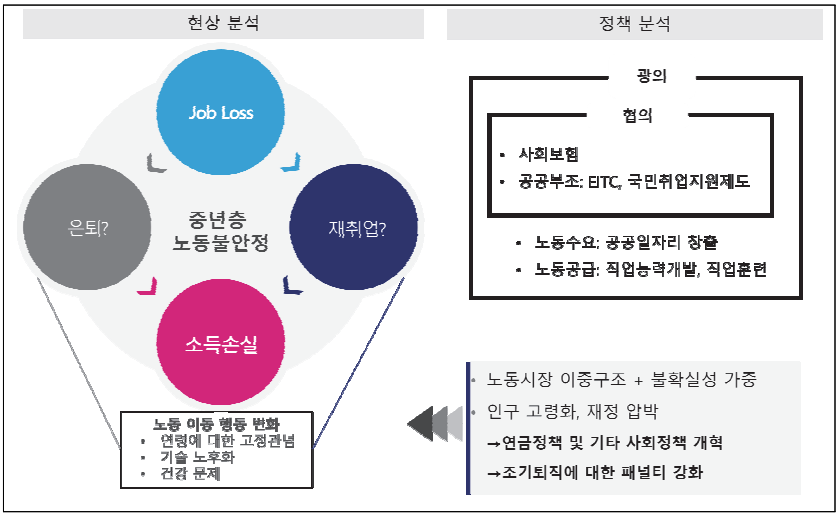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기존 연구에서 중장년층, 후기중년층이라는 용어로 정의되기도 한다.

2. 연구 목적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중년층의 노동 생애 불안정성과 그로 인해 발생 가능한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목적이다. 그리고 현재 지원 정책이 이들의 노동 생애 불안정성 양상에 따른 대상자 특성을 어느 정도 포괄·반영하며 지원되고 있는지 현 지원 정책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중년층의 노동 생애 불안정성을 측정하고, 늦은 나이의 경력 상실이 노동 이동 및 소득에 미치는 결과를 살펴보고 분석하여 정리하는 것은 사회적 격차 확대를 최소화하며 늦은 은퇴를 장려하는 정책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단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구체적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중년층의 사회경제적 역할 및 위치를 가늠해보고자 청년 및 노년층과의 비교를 통한 경제활동 및 경제상태 실태 분석
2. 중장년층의 노동 생애 불안정 양상에 대한 동태 분석
3. 노동 불안정을 야기하는 늦은 나이의 직업 상실이 이들의 취업상태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현 지원 정책이 이들의 노동 생애 불안정성 양상을 어느 정도 포괄·반영하며 지원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한계점과 개선 방향 제시

〔그림 1-2〕 연구 개요



자료: 저자 작성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된다. 1)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분석 대상 연령 범위를 설정, 2) 우리나라 중년층의 현 위치와 상태 파악을 위한 다른 연령층과의 비교 정태 분석, 3) 노동 생애 불안정성과 그로 인해 발생 가능한 결과를 분석하는 동태 분석, 그리고 4) 현재 지원 정책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정책제언을 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및 해외 사례 등의 검토를 통한 중년층 개념 및 범주에 관해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의 대상 연령을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중년층은 45~64세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음으로 노동 생애 불안정 관련 선행연구 정리를 통해 노동 생애 불안정의 정의 및 측정방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노동 불안정의 결과로서 야기될 수 있는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며 이 연구의 기여점 및 본론의 분석 결과들을 해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년층의 특성을 대표성 있는 자료를 활용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중년이 특정한 여러 가지 성질을 나타내는 독특한 집단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성질은 모든 중년에게 일괄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즉 같은 연령의 중년이라도 다른 특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특히 청년, 노인에 비해 중년층은 집단 내 이질성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하나의 연령 집단을 중년으로 규정하여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중년층의 경제활동과 경제상태 실태를 청년 및 노년층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 이때 2종의 국가승인통계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중년층의 현 위치와 상태를 파악 및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정태적 분석에서 나아가 생애 과정에서의 노동 생애 불안정과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결과를 포착하기 위한 동태 분석을 한다. 제4장에서는 고용 불안정, 임금 불안정, 직업(숙련) 불안정으로 노동 생애 불안정성을 정의하고, 중년층의 노동 생애 불안정 양상을 살펴봤다. 분석 방법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를 사용하였다. 이때 출생 코호트 간 불안정 양상 변화도 함께 살펴봤다. 또한 중년층의 경우 성별에 따른 노동 양상, 노동을 중심으로 표면화되어 나타나는 불안정성에서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성별에 따른 분석을 수행하였다. 제5장에서는 노동 불안정성으로 발생 가능한 중장기 결과를 살펴봤다. 중년층의 노동 불안정을 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 후기 직업 상실(주된 일자리에서의 비자발적 실직)이 이후 취업상태 변화와 소득 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 자료와 직업력 자료를 활용한 Entropy Balancing in Difference-in-Difference 방법을 사용하였다. 5장에서도 모든 분석에서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봤다.

제6장에서는 일을 하는 중년층에게 지원 가능한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제3장, 제4장, 그리고 제5장에서 분석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현 지원 정책의 한계점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그리고 제7장에서는 앞에서 진행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늦은 퇴직을 장려하는 현 정책 방향하에서 이들의 사회적 격차를 유발하지 않으며(혹은 최소화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책 방향에 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때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한 전문가 자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중년층의 개념 및 범주
제2절 중년층 노동 생애 불안정과 소득 불안정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중년층의 개념 및 범주

한국 사회에서 '연령'은 성별과 함께 개인의 정체성(identity)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기도 하며, 개인의 생물학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이윤경, 2021). 청년 및 노년과 달리 중년의 정의 및 구분은 모호하다. 이는 그간 정책 수혜 및 복지자원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은 것이 원인일 수 있다. 최근 정책 대상 범주로 고려되며 '후기중년', '신중년', '중장년' 등 중년층 정의 및 범주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및 해외 사례 등의 검토를 통한 중년층의 개념 및 범주에 관해 정의하고자 한다.

생애주기별 인간 발달 단계에 따르면 중년은 청년과 노년 중간에 이른 나이대를 말한다. 그럼 청년과 노년의 연령 범위를 살펴보자. 「청년 기본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자체 및 다른 법령에 따르면 간혹 19세부터 39세, 19세부터 45세 등으로 청년의 정의에 차이가 있기도 한다. 지자체 중에서 청년 인구가 감소한 곳은 청년의 나이를 40대까지로 보는 경우도 있다. 국내에서 노년 나이 기준은 65세 이상으로 분류하며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나이로 보는 경우가 다수이다. 「노인복지법」에서는 지원 대상이 되는 노인의 자격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중년을 구분할 때, 과거에는 35세 이후부터 중년으로 보았으나, 결혼하는 나이가 점차 늦춰지며 최근에는 40대 이상부터 중년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중년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져 왔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40대를 중년으로 설명하여 왔으나 변화한 사회상을 반영하여 50대를 포함한다고 설명을 바꾸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마흔 살 안팎의 나이, 또는 그 나이의 사람. 청년과 노년의 중간을 이르며, 50대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청년과 노년의 중간층에 해당하는 중년은, 말 그대로 그의 인생 중간으로 평균 수명 70~80세 시절 40대가 중년이었다면, 100세 시대인 요즘은 50대 전후로 볼 수도 있다. e나라도움 생애주기별 연령 구분은 청년(19~29세), 중년(30~49세), 장년(50~64세), 노년(65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연구들 중 많은 연구들이 중년을 4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년 시작 연령은 45세 이상으로 보는 연구가 다수 존재했다.

해외에서는 중년을 나이 기준으로 45~65세 즈음으로 본다. 중년은 젊은 성인기를 넘어 노년기에 접어들기 전의 기간으로 정확한 범위는 학문적 논쟁의 대상이나 일반적으로 40~45세에서 약 60~65세까지의 연령 범위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 있다(Oxford dictionaries, 2016; Collins Dictionary, 2012). Britannica는 중년(middle age)은 노년기의 시작 직전에 있는 인간의 성인기로 중년을 정의하는 나이는 다소 임의적이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40~60세로 정의하고 있다(Britannica, 2022). UN의 세계 인구 건강 기준과 평균수명을 측정하여 분류한 연령층 분류에서는 유아기 0~4세, 아동(children) 0~12세, 청소년(youth) 13~19세, 성인(adults) 19~59세, 청년(young adults) 20~24세, 중년(middle age) 45~64세, 노인(senior adult, retire-

ment) 60세 이상이다. 일본은 “고연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고(高)연령자를 55세 이상인 사람, 중고(中高)연령자를 4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중고연령 실업자를 45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여 정책 대상별 특성에 따라 각각의 연령 기준을 정하고 있다(윤석명 외, 2011, p. 139).

중년층의 구분은 청년기와 노년기 사이의 과도기로 특징 지어질 뿐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신체적 특성으로는 신체적·생물학적 노화가 시작되는 단계로, 최근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추세로 발달심리학에서는 중년기를 40~60대 초반으로 본다. 사회적 변화 측면에서는 가족구조의 변화로 노부모와 성장한 자녀의 중간에 위치하는 ‘끼인 세대’로 노인의 부양과 독립이 불안정하여진 청년의 경제적 부양 등으로 부담 수준이 높고 반면 경제적 활동의 지속 가능성이 낮은 집단이다. 경제활동 및 사회적 관계의 위축이 시작되는 시기로도 정의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45세 즈음의 높은 소득을 정점으로 소득은 낮아지면서 각종 생활의 부담은 높아지는 생애주기라는 특징을 지닌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그만둔 연령은 53세에서 약 10년 사이 49.3세로 낮아졌다(통계청, 2023d).

이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즉 중년(중장년)을 45~64세로 정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연령 구분이 필요할 경우 45~54세를 전기중년, 55~64세를 후기중년으로 정의하였다.

제2절 중년층의 노동 생애 불안정과 소득 불안정

1. 중년층의 노동 불안정 관련 기존 연구 흐름

2010년 이후부터 베이비부머, 신중년의 현황에 대한 분석이 주로 이뤄졌으며 최근에는 단일 이벤트에서 나아가 중년층의 생애 과정 단계 동안의 노동 불안정성에 대한 동태적 연구들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년층의 생애 과정 단계 동안의 노동 불안정성에 대한 누적 영향에 대한 연구 즉 동태적 연구들은 많지 않으며, 이와 연계된 노동 행태 변화,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른 장기 위험 등 정책적 기초자료로서의 체계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기존에는 실직, 고용형태 변화 등과 관련해 대부분의 연구는 핵심 근로연령층(prime age workers)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후기중년, 즉 본 연구에서의 연구 대상인 45~64세인 늦은 중년층의 경우 실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 불안정 양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젊은 연령에서의 노동 불안정성과 다를 수 있다. 이들은 재취업에 대해서도 연령 차별적 고정관념, 기술 노후화 또는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여러 장벽에 직면해 있다(Ebbinghaus & Radl, 2015). 최근 해외 연구에서는 고령화, 재정적 부담 등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중년층의 노동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들의 노동이력, 불안정 정도, 소득과의 관계 등에 대한 동태적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2-1〉 관련 선행연구의 흐름

구 분		중년층, 노동 불안정 관련 선행연구	
		연구 목적	주요 연구 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금재호 외(2013) • 베이비부머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양상을 전망하고, 이에 대응한 정부정책 방향 제시	• 베이비붐세대 은퇴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중년층 경제활동 제고를 위한 소득세 제도 개편 방향, 중년층 여가문화 분석을 통한 여가문화 정책 개선방안 제안
	2	• 정경희 외(2011) • 베이비부머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실태 파악을 통한 발전 방향 모색	•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 파악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한 활용방안 모색
	3	• 황남희 외(2019) •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 신중년의 건강, 경제상태, 경제활동, 사회참여, 부양, 노후 가치관 및 부양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 개선 방향 제시
	4	• 백승호(2014) • 노동의 불안정성을 고용과 소득, 사회적 임금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노동의 불안정성을 분석	• 노동의 불안정성을 고용과 소득, 사회적 임금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노동의 불안정성 분석을 통해 사회 시스템에서 구조적으로 배제 되고 있는 유형에 대한 고찰
	5	• 김영아, Bonneuil(2019) • 주관적으로 인지한 고용 상실 위험과 고용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바탕으로 임금근로자의 불안정성을 동태적으로 분석	• 주관적으로 인지한 고용 상실 위험과 고용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바탕으로 임금근로자의 불안정성을 동태적으로 분석
	6	• 김수영, 오혜인(2020) • 기존 불안정 노동 담론의 확장으로 경제적, 존재적, 관계적 가치 차원으로 다양화하여 노동 불안정 측정	• 자발적 비정형 노동자의 질적 면담을 통해 노동의 불안과 안정을 정의함에 있어 경제적 기준과 더불어 존재적, 관계적 가치를 포함한 다차원적 기준에서의 정의
	7	• 윤하림, 홍백의(2020) • 중장년층 노동 생애 불안정이 증가하고 있는지, 보편화되고 있는지 분석	• 1939~1948년 출생한 산업화 세대와 1949~1958년 출생한 베이비부머 세대, 두 코호트의 남성을 대상으로 노동 생애 불안정 변화 분석 • 노동 생애 불안정성은 종사상지위(미취업, 비정규직 여부, 자영업 여부)와 저소득(월평균 소득이 당해 월 중위 임금의 2/3 미만) 여부 조합을 통한 점수화
	8	• 이승호, 변금선, 고혜진(2019) • 고령기 전후의 노동경력 특성을 비교하여, 근로 생애와 고령기 노동궤적 간 관계 규명	• 고령기 전후의 노동경력 특성을 비교하여, 근로 생애와 고령기 노동궤적 간 관계 규명
	9	• 김태완 외(2022) 근로연령층 사회보장 현황과 복지-고용서비스 연계 방안 • 근로연령층 대상 복지 및 고용보장 서비스, 사각지대 현황 및 한계 분석	• 근로연령층이 경험하고 있는 사각지대, 복지 및 고용보장 서비스 등의 현황 및 한계를 분석하고 근로연령층 대상 복지 및 고용보장의 연계 방안을 제시

구 분		중년층, 노동 불안정 관련 선행연구	
		연구 목적	주요 연구 내용
	10	• 김은경, 김경희(2022) • 여성 노동의 불안정성 규모와 깊이 분석	• 젠더 관점에서 불안정 노동을 재개념화, 여성 노동의 불안정성 규모와 깊이를 분석
	11	• Heisig & Radl(2017) • 후기중년의 실직(job loss)이 은퇴 행동과 개인 소득에 미치는 장기 효과	• 후기중년의 실직(job loss)이 은퇴 행동과 개인 소득에 미치는 장기 효과를 살펴봄 • 독일 GSOEP 패널 자료 활용, 50~64세의 실직을 경험한 사람의 최대 10년 동안의 고용 변화와 개인 소득수준 변화를 DID 모형 활용해서 살펴봄
	12	• Zabel(2022) • 연령에 따른 취업 장애가 복리후생 불이익을 가중시킴에 따라 중년 복지급여 수급자의 장기 취업궤적을 살펴봄	• 연령에 따른 취업 장애가 복리후생 불이익을 가중시킴에 따라 중년 복지급여 수급자의 장기 취업궤적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 이에 독일 중년 45~54세를 대상으로 Sequence analysis 활용해 이들의 19년 동안의 고용 이력을 살펴봄
	13	• Riekhoff(2022) • 근로 생애 안정성(career stability, employment security)과 소득 이동성(income mobility) 간의 관계 크기와 방향 분석	• 종단 자료 활용, 1940~1980년 사이 태어난 코호트 분석을 통해 경력 안정성과 소득 상태 관계 분석 • 근로 생애 안정성은 미취업 상태의 누적, 현 직장에서의 근속기간, 누적된 이직 횟수 • 위 세 가지 근로 생애 안정성 지표와 소득과의 관계 분석
	14	• Barbieri & Filippo(2022) • 고용 변동성(employment volatility)과 소득 변동성(income volatility)과의 관계 분석	• 제도적 특성이 다른 영국과 독일의 종단 자료 활용, 코호트 분석(prime age: 30~50)을 통한 고용 변동성(employment volatility)과 소득 변동성(income volatility)과의 관계 분석

2. 노동 불안정성 지표 관련 기존 연구

중년층의 노동 생애 불안정성은 노동 불안정 발생 자체뿐 아니라 소득, 부, 나아가 건강 및 삶의 질과 같은 개인과 가족의 다양한 차원의 불안정과 관계를 가짐에 따라, 어떤 차원의 노동 불안정성에 주목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중년기는 일을 중심으로 다양한 차원의 불안정성이 내재해 있는 생애 단계이다. 노동 불안정성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노동 불안정성은 대체로 고용 지위의 불안정성과 소득의 불안정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는데, 두 가지 측면에 기반한 지표의 구성 방식은 가용한 자료 및 변수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해외 연구를 살펴보면, Vosko(2011)는 전일제 및 시간제의 고용형태, 임금 적정성, 사회보장 혜택 등에 주목하여 고용 불확실성, 소득 불안정성, 사회보장 혜택의 제한, 법적 권리 부재를 노동의 불안정성으로 정의한다.

Riekhoff(2022)는 미취업 상태의 누적(cumulative time in non-employment), 현 직장에서의 근속기간(tenure with the current employer), 누적된 이직 횟수(cumulative job changes)를 활용해 고용 안정성(career stability) 지표로 설정했다.

Barbieri and Filippo(2022)는 1) 현재 경제활동 상태(고용, 실직, 교육, 육아휴직, 비경제활동), 종사상지위(임금근로, 비임금근로), 임금근로의 경우 정규직 여부와 풀타임 여부를 활용해 불안정성 지수를 만든 Ritschard, Bussi, & O'Reilly(2018)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2) 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ISEI) 활용 직업 수준(Ganzeboon, 2010)에 따른 추가 분류 활용, 3) 개인의 직업적 위치가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음에 따라 첫 번째 관측 가능한 연도에서 European Socio-Economic Class(ESEC)(Rose & Harrison, 2007)를 활용해 내생성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 불안정성 지표 설정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상황을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 설정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해외 연구를 참고하되, 노동 불안정성 지표 관련 최근 국내 연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김수영, 오혜인(2020)은 노동 불안정성의 논리에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고자 경제적(소득수준, 고용상태 등), 존재적(성취감, 자아실현, 만족감 등), 관계적(자율성, 사람 관계 등) 측면으로 확장하고 노동의 불안정성에 대해 고찰한다.

윤하림, 홍백의(2020)에서는 단일 시점별 노동 안정성 지표를 구성한 후, 45~59세 남자 장년층이 해당 연령에서 경험한 일자리 개수, 비자발적 퇴직 사유의 비중 등의 누적 변수도 함께 구성하여 중·장년층의 노동 생애 불안정성이 보편화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단일 연도별로 구성한 노동 안정성 점수는 고용형태와 소득을 기준으로 5가지의 범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표 2-2〉와 같다. 고용 형태(지위) 측면에서는 비정규직과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불안정한 것으로 보았고, 정규직 및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안정한 것으로 구분하였다. 소득수준은 월평균 임금과 소득을 활용하여, 전체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경우를 저임금으로 보고 불안정한 것으로 구분하였으며, 저임금 수준 이상은 상대적으로 안정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두 차원의 지표를 하나의 지표로 재구성하여 전체 5개의 노동 안정성 상태로 분류하였고, 정규직 및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이면서 임금수준이 저임금 이상인 경우를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 구분하였다.

〈표 2-2〉 선행연구의 노동 안정성 지표 예: 윤하림·홍백의(2020)

노동 안정성 점수	구성
미취업(0)	미취업 상태
매우 낮음(1)	① 월평균 임금과 소득이 당해 월 중위 임금의 2/3 미만이면서 동시에 비정규직이거나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경우, 혹은 ②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노동 안정성 점수	구성
낮음(2)	월평균 임금과 소득이 당해 월 중위 임금의 2/3 미만이면서 동시에 정규직이거나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인 경우
보통(3)	월평균 임금과 소득이 당해 월 중위 임금의 2/3 이상이면서 동시에 비정규직이거나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경우
높음(4)	월평균 임금과 소득이 당해 월 중위 임금의 2/3 이상이면서 동시에 정규직이거나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인 경우

자료: 윤하림, 홍백의. (2020). 한국 중·장년층 남성의 노동 생애 불안정은 보편화되고 있는가? - 세대 및 학력 간 노동궤적 비교를 중심으로. p. 41.

전예지(2022)에서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불안정 노동이 성별에 따라 분절적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는데, '불안정 노동'을 고용(종사상지위)과 소득 두 가지 측면에서의 지표로 구성하였다. 여기서는 '불안정 노동'을 '불확실성이 높은 노동'으로 정의하고, 불안정 노동의 하위 요소로 고용 불안정과 소득 불안정을 고려하였다. 고용 불안정은 계약기간과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상용직을 제외한 임시직, 일용직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는 고용이 불안정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소득 불안정은 윤하림, 홍백의(2020)와 유사하게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ffice, ILO)의 저임금 기준을 적용하였는데, 다른 점은 동 연구에서는 시간당 임금을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즉, 시간당 임금이 전체 근로자 중위 시간당 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경우 저임금으로 소득이 불안정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의 총소득을 시간당 소득으로 환산하여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활용하였다. 고용과 소득 하위 요소에서 각각 불안정과 안정 상태를 측정한 후, 이를 조합하여 불안정 노동 지표를 〈표 2-3〉과 같이 재분류하였다. 이에 따르면, 종사상지위가 상용직이고 시간당 임금이 저임금 이상인 경우 불안정하지 않은 것으로 측정되며, 상용직 이외의 종사상지위를 가지며 시간당 임금이 저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는 매우 불안정한 노동상태로 측정된다.

〈표 2-3〉 선행연구의 불안정 노동 지표 예: 전예지(2022)

불안정 정도	구성
매우 불안정함	고용과 소득이 모두 불안정한 경우
불안정함	고용과 소득 중 하나가 불안정한 경우
불안정하지 않음	고용과 소득 모두 안정한 경우

자료: 전예지. (2022). 중·고령자가 경험하는 불안정 노동은 성별에 따라 분절적으로 나타나는가?. p. 80.

강지영, 함선유, 윤하림(2022)에서는 자본주의 모델과 불안정 노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독일, 한국의 대표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30~35세 이상의 표본에 대해 18년간의 노동시장 경험 궤적을 추적하였는데, 앞에서 언급한 두 선행연구와는 달리 여러 측면에서 측정한 불안정성 지표를 하나의 통합된 지표로 구성하지 않았다. 동 연구에서는 '불안정한 노동자'를 4가지 측면에서 측정하였는데, 종사상지위로 측정되는 고용 지위, 직업 숙련도로 측정되는 직업 지위, 소득 분위별로 측정한 소득수준, 사회보험 적용을 측정한 사회적 보호 수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이 0인 경우와 1~4분위를 구분하였는데, 임금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임금액을, 비임금근로자는 월평균 소득을 활용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다중배열분석 방법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와는 달리 4가지 측면에서 측정한 불안정성 지표를 하나의 통합된 지표로 재구성하지는 않았으며, 다차원적 지표에 기반하여 노동궤적을 유형화하였다. 고용 지위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종사상지위를 기반으로 측정하였는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구분하였으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도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2-4〉 선행연구의 불안정 노동 지표 예: 강지영·함선유·윤하림(2022)

		독일	미국	한국
직업 지위	0	일하지 않음		
	1	저숙련		
	2	중숙련		
	3	고숙련-전문직		
사회적 보호	0	미고용	직장 제공 건강보험	국민연금 미가입
	1	자영업	민간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2	미니잡 아님	공공건강보험	
	3	미니잡	보험 없음	
소득	0	소득이 0인 경우		
	1	1분위		
	2	2분위		
	3	3분위		
	4	4분위		
고용 지위	0	전일제		상용직
	1	시간제		임시/일용직
	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	실업		
	5	비경제활동		
	6			무급가족종사자

자료: 강지영, 함선유, 윤하림. (2022). 자본주의모델과 불안정 노동: 생애일자리 관점에서 본 미국, 독일, 한국의 비교. p. 65. 〈표 2〉에서 일부 인용

선행연구에서 고용 불안정성은 주로 고용 지위의 불안정성으로 측정되고 있는데, 〈표 2-4〉의 고용 지위는 앞의 〈표 2-2〉나 〈표 2-3〉에 비해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다. 민현주, 이수경(2018)에서는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지위 변화를 유형화하여 살펴보기 위해, 경제활동 상태를 5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하나로 분류하였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도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그 외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상용직,

임시직·일용직으로 구분하였다. 추가로 종사상지위 변화를 추적하여 50~71세의 남성 중고령 근로자의 은퇴 과정을 분석한 강세미(2022)에서도 종사상지위는 민현주, 이수경(2018)에서와 유사하게 구성되었다. 즉, 무직자(=0), 무급가족종사자(=1), 자영업자 및 고용주(=2), 임시직·일용직(=3), 상용직(=4)으로 분류하여 서열변수로 간주하고 집단중심 추세모형을 적용하였다.

한편, 박나리, 김교성(2021)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불안정성' 그 자체에 더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불안정성을 측정하여 집단중심 다중추세분석(Group-based Multi- trajector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불안정성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들로 고용, 소득, 부채 세 가지를 고려하였다. 고용 불안정성의 경우, 선행연구를 차용하여 경제활동 상태와 종사상지위를 이용하여 불안정성을 측정하였는데, 청년의 경우 학업이라는 특수성이 있기에 이로 인한 비경제활동 상태는 별도로 구분하였다. 부채 불안정성의 경우, 청년층이 노동시장으로 이행하기 이전부터 학자금 대출 등으로 부채를 가지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기 위해 불안정성의 한 측면으로 고려되었다. 마지막으로, 소득 불안정성의 경우,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자체가 늦어짐에 따라 부모의 사적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기간 또한 길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총소득 차원에서 소득수준을 분류하였다. 분류 기준으로는 ILO 기준에 따른 저임금(표본 중위 임금의 2/3)과 최저임금, 그리고 생활임금을 고려하여 소득 불안정성을 측정하였다. 여기서 생활임금은 각 지자체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해당 지자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이다.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하는 사회적 개념으로, 법률에 근거한 최저임금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다. 생활

임금제도가 지자체별 조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법적 최저임금의 20% 내외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다.

〈표 2-5〉 선행연구의 불안정성 지표 예: 박나리·김교성(2021)

불안정성	속성
고용 불안정성	0. 상용직 임금근로 1. 일용-임시직 임금근로 2. 비임금근로 3. 실업자 및 준실업자 4. 비경활-학생 5. 순수 비경활
소득 불안정성	0. 안정(생활임금 이상인 경우) 1. 다소 불안정(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2. 불안정(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3. 매우 불안정(전체 표본 중위 임금의 2/3 이하인 경우)
부채 불안정성	0. 부채 없음 1. 부채 있음

자료: 박나리, 김교성. (2021). 청년 불안정성의 궤적과 유형: 20대 청년의 고용, 소득, 부채를 중심으로. p. 57.

김은경, 김경희(2022)는 고용(비정규), 소득(최저임금 수준), 노동시간(주 52시간 초과 장시간,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 사회적 보호(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 일자리 차별(임금, 교육 및 훈련 기회, 승진 및 승급, 업무배치에서의 차별 문항 관련 활용)이라는 5개 차원에서의 불안정한 상태로 노동 불안정성을 개념화하였다. 기존의 남성 중심의 노동 불안정성 개념에서 나아가 여성 노동의 성차별적 관행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3. 노동과 연계된 중년층 소득 불안정 관련 기존 연구

40대와 50대는 젊은 근로자보다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고정관념, 스킬 노후화, 건강 문제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Ebbinghaus & Radl, 2015). 그 결과 장기간의 실업 또는 불완전 고용, 조기퇴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공적 연금, 퇴직 연금의 감소를 야기하며 개인의 재정적 및 심리적 안녕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Chan & Stevens, 2004). 그뿐만 아니라 실직은 이를 경험한 근로자(Noelke & Beckfield, 2014)와 심지어 그 가족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rand & Simon Thomas, 2014). 또한 후기 중년은 사회 통념상 재취업보다는 (조기)퇴직을 선택할 수도 있다. 실업자라는 역할과 달리 은퇴자의 역할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노동시장에서의 조기 이탈은 공적 연금뿐 아니라 퇴직금 및 퇴직 연금 감소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력 후반기의 실직은 점점 더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살펴보고자 Heisig and Radl(2017)은 후기중년의 실직(job loss)이 은퇴 행동과 개인 소득에 미치는 장기 효과를 살펴봤다. 독일 German Socio-Economic Panel(GSOEP)의 자료를 활용하여, 50~64세의 실직을 경험한 사람의 최대 10년 동안의 고용 변화와 개인 소득수준(earnings, retirement benefits, other public and private transfers) 변화를 DID 모형을 활용해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실직 위험은 남성과 여성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에 따라 강력하게 계층화되어 나타남을 확인했다. 실직은 이후 고용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많은 고령 근로자가 이직 후 영구적으로 직장을 그만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연구는 후기 경력 실직(late career job loss)의 재정적 영향(누적 손실)이 심각하며 오래 지속됨을 관측했다. 57~64세에 실직한 근로자보다 50~56세에 실직한 근로자의 장기 손실이 더욱 크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은 근로자는 실직 위험은 낮지만, 실직을 경험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서 더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독일의 경우 중년(후기중년)의 직업 상실 경험이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직업 상실 경험 여부가 경제적 격차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후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면서 그 격차가 줄어들었다.

과연 한국의 상황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일까? 인구 고령화와 재정적 압박에 직면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늦은 퇴직을 장려하기 위해 연금 정책과 기타 사회 프로그램을 개혁했다(OECD, 2015). 이러한 개혁 중 상당수는 조기 퇴직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실직한 후기중년 근로자가 어떤 조건하에서 조기 퇴직을 피하고 노년에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중요하다. 만약 한국의 경우 노동 불안정성이 더 높다면? 이럴 경우 실직, 즉 노동 생애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중년은 어떤 조건하에서 조기 퇴직을 피하고 노년에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중년층의 노동 생애 불안정 양상과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서 은퇴 행동 및 소득 감소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결과를 잘 살펴보고 분석하여 정리하는 것은 위의 질문에 답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지 않으며 늦은 퇴직을 장려하는 정책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단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제3장

중년층의 경제활동 및 경제상태 실태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중년층의 경제활동 실태
제3절 중년층의 경제상태 실태
제4절 소결

제 3 장 중년층의 경제활동 및 경제상태 실태

제1절 분석 개요

1. 분석 목적

본 장에서는 중년층의 경제활동 실태와 경제상태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선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령을 기준(45~64세)으로 중년층을 정의하되, 분석에 따라서는 이를 전기중년(46~54세)과 후기중년(55~64세)으로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의 특성을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고자 하는데 중년 이전의 연령인 15~44세를 본 연구에서는 '청·장년층'으로, 중년 이후인 65세 이상을 '은퇴연령층'으로 간주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연령'은 성별과 함께 개인의 정체성(identity)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기도 하며, 개인의 생물학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이윤경, 2021).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연령대에 따른 경제활동 실태 및 경제상태 실태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2. 분석 방법

분석은 2종의 국가승인통계(「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진행하였다. 해당 통계자료를 통해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및 실업자 수, 취업률 및 실업률 등과 함께 가구주의 취업 여부, 산업이나 종

사상지위 등에 따른 소득이나 소비, 자산과 부채 등의 경제상태도 살펴보았다.

가. 중년층의 경제활동 실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연령대별로 경제활동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조사로, 1962년 8월 이후 매월 생산되고 있다. 대한민국에 상주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모든 사람을 목표 모집단으로 삼고 있으며, 2023년 기준 1,791개 조사구(조사구당 평균 20가구) 전국 약 36,000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통계청, 2023a).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조사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경제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조사라 할 수 있는데 성별, 연령, 교육 정도 등 개인의 인적 사항과 함께 취업자에 대해서는 근로 여부, 종사상지위, 산업, 직업, 종사자 규모 등 일에 관한 사항을, 비취업자에 대해서는 구직활동 여부, 취업 가능성 등 구직에 관한 사항을 묻고 있다. 이에 비추어볼 때 연령대별 경제활동을 살펴보는 데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경제활동인구조사(연간조사)」 자료를 이용해 중년층을 비롯해 연령대별로 경제활동 실태를 분석하였다.[2)]

---

2) 경제활동 실태를 분석하면서 이들의 소득수준은 분석하지 못했는데,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8월 부가조사를 통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으나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묻고 있지 않는다.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함께 살핀 대규모의 조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국노동패널」을 비롯해 각종 패널조사의 경우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소득이 조사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

연령대에 대한 구분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① 15~44세(청·장년층), ② 45~54세(전기중년층), ③ 55~64세(후기중년층), ④ 65세 이상(은퇴연령층)"으로 구분하였으며, 구분된 연령대별로 각각의 인구수, 경제활동인구(참가율) 규모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중년층의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3)]

나. 중년층의 경제상태 실태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중년층의 경제활동 실태를 살펴보았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자산, 부채, 소득 등의 규모, 구성 및 분포와 미시적 재무 건전성과 소득분배 지표를 파악하여 사회경제 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제1회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부터 매년 조사가 시행되고 있다(통계청, 2023b, p. 3). 앞의 중년층의 경제활동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2017년부터 2022년 자료를 이용해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소득과 소비에 대한 질문은 조사 실시 전년도를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소득과 소비에 대한 분석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가 된다. 반면 자산과 부채(순자산 포함) 등에 대한 질문은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 조사 규모가 크지 않아 본 연구에서 살피고자 한 연령대별 경제활동이나 경제상태의 추이나 동향을 살펴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해 중년층을 비롯한 연령대별 경제활동 실태를 살피고, 제3절에서는 가구주를 기준으로 연령대별 경제상태를 분석해 보았다.

3)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수준을 비롯해 일자리의 특성이나 질을 나타내는 다양한 특성들은 도외시하고 단순히 연령대별 인구 비중이나 취업자 중 비중 등을 통해 중년층의 경제활동 실태를 살펴보는 방식에는 분명히 많은 한계점이 있다. 다만 연령(대)와 함께 개인의 (근로)소득이나 일자리 특성 등을 동시에 살핀 대규모의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아(특히, 비임금근로자), 본 연구에서는 연령대별 인구 비중이나 취업자 중 비중 등을 통해 중년층의 경제활동 실태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절에서의 소득과 소비에 관한 분석은 실제 소득이 해당되는 연도(2017~2022년)를 기준으로 제시하였고, 자산과 부채에 대한 분석은 조사가 진행된 연도(2017~2022년)를 기준으로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소득과 소비액, 자산과 부채 등 금액과 관련한 수치는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에 따라 같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구매력 등에서 시기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차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점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자 소비자 물가지수(2020년=100)로 실질화한 금액을 바탕으로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대표성이 있는 대규모의 통계자료 가운데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등)를 포함한 개인별 근로소득이 집계되는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아[4] 가구(주)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임금근로자를 비롯해 비임금근로자의 소득까지 함께 조사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해 이아영, 황남희, 양준석, 안영(2019)에서와 같이 이들의 연도별로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해 살펴봤다.

4) 물론 KLIPS 등 다양한 패널조사를 비롯해 개인의 삶을 살필 수 있는 다수의 통계 자료들에서 종사상지위, 연령, (개인의) 소득수준 등을 묻고 있으나 이 같은 자료의 경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대규모 실태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에 비해 적은 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추적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서 다양한 특성 집단별로 소득, 자산, 부채 등을 살펴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대규모의 통계자료를 대상으로 연령대별 경제활동 및 경제상태 실태를 분석해보았는데 (한국 사회에서 취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관련해 개인별로 소득이 제시된 자료는 존재하지 않아 가구(주)를 바탕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구원의 직업, 소득 등이 다양할 수는 있지만, 가구주가 가구의 경제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여느 가구원에 비해 대표성을 높게 가질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가구를 단위로 분석하되, 본 연구에서 구분한 가구주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소득이나 재무 상황(자산, 부채)를 살펴보았다.

제2절 중년층의 경제활동 실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해 연령대별 인구 규모, 경제활동인구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중년층의 위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소득수준이나 일자리의 질 등은 고려하지 못한 단순한 비교이지만 그와 같은 측면을 함께 담은 조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간접적 분석도 노동시장에서 중년층의 특성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1. 인구 규모로 살펴본 중년층

15세 이상 인구 중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취업을 하기 위하여 구직활동 중인 사람으로 정의되는 '경제활동인구'에 맞추어 여기서는 15세 이상 가운데 연령대별 인구의 규모와 비중[5]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령대별 인구 규모나 비중 등은 후술할 연령대별 경제활동 상태에서 해당 연령대의 인구가 많고 적음을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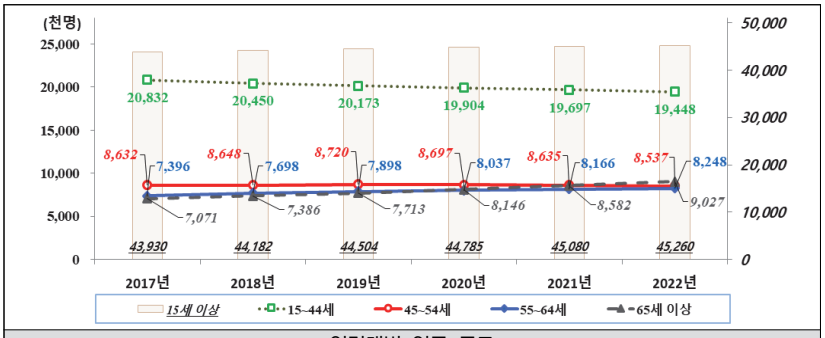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구분한 4가지 연령대별 인구 규모의 추이는 〔그림 3-1〕과 같다. 전기중년층(45~54세)의 경우 2019년까지는 약간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7년 8,632천 명에서 2018년 8,648천 명, 2019년 8,720천 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20년에는 8,697천 명으로 나타나며, 2019년에 비해 23천 명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에

5) 인구의 규모를 더 정확히 살피기 위해서는 인구에 대한 정보 획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사자료(예컨대 「인구총조사」, 「주민등록인구」 등)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렇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인구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본추출 및 가중치 부여 과정이 이루어져 인구구성을 살핌에 있어 상당한 왜곡의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해 각 응답자에 대해 부여된 가중치를 활용해 인구구성 등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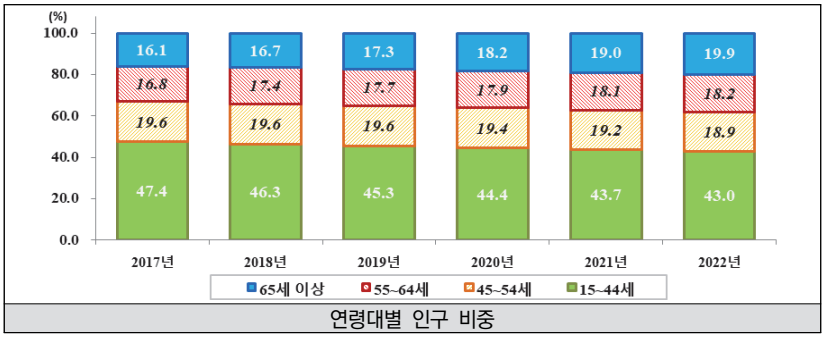
도 해당 연령대의 인구는 감소해 2021년과 2022년 각각 8,635천 명과 8,537천 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어 후기중년층(55~64세) 인구 규모를 살펴보면, 분석 대상 기간에 꾸준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살펴보면, 2017년 7,396천 명에서 2018년에 7,698천 명으로 302천 명 늘었으며, 2022년에는 8,248천 명으로 2017년에 비해 852천 명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매년 1.63%씩 후기중년층 인구가 증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연령대별로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 사회의 고령화 양상을 반영하듯 15세 이상 인구 중 15~44세 및 45~5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조금씩 낮아졌으며, 55~64세 또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듯 15~44세 인구는 감소하였으며, 중·고령층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 연령대별 인구 규모

(단위: 천 명, %)



연령대별 인구 규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2017년~2022년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함.

2. 경제활동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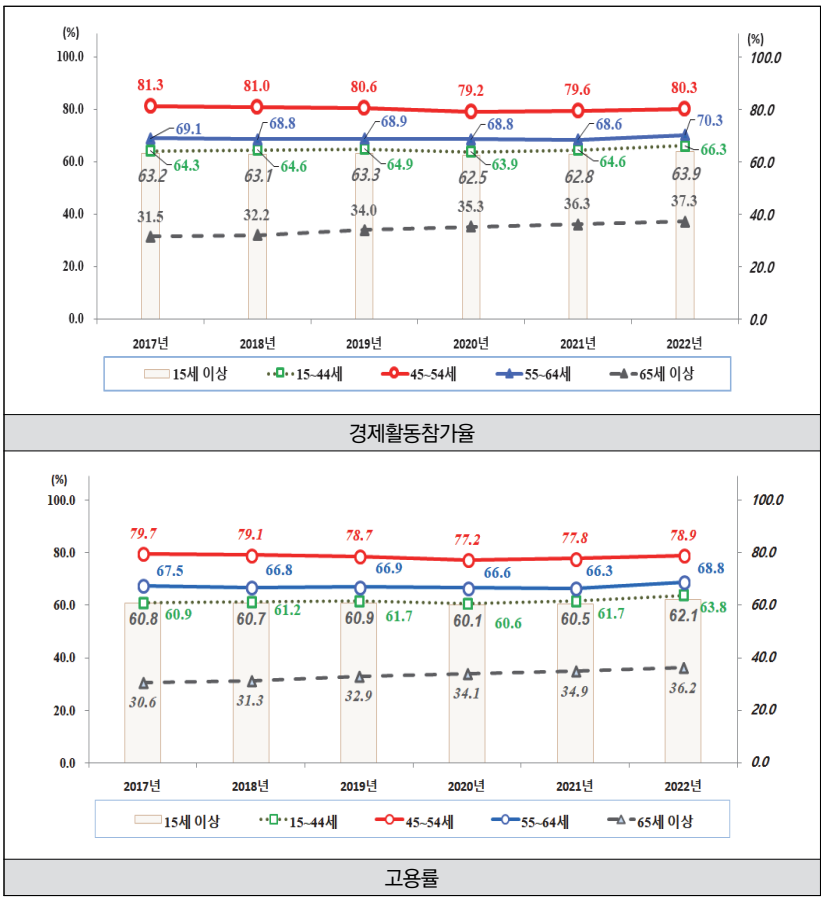
노동시장 상황을 이야기하는 데 널리 쓰이는 몇 가지 지표인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의 추이를 통해 연령대별 경제활동 실태를 살펴보았다.

먼저,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7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3.2%였으며,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63.1%와 63.3% 수준을 유지하다가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된 2020년에는 62.5%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후 2021년에는 62.8% 수준으로 약간 높아진 후 2022년에는 그보다 더 높아진 63.9%로 집계되었다. 중년층, 그 가운데 전기중년층(45~5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이들이 여느 집단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분석 기간에 80% 내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나타내었다. 후기중년층(55~64세)의 경우 전기중년층(45~54세)에 비해서는 낮은 70% 안팎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하였는데, 2017년 69.1%, 2019년에는 68.9%로 분석되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68.8%와 68.6%로 하락한 후 2022년에는 70.3%로 이전에 비해 약간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전기중년층 및 후기

중년층 모두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2017년~2022년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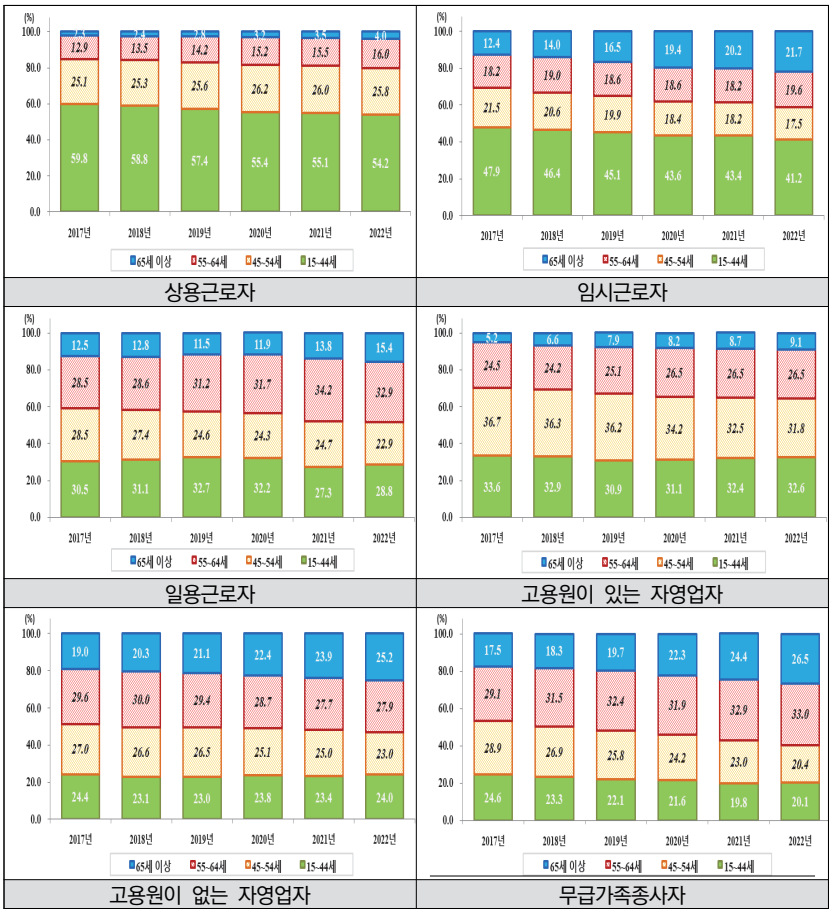
종사상지위 또한 일자리의 특성이나 질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이에 여기서는 취업자를 연령대별로 나누어 종사상지위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전기중년층(45~54세)에 속하는 상용근로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7년 25.1%에서 2020년 26.2%에 이르기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1년에는 26.0%로 소폭 감소하였고, 2022년에도 약간 더 낮아진 25.8%로 나타났다. 이어서 후기중년층(55~64세)에 속하는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2017년 12.9%에서 2020년 15.2%까지 높아졌으며, 2022년에는 전체 상용근로자 가운데 55~64세에 속하는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16.0%에 달했다. 임시근로자(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와 일용근로자(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자 등)의 연령대별 비중을 살펴보면, 15~44세의 경우 비중이 줄어든 반면, 후기중년과 65세 이상의 비중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후기중년인 55~64세 일용근로자 비중은 2017년 28.5%에서 2022년 32.9% 수준까지 증가하여,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자영업자, 그 가운데서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연령대별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가운데 1/3 안팎은 15~44세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차지하고 있었으며, 중년층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60% 내외로 나타났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중 후기중년층(55~64세)의 경우 2022년 기준 2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무급가족종사자에 속한 비율 또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하면, 중년층 인구 규모를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28,922천 명 가운데 전기중년층은 6,854천 명으로 경제활동인구 중 23.7%를 차지하고, 후기중년층 경제활동인구는 5,802천 명으로 20.1%를 차지하였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18.9%와

18.2%)해 보았을 때 전기중년층 및 후기중년층 모두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종사상 지위를 통해 살펴본 일자리 질에서는 중년층, 특히 후기중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동 불안정성이 높은 일용근로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에 속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3〕 연령대×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비중 추이(2012~2022)

(단위: %)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2017년~2022년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함.

제3절 중년층의 경제상태 실태

1. 가구주의 연령대별 가구소득[6)]

소득은 가구별로 가구원 수는 물론 근로 가구원 수, 미성년 가구원 수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소득액만으로 가구나 집단별로 온전히 비교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가구 규모 등에 따른 구조적 차이의 가능성을 줄이고, 가구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구 균등화 소득[7)]을 통해 비교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염두에 두고 여기서는 소비자 물가지수(2020년=100)를 통해 실질화한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 균등화 소득을 살펴보았다.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가구의 균등화 소득을 살펴본 결과,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6년 3,333만 원, 2018년 3,478만 원, 2020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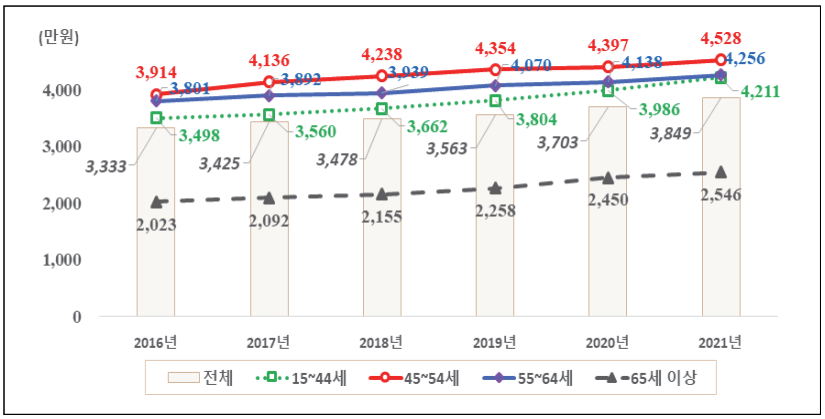
6) 소득은 발생 원천이나 발생 주기, 예측 가능성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도 가구의 소득을 하나의 문항으로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으로 나누어 묻고 있는데 이를 종합하여 '경상소득'과 '처분가능소득'으로 집계하여 원자료에 함께 제공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경상소득'은 가구에서 한 해 동안 경상적(정기적, 규칙적, 예측 가능한)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일시적 또는 우연히 발생하는 비경상소득(복권, 경조금 등)은 제외된다(통계청, 2022). 즉 가구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근로소득, 자영사업으로부터의 사업소득, 자산으로부터 이자, 배당금 등의 재산소득, 정부, 타 가구, 비영리단체 등으로부터 이전되는 이전소득 등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이야기하는데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비교·분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편,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에서는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공적 이전소득 - 공적 이전지출)' 또한 사후적으로 산식에 따라 가구별로 계산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소비의 관점에서 보면 처분가능소득을 살피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다만 본 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개별 가구의 세부적인 소득이나 소비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경향성 등을 살피기 위함이 목적인 만큼 공적 이전지출액까지도 포함하여 계상되는 가구소득인 가구의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보고서에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도 경향성이나 집단별 차이 등은 거의 동일함을 확인한 바 있다.

7) 균등화 처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곱근지수 방법을 사용한다. OECD 제곱근지수는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 개인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며, 소득분배 지표 등은 균등화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작성된다(통계청, 2023c).

3,703만 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1년에는 3,849만 원이었다. 이를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구분한 4가지 연령대 모두 매년 증가세를 기록한 가운데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했을 때 '65세 이상 〈 15~44세 〈 55~64세 〈 45~54세'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1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구주 연령이 15~44세인 가구의 가구 균등화 소득은 4,211만 원, 가구주가 55~64세(후기중년층)에 속하는 가구의 가구 균등화 소득은 4,256만 원으로 이들의 격차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4]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실질 균등화 소득 추이

(단위: 만 원)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2022년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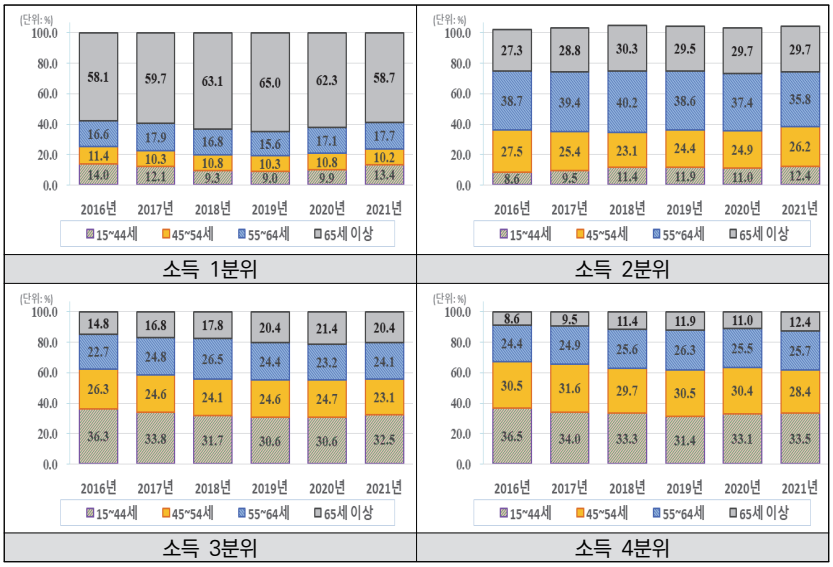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 5분위 분포에 대해서 살펴봤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각각의 응답 가구에 대해 해당 가구의 소득이 속한 분위에 대해서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값을 이용해 소득 5분위 분위별로 각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봤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말해주듯 소득 1분위의 구성 비중을 살펴보면, 6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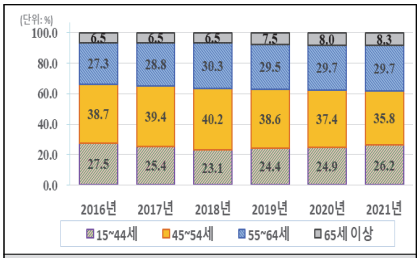
이상(은퇴연령층) 연령대의 가구주 가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 2분위의 구성 비중을 살펴보면 55~64세 가구주 가구가 3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연령대별 전체 평균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중년층의 소득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소득의 내부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소득 분위별 특성을 통해 이들(특히 후기중년)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양극단에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후기중년층 가구의 가구원에서 노동시장 이탈자가 생겨나는 등 소득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한다. 또한 가구주의 학력별, 성별에 따른 가구 균등화 소득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이들의 집단 내 차이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5] 소득 5분위별 연령대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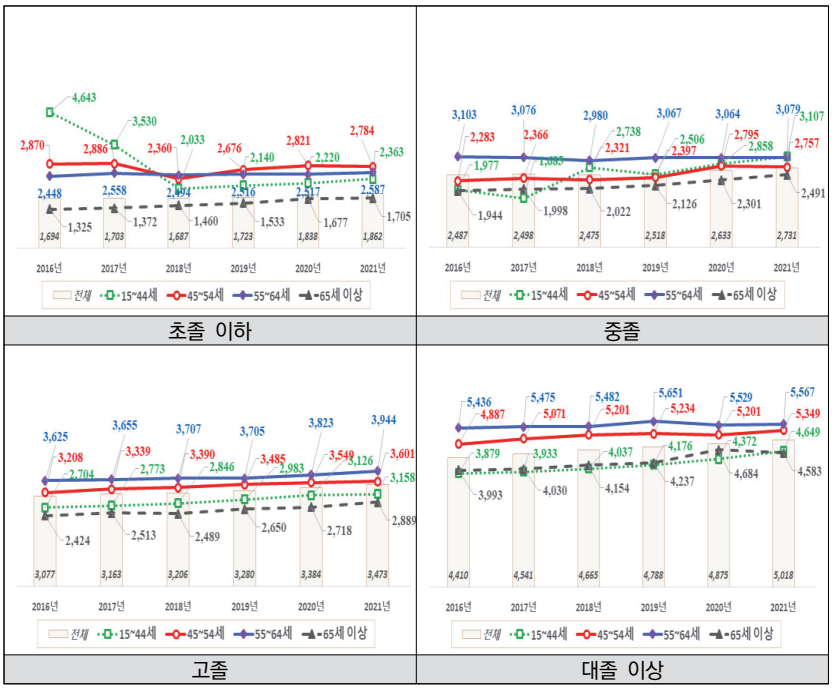


소득 5분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2022년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함.

〔그림 3-6〕 가구주의 연령대×교육수준별 가구 실질 균등화 소득 추이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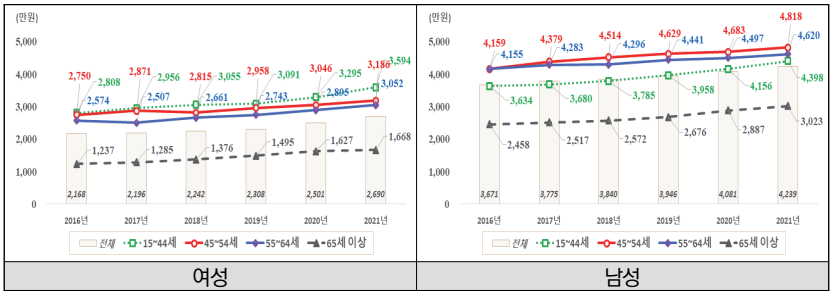


초졸 이하 | 중졸 | 고졸 | 대졸 이상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2022년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함.

〔그림 3-7〕 가구주의 연령대×성별 가구 실질 균등화 소득 추이

(단위: 만 원)



여성	남성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2022년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함.

2. 가구주의 연령대별 가구 지출[8)]

가구의 소득과 마찬가지로 지출 또한 가구별로 가구원 수는 물론 근로 가구원 수, 미성년 가구원 수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단순 지출액을 통해 가구나 집단별로 비교 가능성 높게 비교를 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가구 규모 등에 따른 구조적 차이의 가능성을 줄이고 가구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출액 또한 가구 균등화 과정을 거쳐 비교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염두에 두고 여기서는 소비자 물가지수(2020년=100)를 통해 실질화한 가구 지출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 균등화 지출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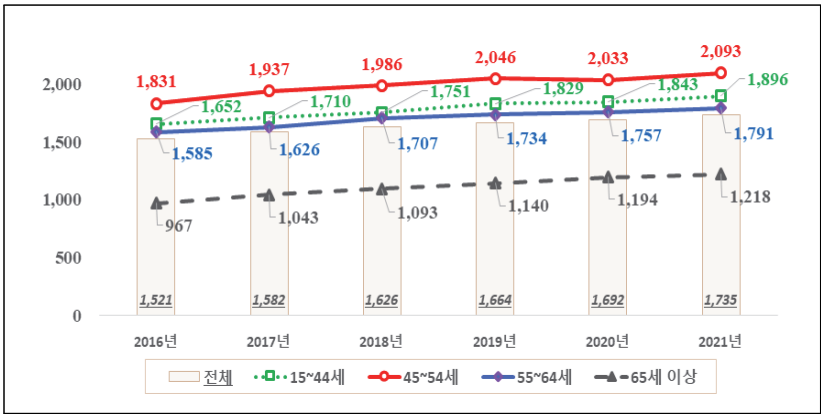
가구의 지출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가구주의 연령대별 지출 규모 차이

8) 앞의 소득에 대한 설명과 마찬가지로 지출 또한 지출의 목적(쓰임새)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도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등 다양한 목적의 소비지출액과 함께 세금, 공적연금사회보험료, 이전지출 등 비소비지출액에 대해서도 묻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정의에 따라 가구별로 소비지출액과 비소비지출액을 합산하여 제공하고 있다(통계청, 2022).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한 지출액을 활용할 수 있겠으나 본 장에서는 가구의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참고로 소비지출은 식료품(외식비 포함), 주거비, 교육비(보육료 포함),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 소비지출비로 구분하여 조사되고 있다.

가 소득에 비해서는 크지 않았으며, 단순히 평균액만 놓고 보았을 때 소득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의 지출(2021년 기준 45.1%)이 발생하였다.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구분한 네 연령대 모두 매년 조금씩 증가한 가운데 '65세 이상 〈 55~64세 〈 15~44세 〈 45~54세' 순으로 집계되었다. 지출 규모의 차이는 소득에 비해 크지는 않으나, 전기중년층은 가구를 형성해서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비율이 높음에 따라 소득액 평균도 높지만, 소득액 대비 지출액 비중이 2021년 기준 약 46.2%로 가장 높다. 55~64세(후기중년층) 가구주 가구는 평균 소득액과 지출액 모두 전기중년층에 비해 적었지만 지출의 감소 정도가 더 커 소득액 대비 지출액의 비중이 비교적 낮게(2021년 기준 42.1%)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본 가구소득과 유사하게 연령에 따른 지출 양상에서도 중년층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교육수준, 성별에 따른 집단 내 차이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8] 가구주의 연령대별 실질화한 가구 균등화 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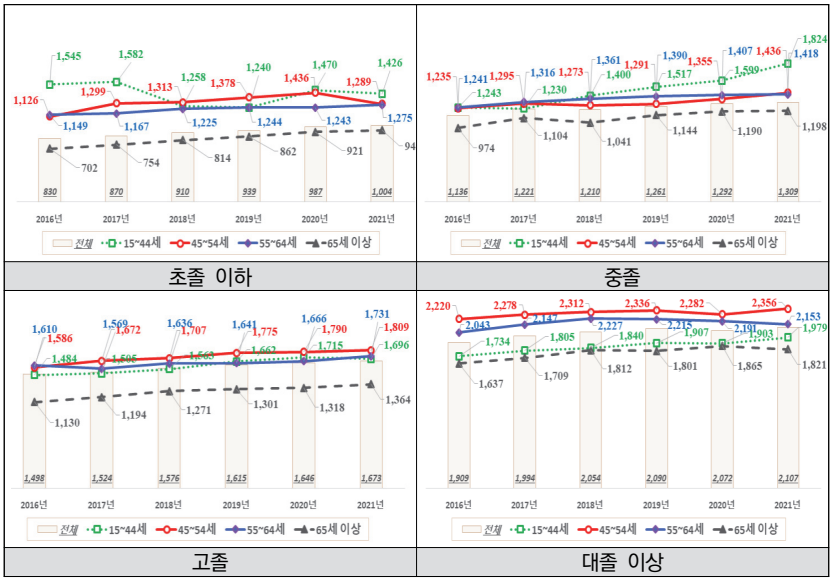
(단위: 만 원)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2022년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함.

〔그림 3-9〕 가구주의 연령대×교육수준별 가구 균등화 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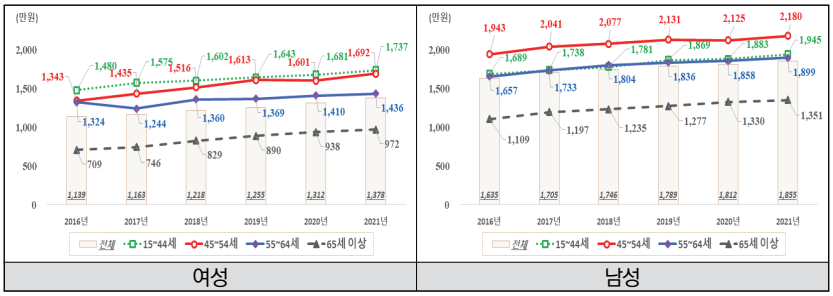
(단위: 만 원)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2022년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함.

〔그림 3-10〕 가구주의 연령대×성별 실질화한 가구 균등화 지출 추이

(단위: 만 원)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2022년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함.

3. 중년 가구주 가구의 자산, 부채, 순자산

자산 또한 가구 또는 개인의 경제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다. 자산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더 안정적인 지표이며, 축적된 구매력을 나타내며(Oliver & Shapiro, 1990), 미래 소비의 저장고로 정의되기도 한다(McKernan & Sherraden, 2008; 김자영, 2017에서 재인용). 이를 염두에 두고 여기서는 가구의 자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자산의 가액 또한 연도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자 소비자 물가지수로 실질화(2020년=100)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9)]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가구의 자산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해 실질화한 가구의 평균 자산액은 2017년 39,603만 원, 2018년 42,423만 원, 2020년 44,543만 원으로 매년 조금씩 높은 정도의 평균 자산액을 나타내었으며, 2021년에는 50,850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비교해보면 평균만 놓고 보았을 때는 '15~44세 〈 65세 이상 〈 45~54세 〈 55~64세' 순으로 나타났다.

자산액을 기준으로 살펴본 데 이어 여기서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원자료에서 제시된 자산 5분위 분포를 이용해 분석해 보았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소득과 마찬가지로 각 가구에 대해 해당 가구의 자산액이 속한 분위에 대해서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 자산 5분위별로 각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봤다.

2022년 결과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산 1분위 가구 가운데 26.0%는 15~44세 가구주 가구였고, 45~54세(전기중년층) 가구와 55~64세(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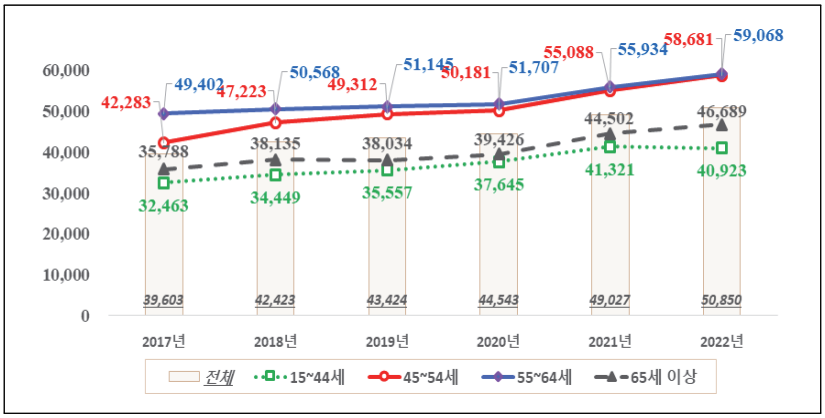
9)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앞선 소득, 소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서는 조사 연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문항이 구성되어 있어 2017~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하였으나 소득과 소비의 경우 2016~2021년을 분석한 것으로 기술하였고, 자산과 부채, 순자산에 대해서는 2017~2022년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중년층) 가구주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7.0%와 21.6%였다. 자산 1분위 가구 가운데 35.4%는 65세 이상(은퇴연령층)의 가구주 가구였다. 자산 2분위의 가구주 연령대별 구성 비중을 살펴보면 15~44세 연령대 가구가 21.3%, 45~54세 가구는 19.3%, 55~64세 가구주 가구는 29.3%, 65세 이상 가구는 28.8%로 후기중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산 5분위별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자산 또한 소득과 유사하게 중년층(특히 후기중년)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양극단에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교육수준과 성별에 따라 집단 내의 이질성이 큰 특성을 보인다.

〔그림 3-11〕 가구주의 연령대별 실질화한 가구 자산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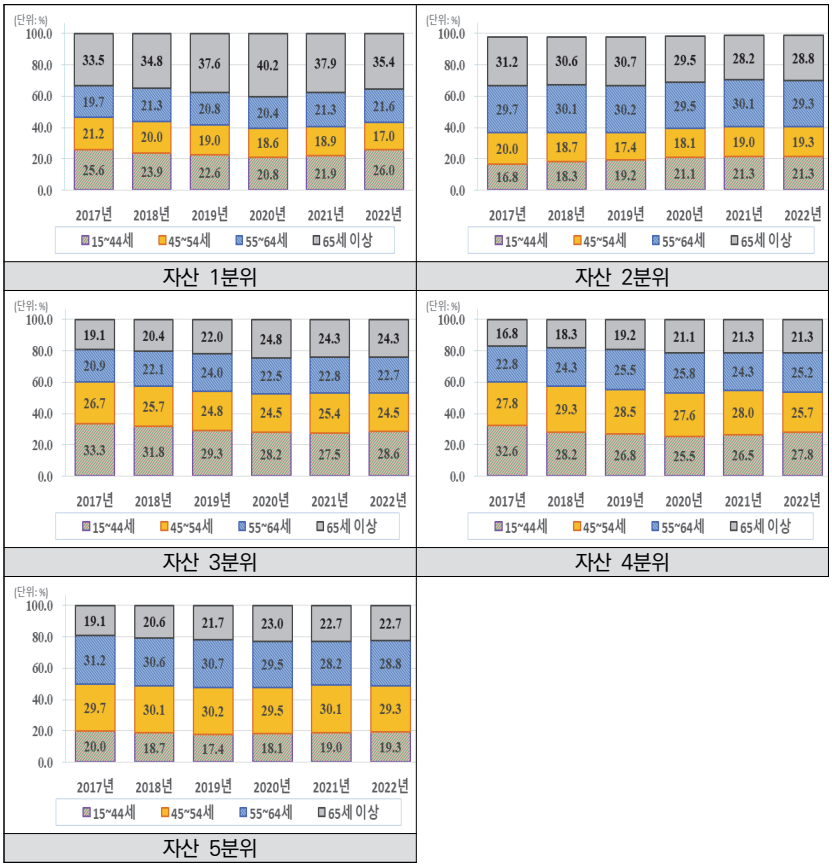
(단위: 만 원)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2022년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함.

〔그림 3-12〕 자산 5분위별 연령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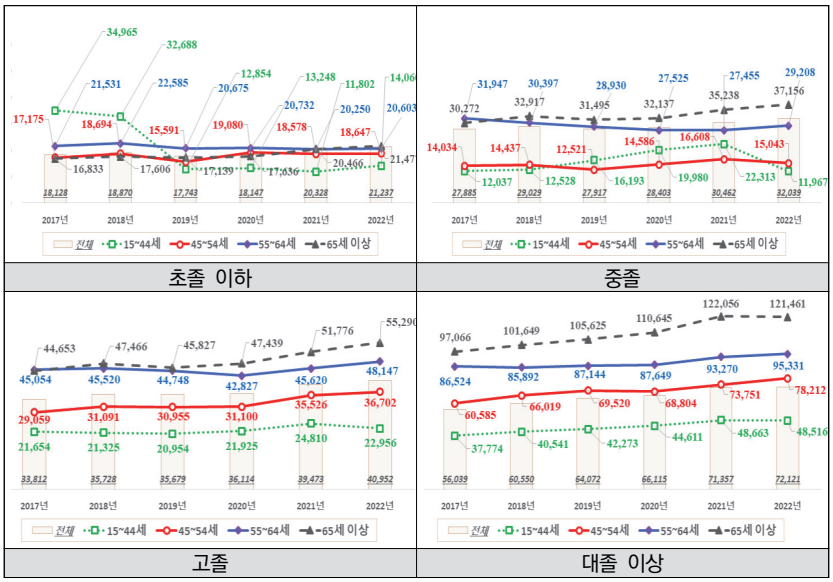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2022년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함.

[그림 3-13] 가구주의 연령대×교육수준별 실질화한 가구 자산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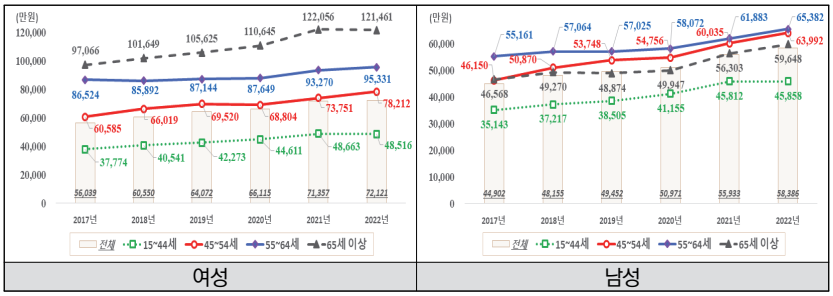
(단위: 만 원)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2022년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함.

[그림 3-14] 가구주의 연령대×성별 실질화한 가구 자산액 추이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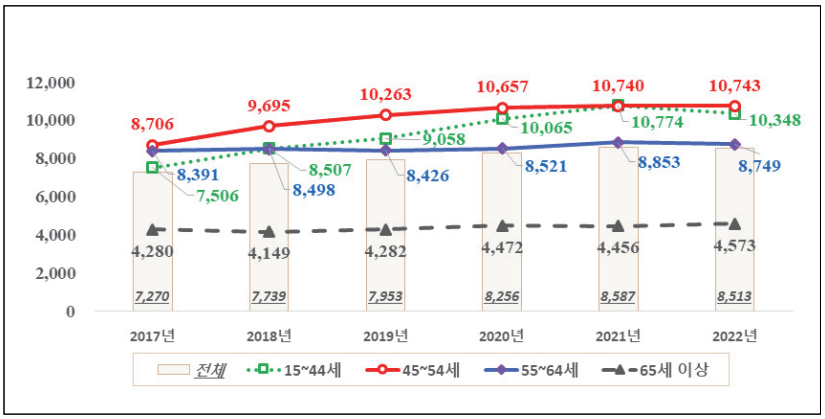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2022년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함.

자산과 함께 부채를 살펴보는 것은 가구들의 경제상태를 살펴봄에 있어 좀 더 풍부한 이야기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는 소비자 물가지수로 균등화(2020년=100)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구주의 연령대를 비롯한 몇 가지 특성에 따른 부채 현황을 살펴봤다. 가구의 자산에 이어 부채를 살펴본 결과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액은 8,513만 원 수준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15~44세 및 45~54세(전기중년층) 가구주 가구의 부채액이 비교적 높았다. 2022년 15~44세 가구주 가구의 평균 부채액은 10,348만 원이었으며, 45~54세(전기중년층) 가구주 가구의 평균은 10,743만 원이었다. 55~64세(후기중년층) 가구주 가구의 부채액은 평균 8,749만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경우 4,573만 원이었다. 2017년~2022년 사이의 변화를 놓고 보면 15~44세 및 45~54세 가구주 가구의 부채액의 증가세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가구소득, 가구지출과 유사하게 연령에 따른 가구 부채액 수준에서도 중년층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교육수준에 따른 집단 내 차이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5] 가구주의 연령대별 실질화한 가구 부채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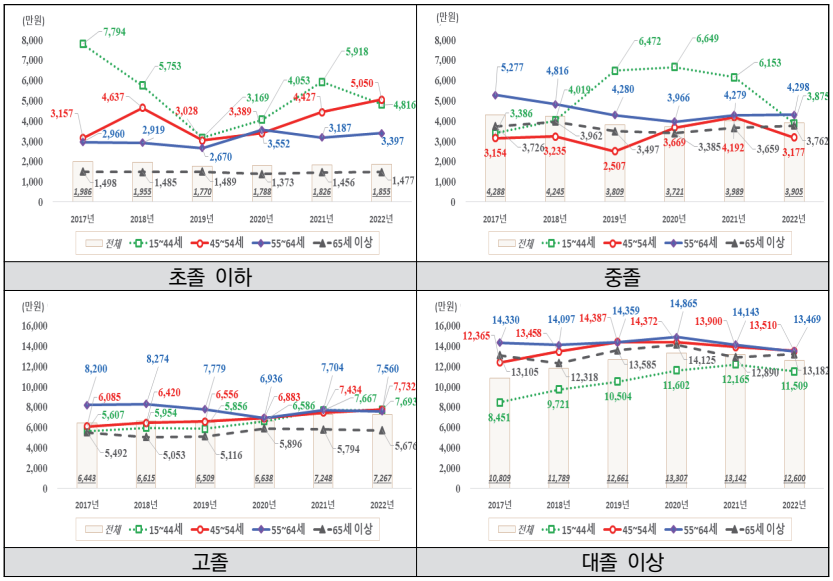
(단위: 만 원)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2022년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함.

〔그림 3-16〕 가구주의 연령대×교육수준별 가구 평균 부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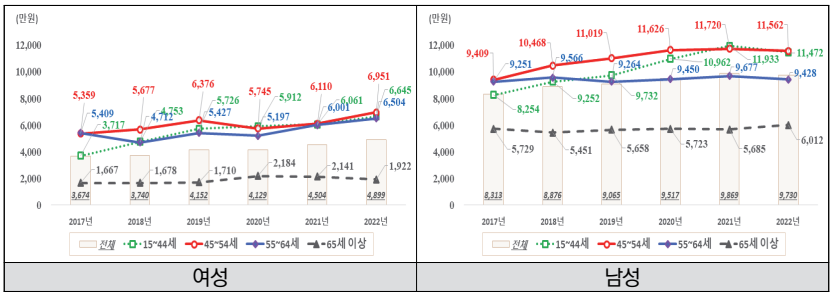
(단위: 만 원)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2022년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함.

〔그림 3-17〕 가구주의 연령대×성별 실질화한 가구 부채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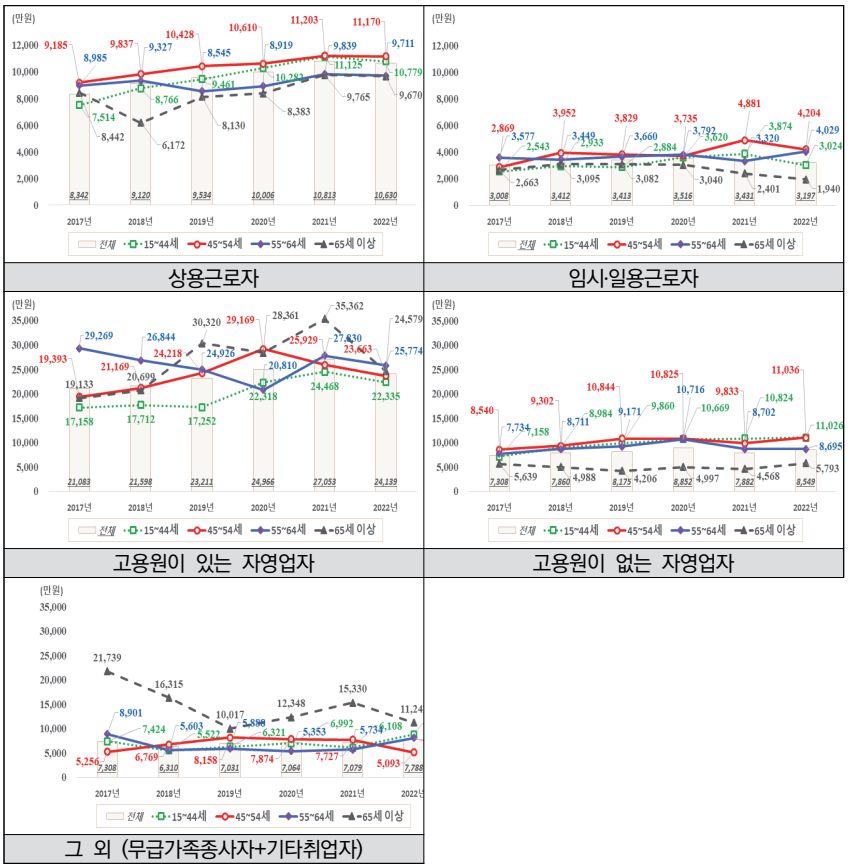
(단위: 만 원)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2022년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함.

〔그림 3-18〕 가구주의 연령대×종사상지위별 가구 부채 추이

(단위: 만 원)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2022년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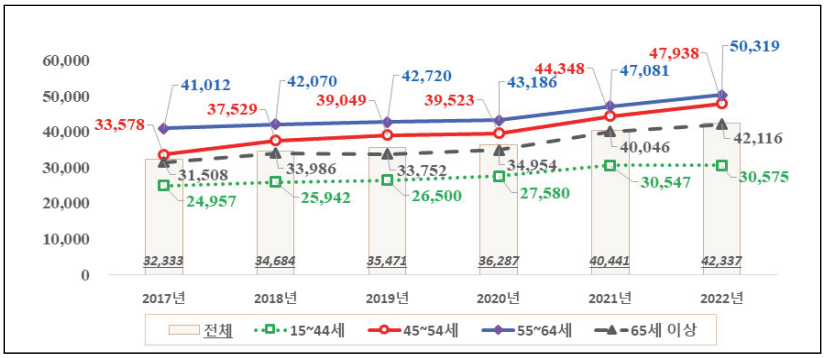
끝으로 가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인 순자산에 대해 살펴본 결과를 제시하였다. 순자산액 또한 소비자 물가지수로 균등화(2020년=100)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가구의 평균 순자산액을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주가 15~44세 범주에 속하는 가구의 평균 순자

산액은 30,575만 원이었으며, 중년층 가운데 45~54세(전기중년층) 연령대에 속하는 가구의 연평균 순자산은 47,938만 원이었다. 55~64세(후기중년층)에 속하는 가구의 평균은 50,319만 원으로, 4가지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의 평균 순자산액은 42,116만 원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3-19] 가구주의 연령대별 실질화한 가구 순자산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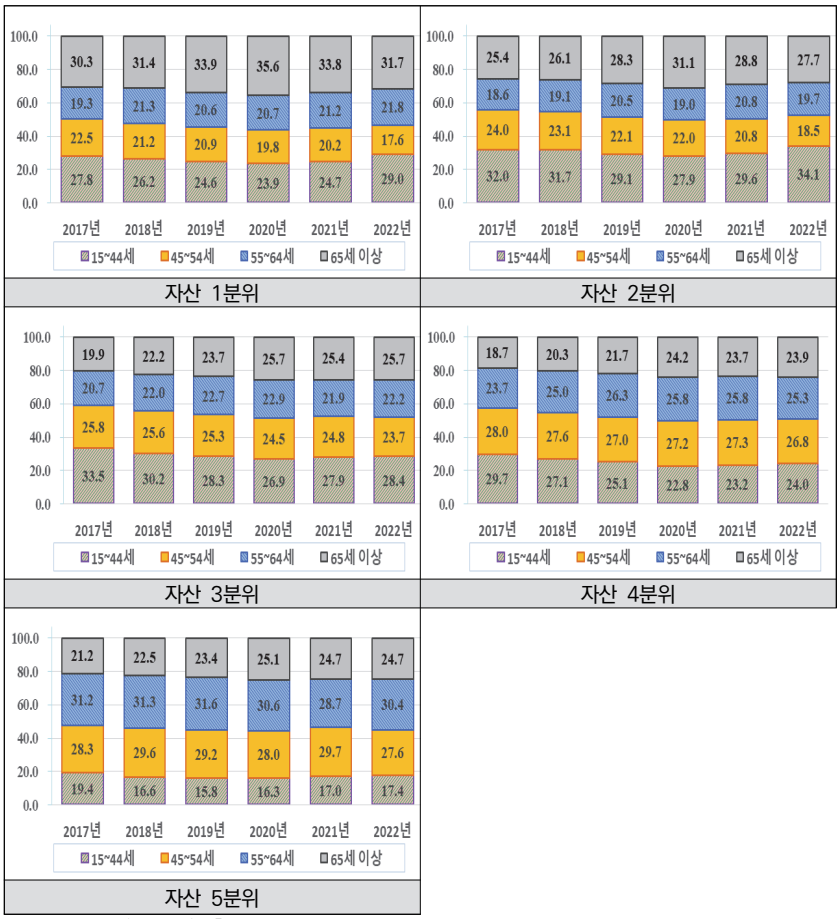
(단위: 만 원)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2022년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함.

〔그림 3-20〕 가구 순자산 5분위별 가구주 연령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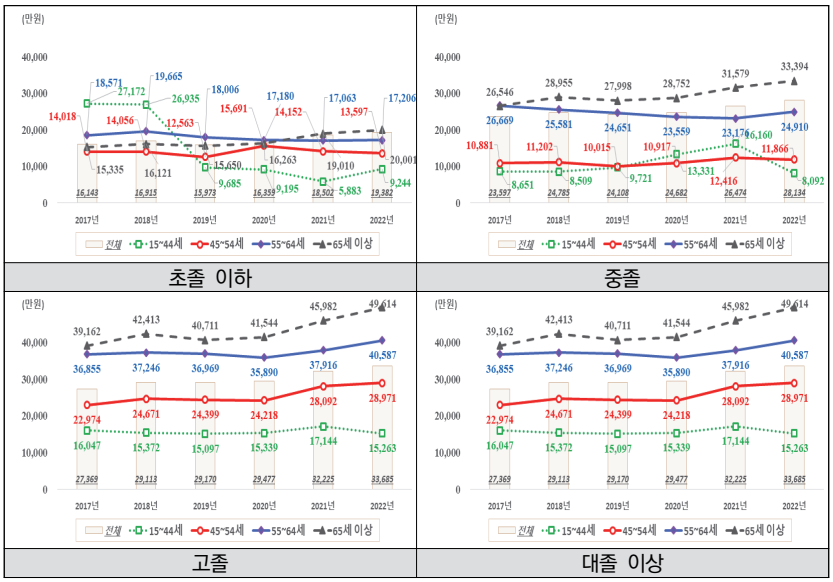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2022년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함.

〔그림 3-21〕 가구주의 연령대×교육수준별 실질화한 가구 순자산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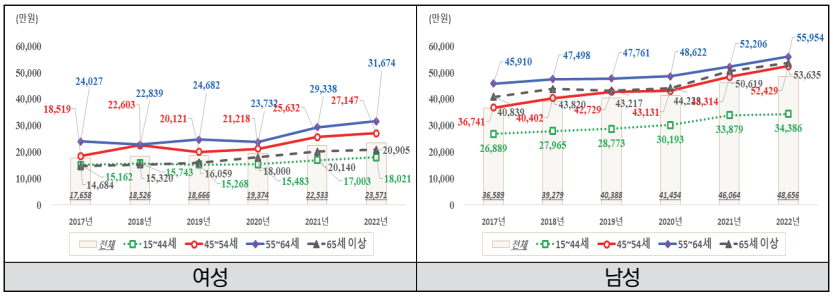
(단위: 만 원)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2022년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함.

〔그림 3-22〕 가구주의 연령대×성별 실질화한 가구 순자산액 추이

(단위: 만 원)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2022년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함.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중년층의 경제활동 실태와 경제상태 실태를 살펴봤다. 통계청의 대규모 통계자료를 이용해 인구 및 노동시장의 측면에서 중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가구주를 기준으로 중년층 가구주 가구를 정의한 후 중년층 가구주 가구의 경제상태를 분석해보았다.

중년층의 인구 규모를 염두에 두고 이들의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28,922천 명 가운데 전기중년층은 6,854천 명으로 경제활동인구 중 23.7%를 차지하고, 후기중년층 경제활동인구는 5,802천 명으로 20.1%를 차지하였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18.9%와 18.2%)해 보았을 때 전기중년층 및 후기중년층 모두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종사상지위를 기준으로 살폈을 때 전기중년층의 경우 상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가운데 이들 연령대의 해당 종사상지위의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았으며, 후기중년층의 경우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즉 종사상지위를 통해 살펴본 일자리 질에서는 중년층, 특히 후기중년층의 경우 노동 불안정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되는 종사상지위에 속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 생애 불안정성에 대한 동태 분석을 제4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가구주의 연령대별 전체 평균 소득 수준을 살펴본 결과, 예상했듯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중년층 가구의 경우 소득액이 타 연령대(청·장년층, 은퇴연령층)에 비해 높았다. 다만, 중년층 가운데 전기중년

층과 후기중년층 간 평균의 차이는 제법 컸는데 후기중년층(55~64세) 가구주 가구의 평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이들의 가구 균등화 소득은 15~44세 가구주 가구의 평균에 비해 그리 큰 값은 아니었다. 이에 비추어보면 후기중년층 가구의 경우 가구원 가운데 노동시장 이탈자가 생겨나는 등 소득의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득의 내부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소득 분위별 특성을 통해 이들(특히 후기중년)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양극단에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주의 학력별, 성별에 따른 가구 균등화 소득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중년층의 경우 집단 내 차이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가구의 균등화 지출을 살펴본 결과, 지출 규모 차이는 소득에 비해 크지는 않으나, 전기중년층은 가구를 형성해서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비율이 높음에 따라 소득액 평균도 높지만 소득액 대비 지출액 비중이 2021년 기준 약 46.2%로 가장 높다. 그리고 55~64세(후기중년층) 가구주 가구는 평균 소득액과 지출액 모두 전기중년층에 비해 적었지만 지출의 감소 정도가 더 커 소득액 대비 지출액의 비중이 비교적 낮게(2021년 기준 42.1%) 나타났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가구소득과 유사하게 연령에 따른 지출 양상에서도 중년층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교육수준, 성별에 따른 집단 내 차이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산 및 순자산의 분위별 분포 특성을 살펴보면, 소득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자산 및 순자산도 중년층(특히 후기중년)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양극단에 분포되어 있으며 교육수준 및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자산을 고려할 때 유의할 점은 유동성과 우리나라 중장년, 고령층 세대의 가치관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후기중년은 '가장 부자이면서 가난한 세대'로 불린다. 이들의 자산은 대부분 주택, 부동산으로 구성

되어 있어 유동성이 떨어진다. 또한 우리나라 후기중년층의 특성상 본인들을 위해 자산을 현금화해 활용하기보다 자녀세대까지 고려하는 가치관이 강한 경향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본 장에서 통계자료를 이용해 중년층의 경제활동 실태와 경제상태 실태를 살펴본 결과, 중년층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집단 내 이질성이 큰 특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특히 교육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년층은 중학교 졸업 이하 비율이 높은 반면, 청년층은 대학교 졸업 이상 비율이 높다. 중장년층은 교육수준 분포에서도 집단 내 이질성이 크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이들 집단의 평균값은 다른 집단에 비해 집단을 대표 혹은 이해함에 있어 평균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도 볼 수 있다. 중년층은 특정한 프로토타입을 염두에 둘 경우 미스매치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집단이므로 이들의 동태 양상을 살펴보고 정책에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한편 본 장에서의 연구를 통해 연령대별로 일자리 특성이나 가구의 재무 특성이 다른 만큼 이를 염두에 둔 정책 발굴이나 정책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예상된 변화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짧은 기간에 대해 비교적 단순하게 살펴보았으나 본격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좀 더 세부적인 변화나 차이까지도 분명하게 파악하고 예측하기 위한 고민을 전개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인의 경제상태 등에 대해 좀 더 입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통계자료의 개발이나 활용에 대한 고민도 이어질 필요가 있다. 즉 체감도 높은 정책 개발 및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심층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의 발굴(예컨대 행정자료, 납세자료 등과의 연계까지도 고려)이 필요하다.

제4장

중년층의 노동 생애 불안정성 측정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분석 결과
제3절 소결

제 4 장 중년층의 노동 생애 불안정성 측정

제1절 분석 개요

1. 분석 목적

Beck(1992)은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risk society)”로 규정하면서, 대표적인 위험 중 하나로 ‘노동의 불안정성’을 언급하였다. 과거 산업화가 진행되던 사회와 달리, 1970~1980년대를 거쳐 기술 진보 및 세계화 등으로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표준화된 고용체계에서 고용의 유연화가 강조되는 비표준화된 고용체계로 이행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해고나 실업의 위험을 더욱 보편화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한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중년층의 노동 불안이 가속화된 측면이 있다. 즉, 과거 세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조기 퇴직, 실업의 위험이 커지는 등 노동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 2023년 5월 통계청의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은 약 10년 사이에 약 4년 7개월이 감소하였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그만둔 연령 또한 53세에서 49.3세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은퇴하는 연령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통계청, 2023d).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에 착안하여, 45~64세 연령대별로 노동 불

안정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 연령이 약 49.3세로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하여, 그 전후 연령대에서 중년층의 노동 생애 불안정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2. 분석 방법

가. 노동 생애 불안정성 지표

중년층의 노동 생애 불안정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우선, 노동 생애 불안정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 노동 불안정성은 고용 형태뿐만 아니라, 임금 수준, 사회보장 혜택 여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또한, 단일 시점에서의 상태 변수 이외에도 생애 관점에서 미취업 상태를 경험한 누적 기간, 경험한 일자리 횟수 등의 누적 변수로 측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누적 변수의 경우, 한 개인의 일자리 경험을 오랜 기간 추적·관찰한 자료가 있어야만 측정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노동 불안정성은 대체로 고용(지위)과 소득 측면에서 측정되고 있으나, 각 요소의 측정 범위는 연구 목적 및 적용 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중심 다중추세분석법을 활용하여 45세에서 64세에 이르는 중년층의 생애 과정에서 노동 불안정성의 궤적이 어떻게 변화하여 가는지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에 따라 노동 불안정성을 고용 지위, 임금 수준, 직업 숙련 수준 3가지의 하위 요소별로 측정하여 다차원적으로 노동 불안정성의 궤적을 유형화해보고자 한다.

고용 지위의 경우, 선행연구를 반영하여 경제활동 상태와 종사상지위

를 고려하여 크게 6가지로 분류하여 측정하고자 한다.[10]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을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 측정하며, 그다음으로 임시직·일용직의 임금근로자는 다소 불안정적인 것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그 성격이 크게 다르다고 판단되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그룹을 구분하고자 하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하나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추가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도 측정되는 방식상 구직활동을 지속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의 범주로 판단하였다.

임금 불안정성의 경우, 2010년대 후반에 최저임금이 크게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일자리가 증가하고 저임금 노동시장이 광범위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박나리·김교성(2021)에서 활용한 생활임금의 개념을 추가로 적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생활임금은 각 연도의 최저시급보다 20% 높은 수준으로 산정하였는데, 〈표 4-1〉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시간당 최저임금, ILO 기준에 따른 시간당 저임금, 최저임금에 20% 인상을 적용한 시간당 생활임금 수준을 보여준다. ILO 기준에 따른 저임금은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에 기반하여 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출한 시간당 임금에 기반하여 표본의 중위 임금을 산출하고 해당 값의 2/3를 적용한 금액이다. 〈표 4-1〉을 보면, 연도별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ILO 기준에 따른 저임금 수준과 최저임금의 격차가 점점 좁혀져 온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최저임금이 가장 크게 인상되었던 2018년에는 최저임금과 저임금 수준이 거의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대 중반 이후에 도입된 개념인 생활임금 수준과 비교하면, 2017년 이전까지는 ILO 기준에 의한 저임금 수준이 생활임금 수

10) 물론, 최근의 고용 형태 및 지위는 기존의 근로기준법 내에서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45~64세 연령대 범주를 살펴보고자 할 때 최근의 고용 형태를 세부적으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준보다도 높게 나타났으나,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된 이후에는 생활임금이 저임금보다도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생활임금이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포함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수준의 임금이라는 개념임을 고려할 때, 최근 시점의 경우 ILO 기준에 의한 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으로는 임금 불안정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표 4-1〉 임금 불안정성 관련 변수: 시간당 임금

(단위: 원)

연도	저임금	최저임금	생활임금
2000	2,871	1,600	1,920
2001	3,101	1,865	2,238
2002	3,445	2,100	2,520
2003	3,876	2,275	2,730
2004	4,199	2,510	3,012
2005	4,651	2,840	3,408
2006	4,845	3,100	3,720
2007	4,961	3,480	4,176
2008	5,285	3,770	4,524
2009	5,426	4,000	4,800
2010	5,742	4,110	4,932
2011	5,943	4,320	5,184
2012	6,416	4,580	5,496
2013	6,783	4,860	5,832
2014	6,891	5,210	6,252
2015	7,132	5,580	6,696
2016	7,752	6,030	7,236
2017	7,752	6,470	7,764
2018	**7,752**	**7,530**	**9,036**
2019	8,293	8,350	10,020
2020	8,915	8,590	10,308
2021	9,302	8,720	10,464

자료: 저임금은 연도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산출하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120%로 설정하여 산출함.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 현황.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검색일: 2023. 6. 20.) 자료 활용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금 불안정성을 측정할 때, 2018년 이후에는 생활임금 수준을 고려하고자 한다. 즉, 시간당 임금이 저임금(2017년까지)보다 높거나 생활임금(2018년 이후)보다 높으면 안정적인 것으로 보고, 시간당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과 저임금(또는 생활임금) 사이에 해당하면 다소 불안정한 것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불안정한 것으로, 임금이 0인 경우는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업 불안정성은 한국표준직업분류(5차)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OECD(2017) 직업분류별 숙련도 구분을 참고하여 고숙련, 중숙련, 저숙련, 직업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고숙련(high-skilled)은 전문가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중숙련(middle-skilled)은 사무종사자, 농업/임업/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저숙련(low-skilled)은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로 구분하였으며, 숙련도가 높은 직업일수록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표 4-2〉 본 연구의 노동 생애 불안정성 지표

불안정성	속성
고용 불안정성	0. 임금근로-상용직 1. 임금근로-임시직, 일용직 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4. 실업자 5. 비경제활동인구
임금 불안정성	0. 시간당 임금 〉 생활임금 또는 저임금(표본 중위 임금의 2/3) 1. 최저임금 〈 시간당 임금 ≤ 생활임금 또는 저임금(표본 중위 임금의 2/3) 2. 시간당 임금 ≤ 최저임금 3. 시간당 임금 = 0 (실업자, 비경활, 무급가족종사자, 적자인 비임금근로자)
직업 불안정성	0. 고숙련 1. 중숙련 2. 저숙련 3. 직업 없음

자료: 저자 작성

나. 분석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년층의 나이를 45~64세로 보고, 45세 이후 중년층의 노동 불안정성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 연령대가 45~64세로 상대적으로 긴 시간의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기에, 패널조사 자료 중 가장 오랜 기간 조사가 진행되어온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활용하였다. 동 자료는 1998년부터 조사가 시작되어, 현재 2021년(24차 조사)까지 조사자료가 공개되어 있으며, 가구 단위 자료뿐만 아니라, 개인 단위에서 주된 일자리, 임금, 직업훈련 등 다양한 정보를 포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의 상황은 배제하고자, 200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3차 연도(2000년)부터 24차 연도(2021년)까지의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최근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에서 그만두는 나이가 약 49.3세(통계청, 2023d)로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하여, 2000년대에 45~54세였던 출생 코호트와 2010년대에 45~54세에 이른 출생 코호트를 구분하여 노동 불안정성의 궤적에 차이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출생 코호트는 1946~1955년생을 포함하고, 두 번째 출생 코호트는 1956년생부터 1965년생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 불안정성의 궤적을 유형화하여 살펴보기 위해 집단중심 다중추세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이를 위한 분석 자료의 구축 단계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3차 연도부터 24차 연도까지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병합한 후, 45세 이후 또는 64세 이전에 최소 10년 이상의 관측치를 관찰할 수 있도록 분석 대상 출생 코호트를 1946~1965년생으로 한정하였다. 이후 본 연구의 중년층 대상 연령 범위인 45~64세에 해당하지 않는 표본은 분석 대상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즉, 2000년 조사에서 1950년생은 만 50세로 이들이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패널조사에 응하였다면, 2015년에는 만 65세 나이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64세까지만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표본의 경우 2014년까지 조사된 자료만 활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이 기준(45~64세) 자료를 구축하였고, 각 연령대에서 〈표 4-2〉에서 제시한 불안정성 지표를 측정하여 최종적으로 분석 자료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집단중심 (다중)추세분석법은 결측을 포함한 불균형 패널도 분석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므로, 각 표본이 연속적으로 관찰되지 않더라도 관찰된 횟수가 10회 이상인 경우는 모두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때, 불안정 측정 지표 중 임금변수의 경우 다른 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측치가 있으므로, 임금 불안정성 변수도 최소 10회 이상 관측되는 경우에만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분석 대상에 포함된 총 표본 수는 4,042명이며, 출생연도별 성별 표본 수는 〈표 4-3〉에 제시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여기서는 고용, 임금, 직업 3가지 하위 요소로 측정한 노동 불안정성 지표에 대해 집단중심 다중추세분석법을 활용하여 그 궤적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집단중심 다중추세분석법은 집단중심 추세분석의 발전된 형태 중 하나로, 기존에 하나의 결과변수에 대해서 궤적을 분석한 것에서 나아가 두 가지 이상의 결과변수를 포함하여 다차원적 궤적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집단중심 추세분석은 모집단이 연령 또는 시간에 따라 궤적의 차이를 보이는 유한개의 집단으로 구분된다는 가정하에, 개인이 각 연령 또는 시점에 특정 궤적을 보이는 집단에 포함될 확률밀도함수를 추정한다(박나리·김교성, 2021, p.57).

〈표 4-3〉 분석 대상 표본

(단위: 명, %)

출생년도	남성	여성	총계
1946	41	56	97 (2.4)
1947	64	66	130 (3.2)
1948	85	69	154 (3.8)
1949	69	78	147 (3.6)
1950	70	92	162 (4.0)
1951	57	74	131 (3.2)
1952	98	110	208 (5.2)
1953	71	87	158 (3.9)
1954	108	115	223 (5.5)
1955	134	120	254 (6.3)
1956	114	125	239 (5.9)
1957	122	123	245 (6.1)
1958	126	128	254 (6.3)
1959	124	135	259 (6.4)
1960	117	129	246 (6.1)
1961	124	145	269 (6.7)
1962	124	109	233 (5.8)
1963	101	119	220 (5.4)
1964	102	114	216 (5.3)
1965	88	109	197 (4.9)
총계	1,939 (48.0)	2,103 (52.0)	4,042 (100) (1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나타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각 연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3차 연도~24차 연도 활용 저자 작성

제2절 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표 4-2〉의 노동 불안정성 지표를 활용하여, 45~64세 중년층의 노동 불안정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노동 불안정성 궤적의 유형화를 통해 살펴본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45~64세 중년층을 고려할 때, 성별에 따른 노동 불안정성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최근에 다소 완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의 경우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M자 커브의 형태를 보이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즉,여성은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년층에 이르렀을 때 남성과 다른 노동시장 궤적을 보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는 성별을 구분하여 노동 불안정성 궤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여성의 경우 좀 더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여성의 출산 시기 노동시장 참여 형태와 그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추적이 필요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45세 이후 각 시점에서 측정한 노동 불안정성 양상에 더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 불안정성 지표별 기초통계

집단중심 다중추세분석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분석 대상 표본의 불안정성 지표별 분포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표 4-4〉는 연도별 불안정성 지표 항목의 분포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45~64세 대상 표본 전체에 대해 그 분포를 산출한 것이다. 즉, 각 연도별로 45~64세 해당하는 표본 모두를 대상으로 항목별 빈도를 산출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불균형 패널을 포함하여 자료를 구축하였기에, 모든 표본이 모든 연도에서 관찰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개인별 표본 수는 〈표 4-3〉에서 제시된 것처럼 4,042명임에도, 〈표 4-4〉에서 연도별로 산출된 총 표본 수는 이

와 동일하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의 3차 연도 자료부터 24차 연도 자료까지 이용하여 자료의 시계열이 상대적으로 길어서, 여기서는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2000년, 2010년, 2020년의 현황을 나타내었다. 분석 대상 표본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고용 지위는 상용직,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비경제활동인구의 분포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연도별 변화 추이를 보면, 최근 시점으로 올수록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고용주와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임금 불안정성 지표 항목별 분포를 보면, 시간당 임금이 0인 표본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는 반면, 시간당 임금이 ILO 기준 저임금(또는 생활임금)을 초과하는 비중은 감소하였고,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비중은 증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45~64세의 근로하는 중장년층의 시간당 임금 수준이 악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직업 불안정성 지표의 항목별 분포를 보면, 고숙련의 비중은 대체로 증가해온 모습을 보이는 반면, 중숙련 직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이를 보인다. 저숙련 직업의 비중은 2010년에 다소 감소하였다가 최근 다시 증가한 추이를 보인다.

〈표 4-4〉 연도별 45~64세 대상 표본의 불안정성 지표별 분포 추이

(단위: 명, %)

	2000년	2010년	2020년
고용 불안정성			
상용직	372 (26.3)	970 (25.5)	607 (27.4)
임시/일용직	143 (10.1)	568 (14.9)	381 (17.2)
고용주	118 (8.3)	289 (7.6)	106 (4.8)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372 (26.3)	825 (21.7)	449 (20.3)
실업자	26 (1.8)	49 (1.3)	20 (0.9)
비경제활동인구	386 (27.2)	1,103 (29.0)	654 (29.5)
합계	1,417 (100)	3,804 (100.0)	2,217 (100)
임금 불안정성			
저임금(생활임금) 초과	647 (45.8)	1,628 (42.9)	895 (40.4)
최저임금과 저임금(생활임금) 사이	158 (11.2)	394 (10.4)	209 (9.4)
최저임금 이하	35 (2.5)	347 (9.1)	318 (14.4)
시간당 임금=0	574 (40.6)	1,427 (37.6)	792 (35.8)
합계	1,414 (100)	3,796 (100)	2,214 (100)
직업 불안정성			
고숙련	103 (7.3)	337 (8.9)	189 (8.5)
중숙련	499 (35.4)	1,279 (33.6)	700 (31.6)
저숙련	397 (28.1)	1,036 (27.2)	654 (29.5)
직업 없음	412 (29.2)	1,152 (30.3)	674 (30.4)
합계	1,411 (100)	3,804 (100)	2,217 (1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나타냄.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구축된 자료는 불균형 패널 형태로, 〈표 4-7〉에서 제시된 총 대상 표본 수와 본 표에서의 연도별 표본 수가 일치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함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3차 연도~24차 연도 활용 저자 작성

〈표 4-5〉에는 자료의 연도가 아닌 분석 대상 표본의 연령대별로 불안정성 지표 항목의 분포 추이를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45세의 경우, 2000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도별 자료에서 45세 해당하는 표본만을 대상으로 빈도를 산출한 것으로, 여러 시점에서의 45세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집단중심 다중추세분석법은 연령대별 추세를 궤적화하는 것으로, 〈표 4-5〉는 본 연구의 분석 방법과 더 연결된 기술통계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 연령은 45세부터 64세까지로 상당히 길기에, 여기서는 45세, 50세, 55세, 60세 4개 연령대에서의 분포만 제시하였다.[11] 우선, 고용 불안정성 지표 항목을 보면, 상용직 근로자 비중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데, 55세와 60세를 비교해보면 약 31.8% 감소하였고, 60세 이후 감소 추이는 더욱 커진다. 임시·일용직 비중의 경우, 연령에 따라 증가하기는 하나, 상용직의 감소만큼 증가하지는 않는다. 고용주 비중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감소하며,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소폭 감소 및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하고 보면, 45세에는 상용직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나이가 많아지면서 상용직과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의 차이가 감소하며, 60세에는 이들 비중이 역전된다.

임금 불안정성 항목의 분포를 보면, 시간당 임금이 저임금(또는 생활임금) 수준을 초과하거나, 저임금(또는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사이에 해당하는 비중은 나이가 들수록 점차 감소하며,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와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50세 이후 더욱 커지는데, 55세와 60세를 비교하면 시간당 임금이 0인 비중은 22.8% 증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비중은 45.5% 증가하였으며, 시간당 임금이 저임금(또는 생활임금)을 초과하는 비중은 약 24.4% 감소하였다.

직업 불안정성 지표의 항목별 분포를 보면, 나이가 들면서 고숙련 및 중숙련 직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5세 이전까지는 중숙련 직업 종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나, 60세에는 직업

11) 본 보고서에서 모든 연령대별 기초통계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나이가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추이는 유사하며, 60세 이후에는 추이 변화가 더 급격히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 없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중숙련과 저숙련 종사자 비중의 차이가 이전 나이대만큼 크지 않다.

〈표 4-5〉 연령대별 불안정성 지표별 분포 추이

(단위: 명, %)

	45세	50세	55세	60세
고용 불안정성				
상용직	722 (35.4)	962 (31.3)	1,095 (28.3)	579 (19.3)
임시/일용직	266 (13.0)	424 (13.8)	552 (14.3)	476 (15.9)
고용주	176 (8.6)	266 (8.7)	275 (7.1)	172 (5.7)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442 (21.7)	694 (22.6)	846 (21.9)	662 (22.1)
실업자	40 (2.0)	45 (1.5)	40 (1.0)	29 (1.0)
비경제활동인구	396 (19.4)	685 (22.3)	1,057 (27.4)	1,078 (36.0)
합계	2,042 (100)	3,076 (100)	3,865 (100)	2,996 (100)
임금 불안정성				
저임금(생활임금) 초과	1,015 (49.9)	1,518 (49.6)	1,722 (44.6)	1,007 (33.7)
최저임금과 저임금(생활임금) 사이	285 (14.0)	364 (11.9)	421 (10.9)	294 (9.8)
최저임금 이하	121 (6.0)	202 (6.6)	340 (8.8)	382 (12.8)
시간당 임금=0	612 (30.1)	977 (31.9)	1,375 (35.6)	1,306 (43.7)
합계	2,033 (100)	3,061 (100)	3,858 (100)	2,989 (100)
직업 불안정성				
고숙련	218 (10.7)	306 (10.0)	335 (8.7)	204 (6.8)
중숙련	798 (39.2)	1,146 (37.3)	1,330 (34.4)	878 (29.3)
저숙련	583 (28.7)	891 (29.0)	1,100 (28.5)	806 (26.9)
직업 없음	436 (21.4)	730 (23.8)	1,097 (28.4)	1,107 (37.0)
합계	2,035 (100)	3,073 (100)	3,862 (100)	2,995 (1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나타냄.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구축된 자료는 불균형 패널 형태로, 〈표 4-7〉에서 제시된 총 대상 표본 수와 본 표에서의 연령별 표본 수가 일치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함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3차 연도~24차 연도 활용 저자 작성

2. 남성 중년 표본 대상

집단중심 다중추세분석에서 연령에 따라 궤적의 차이를 보이는 집단의 수는 집단 수 변화에 따른 적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표 4-6〉은 남성 표본을 대상으로, 최적 집단 수를 2개에서 8개로 늘려감에 따른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를 보여준다. Jones, Nagin, and Roeder(2001)에서는 집단 수를 늘려감에 따른 BIC의 변화량 로그값이 3 이상이거나 각 집단의 구성비가 모두 5% 이상인 경우 최적 유형 수로 판단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표 4-6〉에 의하면, 집단 수를 증가시킬수록 BIC 값이 유의하게 증가하기는 하지만, 집단 수를 7개 또는 8개로 가정하였을 때 분산 행렬 비대칭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적 집단의 수를 6개로 선택하였다.

〈표 4-6〉 남성 중년 대상 최적 집단 수 추정

궤적 수	함수 차수	BIC (n=86,040)	BIC (n=1,939)
2	33	-110815.34	-110762.24
3	333	-104314.68	-104236.94
4	3333*	-101754.00	-101651.60
5	33333	-98958.89	-98831.83
6	333333	-96461.94	-96310.24
7	3333333*	-95267.59	-95091.23
8	33333333*	-94594.74	-94393.73

주: *는 분산행렬의 비대칭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3차 연도~24차 연도 활용 저자 작성

[그림 4-1]은 노동 불안정성을 고용 지위, 임금 수준, 직업 숙련도 3가지 차원에서 측정하여 그 궤적을 유형화한 결과를 보여준다.

○ 그룹1 (20.4%): 중숙련 임금근로 유지형

- 고용 지위를 보면 55세 내외까지 상용직을 유지하다 임시·일용직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고용 지위의 변화와 함께 55세 이후부터 저임금 또는 생활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 상태로 이행함.

○ 그룹2 (7.0%): 고숙련 후기 불안정형

- 직업의 숙련도가 높았던 유형으로, 50대 중반 이후 임시·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로 이행하는 패턴을 보여줌. 이와 함께 임금 수준도 더욱 빠르게 불안정한 상태로 이행함.

○ 그룹3 (30.8%): 중숙련 자영업 유지형

- 이들 그룹의 고용 지위는 대체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 분포해있으며, 60세 이후에도 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임금 불안정성은 60세 이후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룹4 (24.1%): 저숙련 자영업 불안정형

- 그룹3과 비교시 직업 숙련도가 낮고, 고용 지위 또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더 포함된 유형으로 판단됨. 중숙련 자영업 유형에 비해 임금 불안정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그룹5 (10.8%): 중숙련 조기 불안정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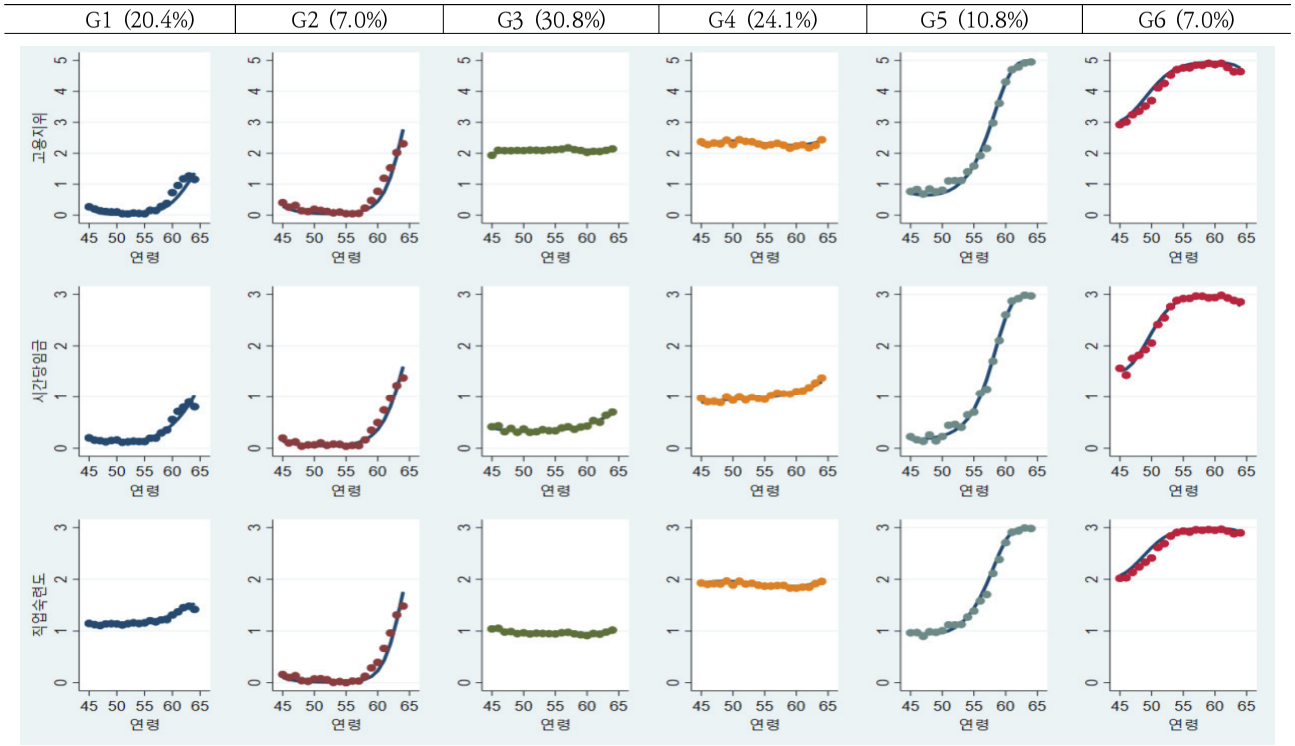
- 45~50세 당시 직업의 숙련도는 중숙련 수준이었으나, 빠르게 숙련도가 낮은 직업으로 이행하여 50대 후반 이후 직업이 없는 상태로 이행함.

- 중숙련 임금근로 유지형과 달리, 이 유형은 45~50세의 고용 지위가 임시·일용직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50대 후반에는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상태로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임금 불안정성도 45~50세에는 낮은 편이었으나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빠르게 불안정성이 높아져 60대에는 임금이 0인 상태에 이름.

○ 그룹6 (7.0%): 저숙련 만성 불안정형

- 45~50세 당시 저숙련 직업에 종사하면서, 고용 지위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분포가 높은 집단으로 나타남.
- 임금 불안정성 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으며, 40대 후반부터 실업, 비경제활동 상태에 지속적으로 머물면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 남성 중년 대상 노동 불안정성 궤적 유형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3차 연도~24차 연도 활용 저자 작성

1946~1965년생 남성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대체로 50대 중반 이후에 임금 수준과 고용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으나 그룹5(중숙련 조기 불안정형)의 경우 50대 초반 이후 임금 수준과 고용 지위가 빠르게 불안정해져 60대에는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직업 숙련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경우 50대 후반 이후 더욱 빠르게 임금 수준과 고용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그룹1 vs 그룹2). 임금근로자와 달리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45~64세 기간 전반에 걸쳐 임금 수준의 불안정성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으나, 그 정도는 직업 숙련도가 낮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보인다.

다음으로 출생 코호트 간에 노동 불안정성 궤적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출생 코호트를 1946~1955년생 그룹과 1956~1965년생 그룹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7〉과 〈표 4-8〉은 각 출생 코호트 그룹별로 노동 불안정성 궤적 유형의 최적 집단 수를 결정하기 위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집단 수를 증가시킬수록 BIC 값이 증가하기는 하나, 남성 중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달리 집단 수가 6개일 때 분산 행렬의 비대칭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출생 코호트별 분석에서는 7개의 집단 수를 선택하고, 궤적별 함수 형태는 가장 포괄적인 3차 함수를 형태를 가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 코호트 대상 분석의 경우, 7번째 그룹의 비중은 약 4.8%로 5%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코호트 그룹별 비교를 위해 최적 집단 수를 7개로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4-2]와 [그림 4-3]은 각 출생 코호트별 도출된 노동 불안정성 궤적 유형을 보여주는데, 중년층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와

유사하게 고숙련 후기 불안정형, 중숙련 임금근로 유지형, 중숙련 조기 불안정형, 중숙련 자영업 유지형, 저숙련 자영업 불안정형이 관찰된다. 다만,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저숙련 만성 불안정형으로 유형화된 그룹은 코호트별 분석에서는 변동성이 큰 불안정형(그룹 6)과 만성 미취업 불안정형(그룹 7)으로 더 세분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표 4-7〉 남성 중년 출생 코호트 1946~1955년생 대상 최적 집단 수 추정

궤적 수	함수 차수	BIC (n=34,919)	BIC (n=797)
2	33	-46531.69	-46478.77
3	333*	-44616.47	-44538.98
4	3333*	-42891.93	-42789.88
5	33333*	-42052.16	-41925.54
6	333333*	-41396.55	-41245.35
7	3333333	-40982.50	-40806.73

주: *는 분산행렬의 비대칭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3차 연도~24차 연도 활용 저자 작성

〈표 4-8〉 남성 중년 출생 코호트 1956~1965년생 대상 최적 집단 수 추정

궤적 수	함수 차수	BIC (n=51,121)	BIC (n=1,142)
2	33	-63232.28	-63179.06
3	333	-59680.51	-59602.58
4	3333	-58159.30	-58056.66
5	33333	-56978.85	-56851.51
6	333333*	-55174.90	-55022.84
7	3333333	-54678.25	-54501.48

주: *는 분산행렬의 비대칭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3차 연도~24차 연도 활용 저자 작성

〈표 4-9〉는 [그림 4-1]에서 [그림 4-3]의 노동 불안정성 궤적 유형을 요약하여 나타낸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출생 코호트별 노동 불안정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임금근로자가 주로 분포된 유형에서의 노동 불안정성 궤적을 보면, 고숙련 후기 불안정형은 두 번째 코호트 그룹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2]의 그룹5 그래프와 [그림 4-3]의 그룹1 그래프를 비교하면, 두 출생 코호트 모두 50대 후반부터 고용 지위, 임금 수준에서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나, 46~55년생의 경우 60대 이후 노동시장을 이탈하면서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반면, 56~65년생은 60대에도 임시/일용직, 자영업 등으로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들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저임금과 최저임금 사이의 수준으로 나타난다.

중숙련 임금근로 유지형의 경우, 56~65년생 코호트에서 구성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림 4-2]의 그룹1 그래프와 [그림 4-3]의 그룹2 그래프를 비교하면, 50대 후반 이후 고용 지위, 임금 수준, 직업 숙련도 측면에서 불안정성이 두 번째 코호트에서 더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중숙련 조기 불안정형의 경우, 46~55년생 코호트에서 구성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임금근로자에서 비임금근로자로 이행하면서 임금 수준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연령대는 56~65년생 코호트에서 더 일찍(50대 초반) 나타나고 있다.

종사상지위를 기준으로 볼 때, 비임금근로자가 주로 분포하고 있는 중숙련 자영업 유지형과 저숙련 자영업 불안정형의 경우, 46~55년생 코호트에서의 구성비는 약 54%, 56~65년생 코호트에서의 구성비는 약 49.5%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는 대체로 56~65년생 코호트에서 저숙련 자영업 불안정형 비중이 감소함에 따른 결과로 보이며, 연령대별 불안정성의 정도는 두 코호트 그룹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그

림 4-2]의 그룹 3 및 그룹4 그래프 vs [그림 4-3]의 그룹4 및 그룹5 그래프 참조).

마지막으로 저숙련 만성 불안정형의 경우, 코호트 그룹을 구분한 분석에서는 변동성이 큰 그룹([그림 4-2] 및 [그림 4-3]의 그룹6)과 만성 미취업형([그림 4-2] 및 [그림 4-3]의 그룹7)이 구분되어 나타나는데, 변동성이 큰 그룹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46~55년생 코호트의 경우, 2008년 당시 연령이 50대 중반~60대 초반으로, [그림 4-2]의 그룹6 그래프를 보면, 위 연령대에서 실업 및 비경제활동 상태를 경험하였다가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양상을 보인다. 노동시장을 이탈하기 전에는 시간당 임금이 저임금(또는 생활임금) 이상으로 안정적이었으나,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였을 때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불안정성이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56~65년생 코호트 경우, 2008년 이후 2010년대에 40대 중반~50대 초반의 연령대로, [그림 4-3]에서 그룹6의 그래프를 보면, 위 연령대에서 실업을 경험한 후, 자영업, 고용주 등 고용 지위가 계속 변동하며 그에 따라 임금, 직업 숙련도의 불안정성도 변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만성 미취업 불안정형의 경우, 56~65년생 코호트에서 구성비가 감소한 모습을 보이며, 실업에서 비경제활동 상태로의 이행도 더 늦은 나이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4-9〉 남성 중년 대상 노동 불안정성 궤적 유형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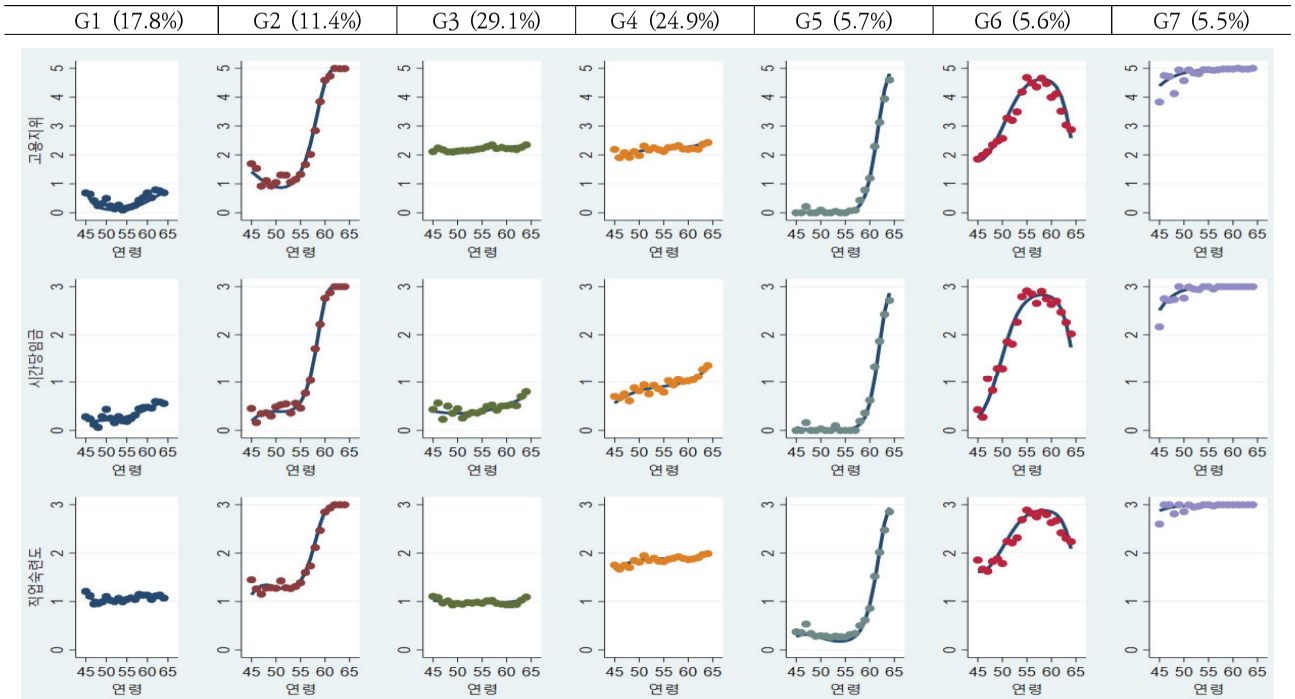
(단위: %)

유형		전체 표본	출생 코호트 1 1946~1955년생	출생 코호트 2 1956~1965년생
임금 근로자	중숙련 임금근로 유지형	20.4% (G1)	17.8% (G1)	23.6% (G2)
	고숙련 후기 불안정형	7% (G2)	5.7% (G5)	7.8% (G1)
	중숙련 조기 불안정형	10.8% (G5)	11.4% (G2)	8.2% (G3)
비임금 근로자	중숙련 자영업 유지형	30.8% (G3)	29.1% (G3)	30.5% (G4)
	저숙련 자영업 불안정형	24.1% (G4)	24.9% (G4)	19.0% (G5)
기타	저숙련 만성 불안정형	7% (G6)	5.6% (G6)	6.2% (G6)
			5.5% (G7)	4.8% (G7)

주: 괄호 안의 그룹 표시는 각각의 대상 분석에서 도출된 그룹을 의미하며, 전체 표본의 경우 [그림 4-1]의 그룹, 첫 번째 출생 코호트는 [그림 4-2]의 그룹, 두 번째 출생 코호트는 [그림 4-3[]의 그룹 번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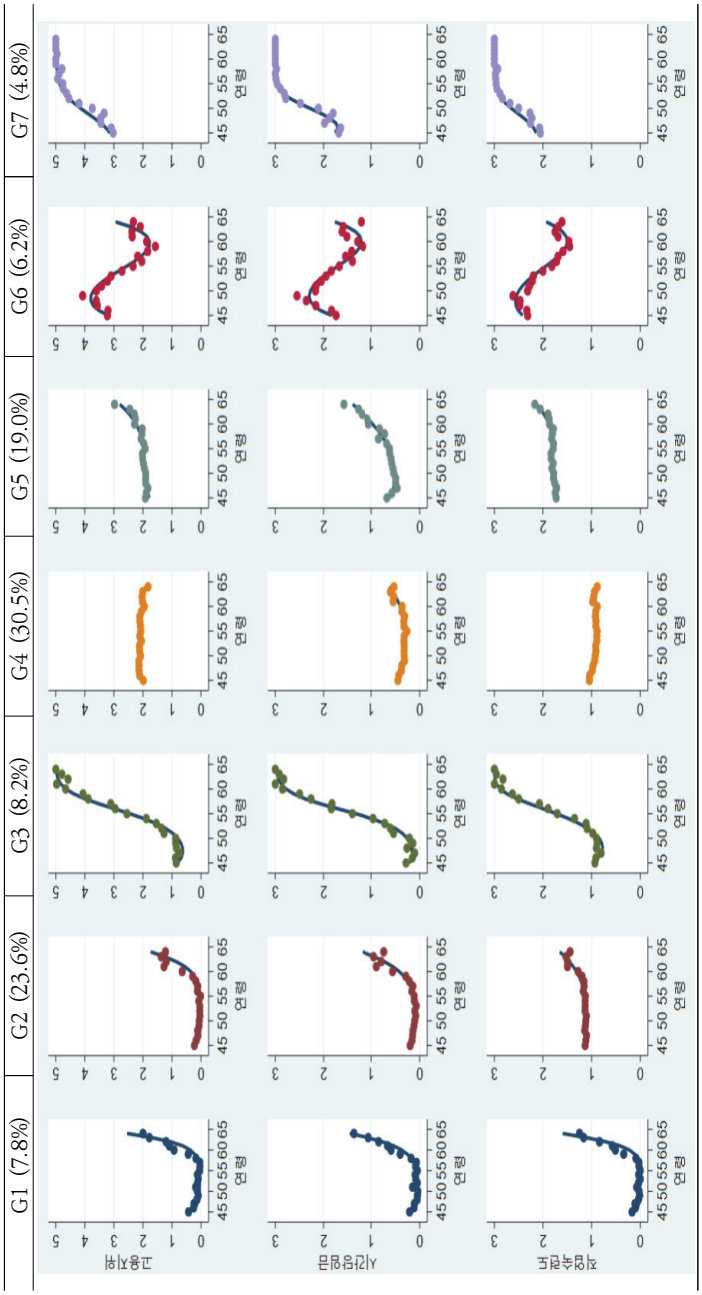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3차 연도~24차 연도 활용 저자 작성

[그림 4-2] 남성 중년 출생 코호트 1946~1955년생 대상 노동 불안정성 궤적 유형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3차 연도~24차 연도 활용 저자 작성

[그림 4-3] 남성 중년 출생 코호트 1956~1965년생 대상 노동 불안정성 궤적 유형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3차 연도~24차 연도 활용 저자 작성

나. 여성 중년 표본 대상

여성 중년층의 45세 이후 64세까지 노동 불안정성 궤적을 살펴보기 위해, 앞에서와 동일한 노동 불안정성 지표에 대해 집단중심 다중추세분석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1946~1965년생이며, 추가로 출생 코호트를 46~55년생과 56~65년생 그룹으로 구분하여 코호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포함된 출생 코호트를 고려할 때, 여성의 경우 출산·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좀 더 엄밀하게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중년 연령대에서의 노동 불안정성 양상을 확인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남성과 여성 표본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정도로만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표 4-10〉은 여성 표본을 대상으로, 최적 집단 수를 2개에서 8개로 늘려감에 따른 BIC 값을 보여주는데, 집단 수가 7개에서 8개로 늘어남에 따라 BIC 값의 증가가 유의하게 나타나나, 집단 수가 8개인 경우 구성비가 3%인 집단이 나타나기에, 여기서는 최적 집단의 수를 7개로 선택하였다. 각 유형의 궤적 모형은 3차 함수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선형의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4-10〉 여성 중년 대상 최적 집단 수 추정

궤적 수	함수 차수	BIC (n=93,914)	BIC (n=2,103)
2	33	-112900.21	-112847.03
3	333	-108034.33	-107956.45
4	3333	-104108.94	-104006.36
5	33333	-102227.21	-102099.94
6	333333	-99690.20	-99538.24
7	3333333	-98394.92	-98218.27
8	33333333	-96937.08	-96735.74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3차 연도~24차 연도 활용 저자 작성

[그림 4-4]는 여성 중년층을 대상으로, 고용 지위, 임금 수준, 직업 숙련도 3가지 차원에서 측정한 노동 불안정성 궤적을 유형화한 결과를 보여준다. 남성 중년층과 비교 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전반적으로 저숙련 자영업 불안정형의 구성비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상용직의 임금근로자 유형은 낮은 모습을 보인다.

○ 그룹1 (6.6%): 고-중숙련 후기 불안정형

- 고용 지위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분포가 함께 나타나며, 이에 따라 직업 숙련도 수준도 고숙련과 중숙련이 함께 나타남.
- 50대 중반 이후부터 고용 지위, 임금, 직업 숙련 측면에서 측정한 불안정성이 높아지기 시작하지만, 노동시장을 완전히 이탈하지는 않는 그룹임.
- 노동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50대 중반 이후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과 저임금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룹2 (8.7%): 저숙련 조기 불안정형

- 직업 숙련도 측면에서 저숙련 직업의 분포가 높으며, 40대 중반 이후부터 고용주, 자영업자 등의 지위를 거쳐 50대 초중반에 노동시장을 이탈함.
-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과 저임금 사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룹3 (12.7%): 저숙련 후기 불안정형

- 전체적인 노동 불안정성의 궤적 모양은 그룹2(저숙련 조기 불안정형)와 유사하게 나타나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연령이 50대 초중반 이후부터 시작되어 50대 후반부터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과 저임금 사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룹4 (9.9%): 중-저숙련 무급가족 유지형

- 45~64세 연령대에서 불안정성이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고용 지위와 임금 수준을 함께 고려할 때 무급가족종사자의 분포가 많은 유형으로 판단됨.

○ 그룹5 (32.5%): 저숙련 자영업 유지형

- 그룹2(저숙련 조기 불안정형) 및 그룹3(저숙련 후기 불안정형)과 유사하게 40대 중반에 고용주의 분포가 높은 그룹이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자영업을 지속하는 그룹임.
- 50대 후반 이후 고용주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이행하는 형태를 보이며, 이에 따라 임금 수준도 저임금(또는 생활임금) 수준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아져 불안정성이 높아짐.

○ 그룹6 (10.6%): 후기 노동시장 진입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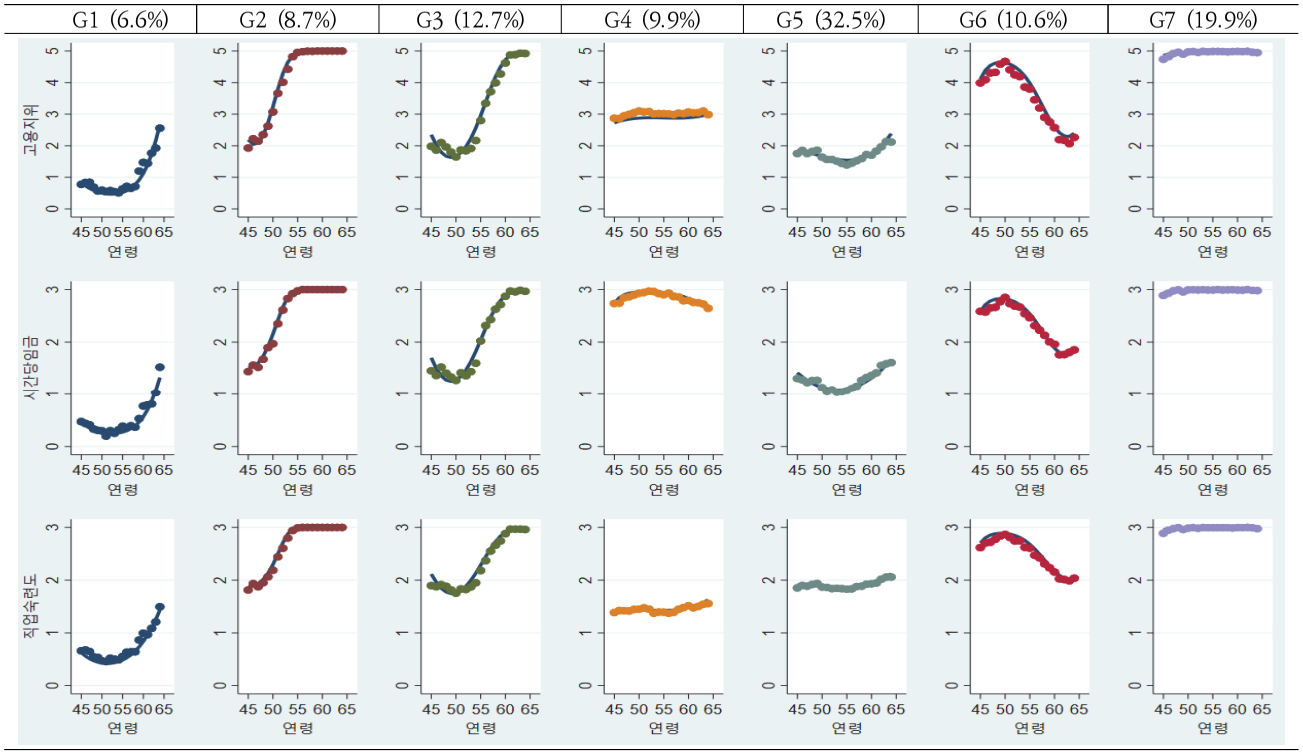
- 50대 중반까지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 상태로 있다가 이후 무급가족종사자 또는 자영업자 등으로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한 그룹으로, 노동시장 진입 이후 임금 불안정성이 감소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함.

○ 그룹7 (19.9%): 만성 미취업 불안정형

- 중장년층 여성 중 그룹5(저숙련 자영업 유지형)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으로, 40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

다음으로 출생 코호트별 노동 불안정성 궤적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46~55년생 그룹과 56~65년생 그룹을 대상으로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11〉과 〈표 4-12〉는 각 출생 코호트의 궤적을 유형화하는 데 최적 집단 수를 결정하기 위한 통계치를 나타낸다. 전체 출생 코호트 대상 분석과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코호트별 분석에서도 최적 집단 수를 7개로 설정하였다. [그림4-5]와 [그림 4-6]에서 볼 수 있듯이, 최적 집단 수를 7개로 선정할 때, 궤적 유형 중 구성비가 5% 이하인 그룹이 도출되기는 하나, 46~55년생 출생 코호트의 경우, 6개의 집단 수에서는 유의한 추정치가 도출되지 않기에, 여기서는 7개의 집단 수를 가정하였다.

[그림 4-4] 여성 중장년 대상 노동 불안정성 궤적 유형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3차 연도~24차 연도 활용 저자 작성

〈표 4-11〉 여성 중년 출생 코호트 1946~1955년생 대상 최적 집단 수 추정

궤적 수	함수 차수	BIC (n=37,965)	BIC (n=867)
2	33	-40648.32	-40595.41
3	333	-38602.10	-38524.62
4	3333	-37207.46	-37105.41
5	33333	-36699.29	-36572.68
6	333333*	NE	NE
7	3333333	-35266.94	-35091.20

주: *는 분산행렬의 비대칭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3차 연도~24차 연도 활용 저자 작성

〈표 4-12〉 여성 중년 출생 코호트 1956~1965년생 대상 최적 집단 수 추정

궤적 수	함수 차수	BIC (n=55,949)	BIC (n=1,236)
2	33	-72042.98	-71989.61
3	333	-68821.34	-68743.18
4	3333	-67258.66	-67155.72
5	33333	-65423.35	-65295.63
6	333333	-63752.23	-63599.72
7	3333333	-62697.89	-62520.61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3차 연도~24차 연도 활용 저자 작성

〈표 4-13〉은 [그림 4-4]에서 [그림 4-6]의 노동 불안정성 궤적 유형을 요약하여 나타낸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출생 코호트별 여성 중년층의 노동 불안정성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고용 지위에 기반할 때, 상대적으로 상용직 및 임시·일용직이 많이 분포해있는 고-중숙련 후기 불안정형의 경우, 46~55년생 코호트에 비해 56~65년생 코호트는 50대 후반 은퇴 연령까지는 노동 불안정성이 낮은 편으로 나타난다. 46~55년생 코호트의 경우, 40대 중반 상용직에서 임시·일용직, 고용주 및 자영업으로 이행하는 패턴을 보이면서, 임금 수준도 50대 중반 이후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그림 4-5]의 그룹1 그래프 참조). 56~65년생 코호트의 경우, 고용 지위 항목 값이 1 근

처에 주로 분포하고 있어 46~55년생 코호트에 비해 임시·일용직 분포가 많은 것으로 보이나, 50대 후반까지는 각 지표에서 안정적인 패턴을 보이다가 그 이후 불안정성이 빠르게 증가하여 실업 상태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4-6]의 그룹1 그래프 참조). 다만, 두 출생 코호트 모두에서 이 유형의 구성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저숙련 후기 불안정형의 경우, 두 출생 코호트에서 다소 다른 특성이 나타나는데, 46~55년생의 경우, 50대 중반까지 상대적으로 고용주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다가 자영업, 실업 등의 상태로 이행하는 반면, 56~65년생은 임시·일용직, 상용직의 분포가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들 그룹의 전반적인 임금 불안정성은 동일 코호트(56~65년생)의 고-중숙련 후기 불안정형(그룹1)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46~55년생 코호트의 동일 유형(그룹2)과 비교 시에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음을 반영하듯 임금 불안정성이 낮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그림 4-5]의 그룹2 그래프 및 [그림 4-6]의 그룹2 그래프 참조).

저숙련 조기 불안정형의 경우, 두 코호트에서 구성비 비중이나 불안정성의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저숙련 직업에 종사하던 여성 중년층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실업 등의 상태로 이행하면서 50대 초중반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양상을 보인다. 저숙련 자영업 유지형의 경우, 두 코호트 모두에서 구성비 비중이 가장 높은 유형으로, 45~64세 기간에 고용 불안정성과 직업 숙련도 불안정성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양상을 보인다. 다만, 전반적인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과 저임금 사이로 나타나며, 56~65년생 코호트에서는 중년층 후반기에 이를수록 임금 불안정성이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4-6]의 그룹3 그래프 참조).

중-저숙련 무급가족 유지형은 여성 중년층에서만 나타나는 유형으로, 56~65년생 코호트에서는 구성비 비중이 다소 감소한 모습을 보인다. 이들 유형의 경우, 고용 불안정성은 3 근처에 분포해 있어 자영업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임을 보여주는데, 임금 불안정성 항목이 3 근처(임금=0)에 대다수 분포하고 있어, 최저임금 이하 임금 수준의 자영업자보다는 무급가족종사자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4-5]의 그룹4 그래프와 [그림 4-6]의 그룹5 그래프 참조). 후기 노동시장 진입형의 경우도 여성 중년층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이해된다. 두 출생 코호트 모두에서 50대 초중반까지는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상태로 있다가 50대 초중반부터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등의 형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4-5]의 그룹5 그래프와 [그림 4-6]의 그룹4 그래프 참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도 일부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해당 유형의 비중이 남성 중년층 분석에서 변동성이 큰 불안정 유형(각 출생 코호트의 그룹6)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중장년 여성에게서 더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양상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만성 미취업형은 두 출생 코호트 모두에서 45세부터 지속적으로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유형으로, 남성 중장년층과 비교 시 상당히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46~55년생 코호트에서는 해당 유형의 비중이 29.1%로, 7개 그룹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6~65년생 코호트의 경우, 만성 미취업 유형의 비중은 16.6%로 46~55년생 코호트보다는 상당히 감소한 수준으로 나타나나, 56~65년생 코호트에서도 만성 미취업 불안정형이 저숙련 자영업 유지형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남성 중년층과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표 4-13〉 여성 중년 대상 노동 불안정성 궤적 유형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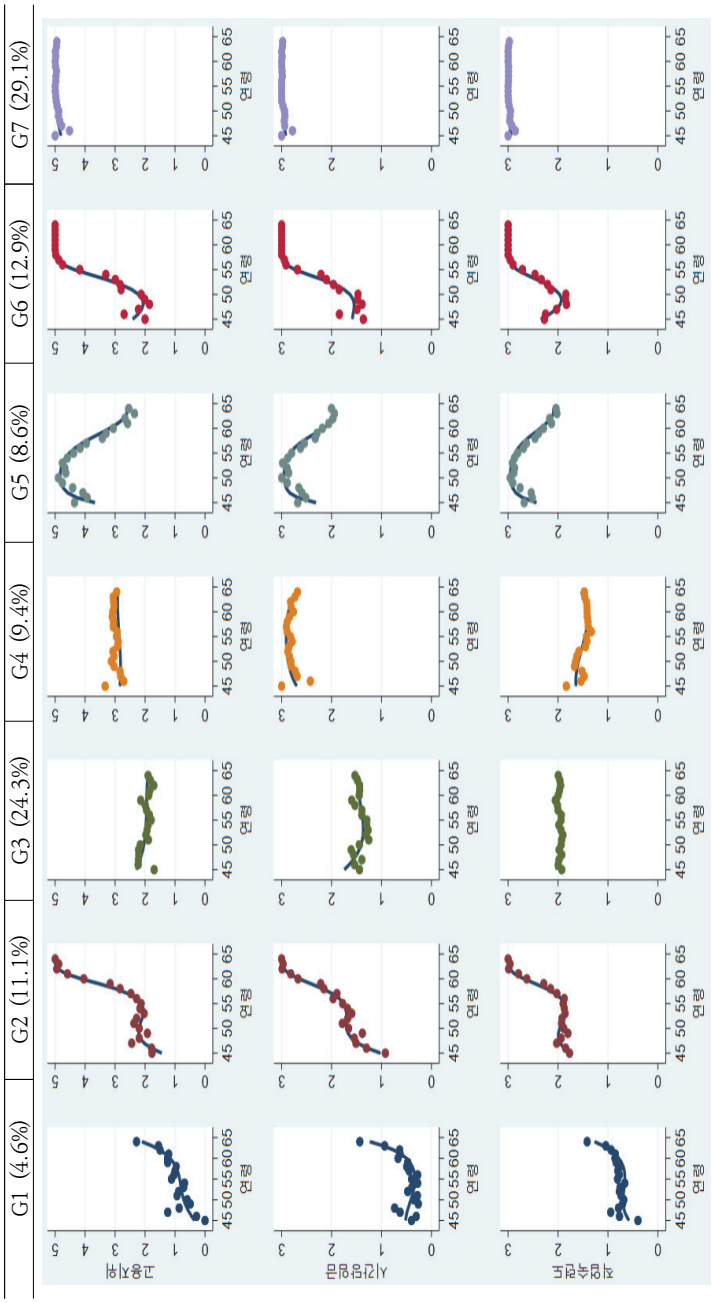
(단위: %)

유형		전체 표본	출생 코호트 1 1946~1955년생	출생 코호트 2 1956~1965년생
임금 근로자	고-중숙련 후기 불안정형	6.6% (G1)	4.6% (G1)	4.7% (G1)
임금+비임금 근로자	(중)저숙련 후기 불안정형	12.7% (G3)	11.1% (G2)	13.1 (G2)
비임금 근로자	저숙련 조기 불안정형	8.7% (G2)	12.9% (G6)	12.8% (G6)
	저숙련 자영업 유지형	32.5% (G5)	24.3% (G3)	32.7% (G3)
	중-저숙련 무급가족 유지형	9.9% (G4)	9.4% (G4)	8.5% (G5)
	후기 노동시장 진입형	10.6% (G6)	8.6% (G5)	11.6% (G4)
기타	만성 미취업 불안정형	19.9% (G7)	29.1% (G7)	16.6% (G7)

주: 괄호 안의 그룹 표시는 각각의 대상 분석에서 도출된 그룹을 의미하며, 전체 표본의 경우 [그림 4-4]의 그룹, 첫 번째 출생 코호트는 [그림 4-5]의 그룹, 두 번째 출생 코호트는 [그림 4-6]의 그룹 번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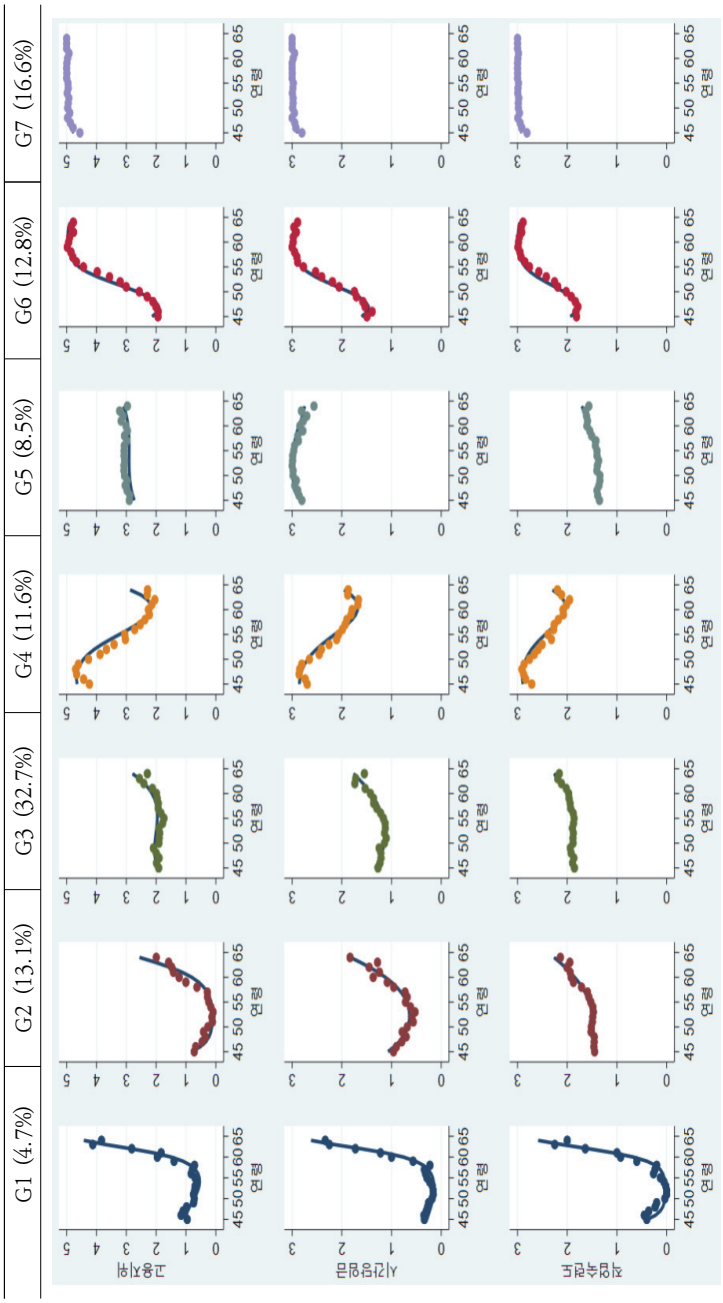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3차 연도~24차 연도 활용 저자 작성

[그림 4-5] 여성 중년 출생 코호트 1946~1955년생 대상 노동 불안정성 궤적 유형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3차 연도~24차 연도 활용 저자 작성

[그림 4-6] 여성 중년 출생 코호트 1956~1965년생 대상 노동 불안정성 궤적 유형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3차 연도~24차 연도 활용 저자 작성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중년층의 노동 생애 불안정성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45~64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동 불안정성은 고용 지위(경제활동 상태 및 종사상지위), 시간당 임금 수준(최저임금, 저임금 및 생활임금 기준), 직업 숙련도(고숙련, 중숙련, 저숙련 등) 세 가지 하위 차원에서 지표를 구성하였으며, 각 연령 시점에서 노동 불안정성 지표를 측정한 후 집단중심 다중추세분석법을 활용하여 중년층이 경험하는 노동 불안정성 궤적을 유형화하였다.

남성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노동 생애 궤적은 6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표 4-9〉 참조), 크게 보면 40대 중반에서 50대 중후반까지 임금근로자로 근로하다 이후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유형과, 40대 중반 이후 고용주 또는 자영업 상태를 유지하는 유형으로 나타난다. 이들 출생 코호트를 1946~1955년생과 1956~1965년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는 노동 생애 불안정성 궤적 유형이 7개로 구분되기는 하였으나, 전체 표본 대상 분석 시 도출된 유형별 특성과 크게 다른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코호트별 비교 시, 56~65년생 코호트에서 자영업 유형은 다소 감소한 모습을 보이며, 특히 저숙련 자영업 불안정형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56~65년생 코호트에서 50대 후반 이후 노동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후기 불안정형 비중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 있다. 반면, 50대 초중반부터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중숙련 조기 불안정형의 경우, 56~65년생 코호트에서 해당 유형의 구성비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노동 불안정성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연령대가 더 당겨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여성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이들의 노동 생애 궤적은 7개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대체로 남성 중년층에 비해 고용 불안정성, 임금 불안정성, 직업 숙련 불안정성이 모두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40대 중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비경제활동 상태로 있는 만성 미취업 유형의 비중이 약 19.9%로 나타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저숙련 자영업 유지형으로 약 32.5%의 구성비를 보인다. 물론, 이러한 양상의 기저에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임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여성 중년층 표본에서 더 특징적인 점은 중-저숙련 무급가족 유지형이 약 9.9% 수준으로 관찰되며, 50대 중후반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저숙련 후기 노동시장 진입형도 10.6% 수준으로 관찰된다는 것이다. 추가로 출생 코호트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코호트에서 만성 미취업형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중)저숙련 (임금근로자) 후기 불안정 유형과 저숙련 자영업 유지형 비중이 46~55년생 코호트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남성 중년층 중 40~50대에 임금근로자였던 경우,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고용 지위, 임금 수준, 직업 숙련도 측면에서 측정한 노동 불안정성이 다소 높아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비임금근로자(고용주 및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출생 코호트별로 특별히 불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볼만한 현상은 관찰되지 않는다. 여성 중장년층의 경우 미취업 유형을 제외하면,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노동시장 참여가 더욱 증가하면서 노동 불안정성도 더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영업자와 일부 임금근로자를 제외하고는 50대 이후 연령에서 대체로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임금 불안정성을 겪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본 장에서 노동 불안정성은 고용 지위, 임금 수준, 직업 숙련도 세 가지 측면에서 측정하였는데, 대체로 임금 불안정성은 고용 지위 및 직업 숙련 불안정성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고용 부문의 경우 종사상지위에 기반하여 불안정성 항목을 구성하였는데, 점점 비표준화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고용 형태를 고려할 때, 종사상지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례로, 최근 24차 연도(2021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에서 노무제공자(특수고용 형태 근로자)로 분류되는 표본의 종사상지위 응답을 보면, 약 60%는 상용직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각 연도).[12] 물론, 동 자료에서 전체 취업자 중 노무제공자 비중은 약 1.3% (표본 기준)로 매우 낮으나, 고용 안정성을 측정하는 데 현재의 종사상지위[13] 분류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12) 24차 연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에서 노무제공자로 분류된 145명 표본 중 87명이 종사상지위 변수에서는 상용직으로 응답하였고, 나머지는 임시·일용직으로 응답함. 다른 조사연도에서는 고용주/자영업자로 응답한 표본도 가끔 나타남(한국노동연구원, 각 연도).

13) 국제노동기구(ILO)는 2018년 국제종사상지위분류(ICSE-93)을 25년만에 전면 개정하였음. 비전형 고용 형태 증가로 기존 종사상지위분류로는 고용구조 측정에 있어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전면 개정. 우리나라 통계청도 2022년 한국종사상지위분류 1차 개정을 하였음. 개편 사항은 1) 분류항목 개편으로 1-1) 의존 계약자 항목 신설, 1-2) 임금 근로자 항목 세분화, 1-3) 자영업자 항목 세분화와 2) 분류항목 기준 개편으로 2-1) 고용주의 일상적 고용 조건의 구체화, 2-2) 무급 가족 종사자의 가족을 돕는 일의 범위 확장 관련 내용 포함.

제5장

중년층 노동 불안정(직업 상실)이 노동궤적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분석 결과
제3절 소결

제 5 장 중년층 노동 불안정(직업 상실)이 노동궤적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

제1절 분석 개요

1. 분석 목적

경력 후반기의 실직은 점점 더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재정적 압박에 직면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늦은 퇴직을 장려하기 위해 연금정책과 기타 사회 프로그램을 개혁했다(OECD, 2015). 이러한 개혁 중 상당수는 조기 퇴직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실직한 후기중년 근로자가 어떤 조건하에서 조기 퇴직을 피하고 노년에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제4장에서 살펴본 노동 생애 불안정 양상에 이어 불안정을 야기하는 대표적 위험인 늦은 나이의 경력 상실이 중년층의 삶에 주는 영향이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직접적인 대상이 될 중년층의 노동시장에서의 양상, 그리고 실직의 결과를 살펴보고 분석하여 정리하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완화하고 늦은 퇴직을 장려하는 정책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단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노동 불안정성이 야기할 수 있는 중장기 결과를 살펴봤다. 노동 불안정을 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 후기 직업 상실, 즉 45세에서 59세 사이 주된 일자리에서의 비자발적 실직이 이후 노동궤적과 소득 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이때 소득은 개인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 종합

소득변수에 가구원 수를 고려한 소득을 이용하여 후기 직업 상실이 이후(최대 10년 동안) 취업 참여 및 소득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다.

2. 분석 방법

가.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중년층의 나이를 45~64세로 보며, 이들의 직업 상실(후기 주된 일자리에서의 비자발적 실직)의 중장기적 영향을 분석한다. 따라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을 가진 패널조사 자료로 분석을 실시하며, 패널조사 중 가장 오랜 기간 조사가 진행되어온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활용하였다. 동 자료는 1998년(1차)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인 2021년(24차)까지 조사자료가 공개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3차에서 24차 연도까지 활용한 제4장과 달리 6차 연도(2003년)부터 23차 연도(2020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본 장에서 주요하게 분석할 변수가 소득 관련 변수이므로 무응답 대체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무응답 대체자료는 현재 23차(2020년)까지 공개되어 있다. 또한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으나,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Entropy Balancing in Difference-in-Difference 방법을 활용한다. 이때 매칭을 위한 변수로 중년층의 노동과 관련해서 건강 관련 변수가 중요하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에는 건강에 대한 본인 응답이 6차 연도(2003년)부터 조사되어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6~23차의 무응답 대체자료와 직업력 자료를 활용하였다.

나. 분석 방법 및 분석 대상

1) 변수 정의

핵심 독립 변수는 후기 직업 상실이다. 후기 직업 상실은 45세에서 59세 사이에 주된 일자리에서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후기 직업 상실의 연령을 45세에서 59세로 설정한 이유는 한국의 노동시장 현황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 연령이 2006년 기준 50.3세(남 52.4, 여 48.3),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3년 5월 기준 49.4세(남성 51.1 여성 47.8)로, 2020년대에 그 연령이 40대 후반으로 낮아졌다(통계청, 2023d). 따라서 한국의 법정 정년 연령인 60세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 연령을 고려하여 45세에서 59세 사이를 후기 직업 상실 연령 범위로 설정하였다. 다만 실직 연령의 경우 통계청의 오랜 일자리에서 그만둔 평균 연령을 고려하여 45~52세에 직업 상실을 경험한 사람과 53세에서 59세에 직업 상실을 경험한 사람을 구분하여 분석한다.

한국노동패널의 직업력 조사에서는 전년도 이후 주된 일자리에서 직장을 그만뒀는지 여부와, 주된 일자리(main job)에서 직장을 그만둔 이유를 묻고 있다. 그만둔 이유에 있어서는 비자발(원하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그만두었다)/자발(원해서 스스로 그만두었다)과 퇴직 사유로 직장의 파산·폐업·휴업, 정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년퇴직, 계약기간 끝나서 등 총 22가지 사유로 구분하여 질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45세에서 59세 사이에 주된 일자리에서 원하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그만두었다고 응답한 사람을 후기 직업 상실로 정의한다.

소득의 경우 개인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 가구 총소득에서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

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을 활용하고자 한다.

2) 분석 대상 및 분석 방법

분석 방법은 Entropy Balancing in Difference-in-Difference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에 포함되려면 응답자는 직장을 잃을 “위험”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된 일자리에서 급여를 받고 일한 경우에 실직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를 통해 직장을 잃기 전 의미 있는 수준의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들로만 분석 대상을 한정했다. 그리고 종사상지위가 자영업인 사람은 “위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들의 실직 위험은 임금근로자와는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임금근로자로서 실직한 후 자영업에 진입하는 사람은 본 연구 대상에 포함한다.

대상은 실직 후 최대 10년, 즉 t+10년까지를 추적하나, 반드시 해당 시점까지 모두 관찰될 필요는 없다. 즉 불균형 패널 디자인을 사용한다. 단, treatment 이후 시점에 최소한 한 기간 이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만을 포함하며 동시에 treatment 시점 전 2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분석에 포함한다. 즉 최소 4년 이상 관측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기준으로 출생 코호트 범위를 살펴보면 1946년생과 1974년생까지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1946년생의 경우 2003년(6차)에 57세로 2005년(8차)에 실직을 경험한 사람이며, 가장 나이가 어린 1974년생의 경우 2019년(22차)에 실직을 경험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특정 연도 t에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사람은 본 연구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실제 t해에 비자발적으로 실직을 경험했다면 treatment group(Displaced workers)으로 분류된다.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하지 않는 경우 potential control group으로 분류된다. 즉 실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기를 선

택한 사람은 potential control group으로 분류된다.

비자발적 실직이 결과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기 위해 DID 설계를 활용한다. 본 설계 방법을 통해 해고된 근로자의 고용 및 소득 궤적을 해고되지 않은(계속 근로, 스스로 선택해서 그만둔 근로자) 근로자의 궤적과 비교한다. 이때 DID의 핵심 가정인 "공통 추세 가정"은 비교 그룹의 궤적이 해고가 없을 때 해고된 근로자가 경험했을 궤적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임금 인상 및 경기 순환과 같은 기간 효과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 상태 변화 및 이와 관련한 개인 소득 변화도 포착된다. 이를 위해 위에서 정의한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 이들의 2년 전에 측정되는 변수 정보를 활용한다. 엔트로피 균형 조정(Hainmueller, 2012)을 사용하여 관찰 가능한 변수를 통해 잠재적 비교집단(potential control group)과 처치 집단(treatment group)을 일치시키고자 한다. 엔트로피 균형 조정을 위해 활용하는 변수로 t-1, t-2 시점의 소득,[14] 실직 당시의 연령, 교육수준, 건강에 대한 만족도를 고려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매칭된 비교집단(Composition-adjusted control group)을 분류하였다.

모든 분석에 있어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출생 코호트에 따른 실직의 고용 및 소득 궤적의 차이와 실직 연령 기준 고용 및 소득 궤적의 차이 또한 구분하여 추가 분석하였다. 출생 코호트의 경우 제4장과 동일한 1946~1955년생, 1956~1965년생, 그리고 1966~1974년생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최종 분석 표본은 아래 〈표 5-1〉과 같다.

14) t-2 시점의 연간근로시간도 고려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시간 변수의 결측치로 인한 표본 손실 문제로 제외하였다.

〈표 5-1〉 분석 대상 표본

(단위: 명, %)

구분		treatment	potential control
총계		1216(100.0)	4346(100.0)
출생 코호트	1946~1955	356(29.3)	1043(24.0)
	1956~1965	649(53.4)	1649(37.9)
	1966~1974	211(17.4)	1654(38.1)
성별	남성	631(51.9)	2568(59.1)
	여성	585(48.1)	1778(50.9)

주: 괄호 안은 비율(%)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6차 연도~23차 연도 활용 저자 작성

제2절 분석 결과

후기 직업 상실의 영향에 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기 전 성별, 실업 당시 연령, 그리고 교육수준에 따른 후기 직업 상실 분포를 살펴봤다. 분석 표본에서 성별에 따른 후기 직업 상실, 즉 비자발적 실직 경험 비율은 남성 23.0%, 여성 27.9%로 관측됐다. 45세~52세의 이른 연령에 직업 상실을 경험한 비율은 남성 약 19.1%, 여성 27.8%였다. 53~59세의 연령에 직업 상실을 경험한 비율은 남성 약 39.0%, 여성 33.8%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후기 직업 상실 경험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저학력일수록 비자발적 실직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에 따른 직업 상실 경험은 예상했던 방향이긴 하나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교육수준에 따른 직업 상실 비율에 있어 성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후기 직업 상실 발생 비율

구분		남성	여성
		mean	mean
후기 직업 상실 경험		0.230	0.279
당시 연령	45~52세	0.191	0.278
	53~59세	0.390	0.338
교육수준	중졸 이하	0.308	0.319
	고졸	0.225	0.270
	대졸 이상	0.176	0.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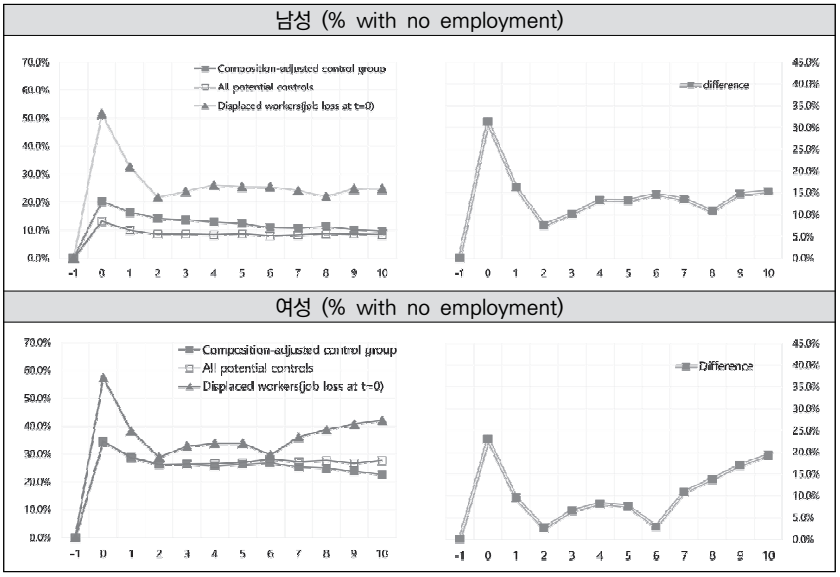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6차 연도~23차 연도 활용 저자 작성

〔그림 5-1〕은 DID 설계를 이용하여 추정된 일자리 이탈에 대한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이다. 45세에서 59세 사이 비자발적으로 주된 일자리(main job)를 잃은 남성 중 약 51.5% 이상이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

났다. 1년 차 32.5%, 2년 차 21.6%로 일자리 회복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후 미취업 남성의 비율은 소폭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어느 정도 은퇴로 접어드는 연령이 됨에 따른 자발적 은퇴 행동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제4장에서 살펴봤듯 불안정한 노동 생애 궤적을 보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중년층 비율이 높음을 고려하면 비자발적인 실직 후 일자리를 잃고 쉽게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기 어려움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비교군, 특히 매칭한 비교집단(Composition-adjusted control group)의 노동 공급과 비교해보면, 비자발적 직업 상실이 없는 상태에서도 약 14.1% 수준의 남성들은 미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비자발적 직업 상실 집단과는 격차를 보인다. 이러한 격차는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긴 하나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비자발적 직업 상실 경험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6년 차)부터는 이들의 미취업률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비자발적 직업 상실 경험이 없는 집단과 격차를 보인다. 그럼에도 남성과 여성 모두 연령이 증가함에도 일정 나이까지 미취업률이 일정 수준 유지되는 것은 늦은 나이까지 일을 하는 한국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에서도 시간이 지남에도 이들의 미취업률 격차가 수렴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결국 후기 직업 상실(비자발적 실직 경험)이 이후 이들의 고용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영구적으로 직장을 그만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림 5-1〕 후기 직업 상실이 미취업에 미치는 효과

(단위: %)



주: 가로축은 직업 상실(t=0) 전후 년도, 세로축은 미취업 비율(% with no employment)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6차 연도~23차 연도 활용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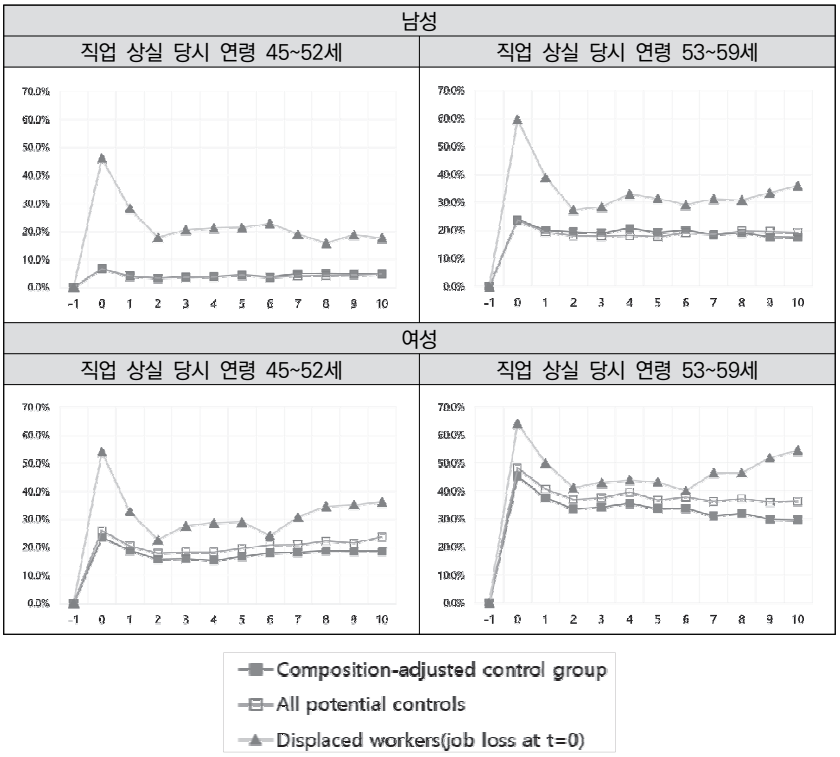
〔그림 5-2〕는 주된 일자리에서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당시 연령대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이다. 한국의 법정 정년 연령과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 연령(49.4세)을 고려해 직업 상실 당시 연령 45~52세 집단과 53~59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봤다. 45세에서 52세 사이에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한 남성의 경우 매칭한 비교집단과의 차이가 약 39.4% 포인트에 달한다. 이러한 격차는 실직 후 2년 차까지 줄어들지만, 이후 격차는 소폭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3세에서 59세에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한 남성과 비교집단의 차이는 실직 후 2년 차에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며 그 후 미취업 남성의 비율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일반적인 패턴은 남성의 패턴과 비슷하다. 여성 또한 직업

상실 경험 집단과 미경험 집단 간에 이후 시점에서 격차가 나타나며, 이러한 격차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현상을 보이나 남성에 비해 집단 간 격차가 크지는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직업 상실 연령별로 이들 집단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조기 직업 상실이 이후 이들의 취업궤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높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53세에서 59세에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하는 경우 은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45세에서 52세의 비자발적 실직 경험 이후 노동궤적은 은퇴 행동의 반영이기보다는 실직 후 일자리를 잃고 쉽게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기 어려움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5-3〕의 출생 코호트별 후기 직업 상실에 따른 미취업 궤적을 살펴보면, 남성은 모든 출생 코호트에서 비교집단과의 차이는 직업 상실 후 처음에는 크게 나타나나 이후 비교집단과의 격차가 줄어들며 3년 차 정도부터는 유지된다. 이러한 격차가 사라지지는 않으며, 특히 최근 출생 코호트로 올수록 격차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격차가 크지 않으며 이들의 재취업 확률은 전체적으로 남성에 비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성도 최근 출생 코호트로 올수록 남성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2〕 직업 상실 연령이 이후 미취업에 미치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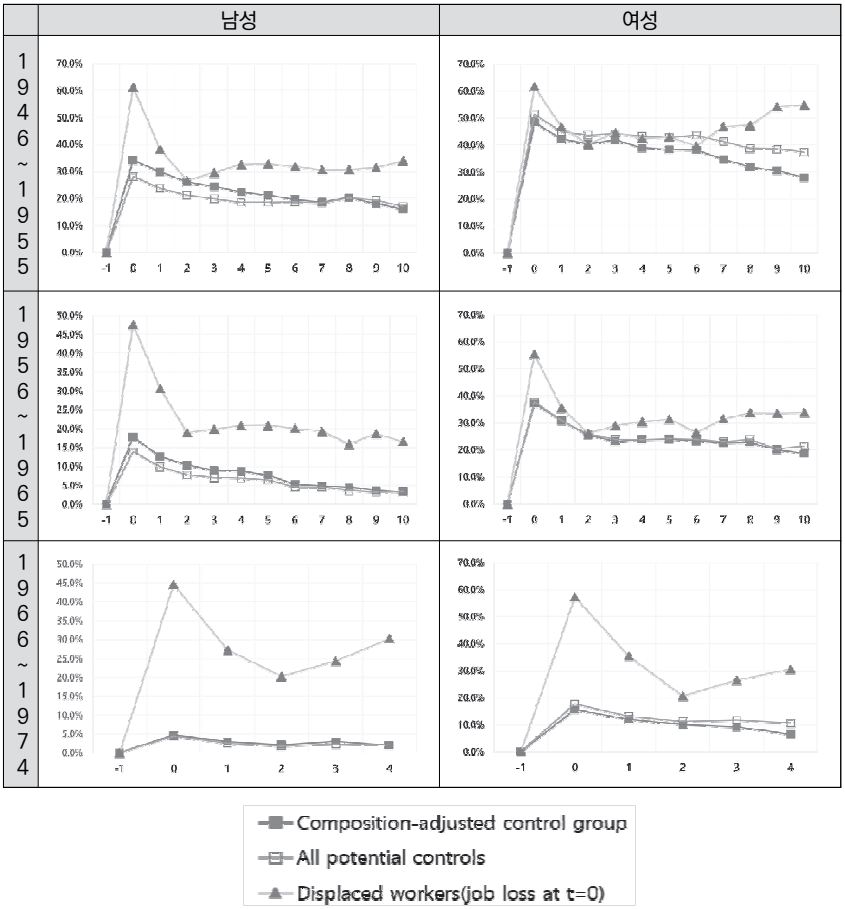
(단위: %)



주: 가로축은 직업 상실(t=0) 전후 년도, 세로축은 미취업 비율(% with no employment)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6차 연도~23차 연도 활용 저자 작성

〔그림 5-3〕 출생 코호트별 후기 직업 상실이 미취업에 미치는 효과

(단위: %)



주: 가로축은 직업 상실(t=0) 전후 년도, 세로축은 미취업 비율(% with no employment)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6차 연도~23차 연도 활용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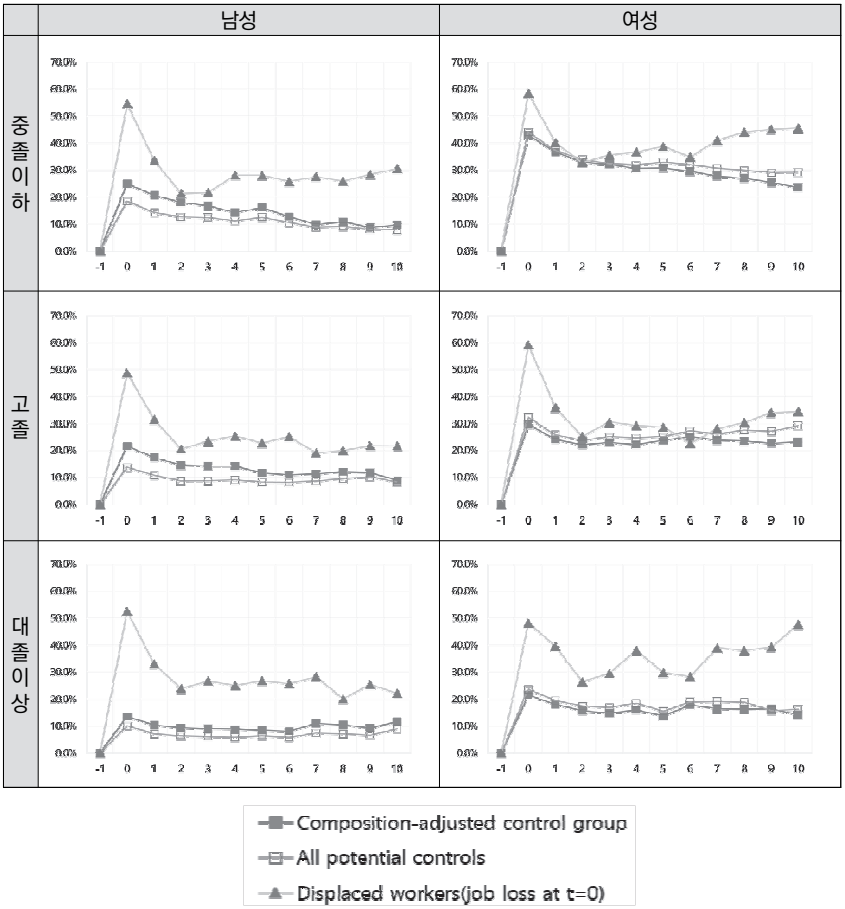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비자발적으로 주된 일자리(main job)를 잃은 저학력 남성의 미취업 비율이 높아지나 2년 차에는 매칭 비교집단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미

취업 남성의 비율은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고졸 남성의 경우 중졸 이하 남성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대졸 이상 남성의 경우 매칭한 비교집단과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나 시간이 지날수록(8년 차)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여성의 경우 학력수준에 따라 매칭한 비교집단과의 미취업 비율 격차는 차이를 보이나, 시간이 지날수록(6년 차부터) 격차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다음으로 〔그림 5-5〕는 후기 직업 상실이 균등화한 가구 총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45세에서 59세에 비자발적으로 주된 일자리를 잃은 남성의 비교집단과의 연간 소득 격차는 단기에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나 실직 후 5년 차부터 격차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앞에서 살펴봤듯 재취업 확률이 남성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음에 따라 시간에 따른 소득 변화의 추세는 남성과 반대이나, 격차에 있어서는 남성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앞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Heisig and Radl(2017)가 분석한 독일의 경우에도 중년(후기중년)의 직업 상실 경험이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직업 상실 경험 여부가 경제적 격차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일정 시점 이후 그 격차가 줄어들며 결국 수렴해간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누적되어 나타남에 따라 후기 직업 상실이 소득 손실에 있어 지속적인 흉터 효과(scarring effect)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4〕 교육수준별 후기 직업 상실이 미취업에 미치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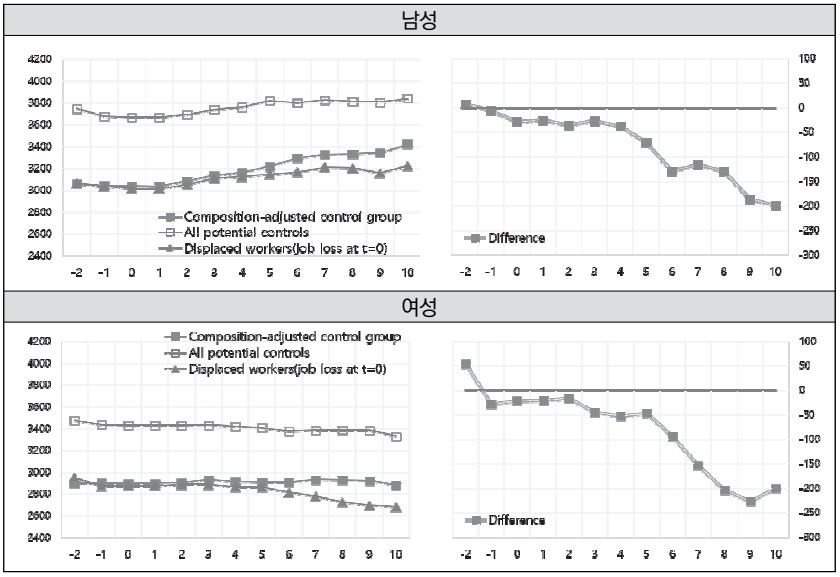
(단위: %)



주: 가로축은 직업 상실(t=0) 전후 년도, 세로축은 미취업 비율(% with no employment)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6차 연도~23차 연도 활용 저자 작성

〔그림 5-5〕 후기 직업 상실이 소득에 미치는 효과

(단위: 만 원)



주: 가로축은 직업 상실(t=0) 전후 년도, 세로축은 균등화한 가구 총소득(만 원)
자료: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6차 연도~23차 연도 활용 저자 작성

직업 상실 당시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45세에서 52세의 비자발적 실직 경험이 소득에 미치는 불이익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격차는 계속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53세에서 59세의 경우, 매칭된 비교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직업 상실 경험 여부가 장기적으로 경제적 격차를 유발하기는 하나 크게 차이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직업 상실 연령별로 이들의 집단 차이를 살펴본 결과, 조기 직업 상실이 이후 이들의 취업궤적뿐 아니라 소득에도 더욱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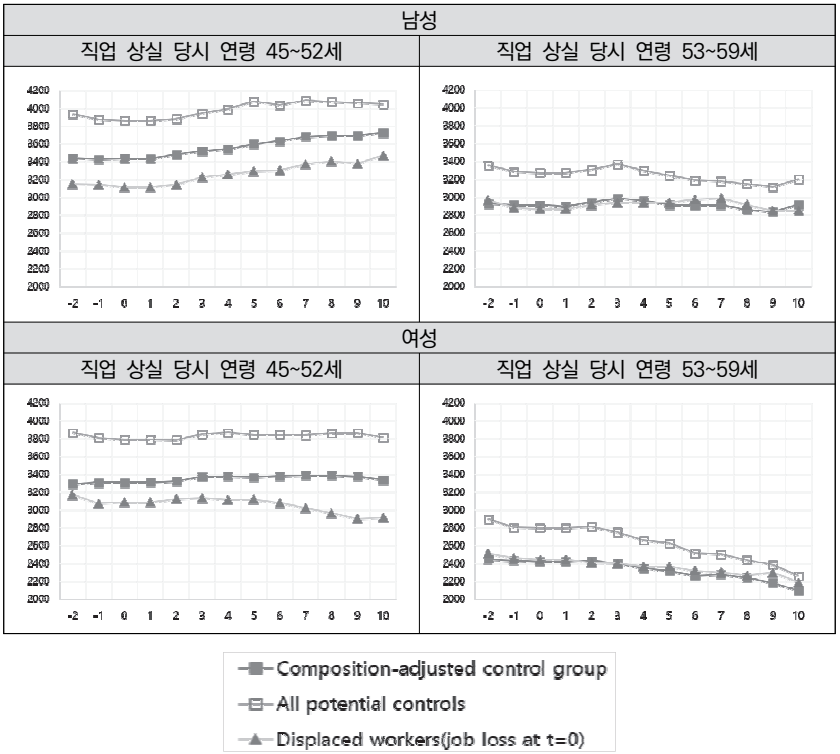
출생 코호트별 결과를 살펴보면, 1956~1965년생의 경우 비자발적 실직이 경제적 격차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 살펴봤듯

1956~1965년생의 경우 2008년 이후 40대 중반~50대 초반의 연령대이다. 이들의 경우 40대 중반~50대 초반 연령대에 경제위기 여파로 실업을 경험한 후 자영업, 고용주 등 고용 지위가 계속 변동하며 그에 따라 임금 수준과 직업 숙련도도 불안정하게 변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출생 코호트에서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한 사람의 경우 이후 노동 생애 불안정을 경험함에 따라 장기적 소득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른 소득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단기적으로 소득 격차를 보이지 않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 격차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경우 대졸 이상의 학력에서 주된 일자리에서의 비자발 실직이 소득에 주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대졸 이상의 남성의 경우 장기적으로 이들의 소득 격차는 수렴해가는 반면 여성의 경우 격차가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의 소득 격차는 다른 학력수준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며 길게 지속된다. 다만 고학력 중년의 경우 실제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을 반영하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직업 상실의 단기적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으나, 그 영향이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5-6〕 직업 상실 연령이 이후 소득에 미치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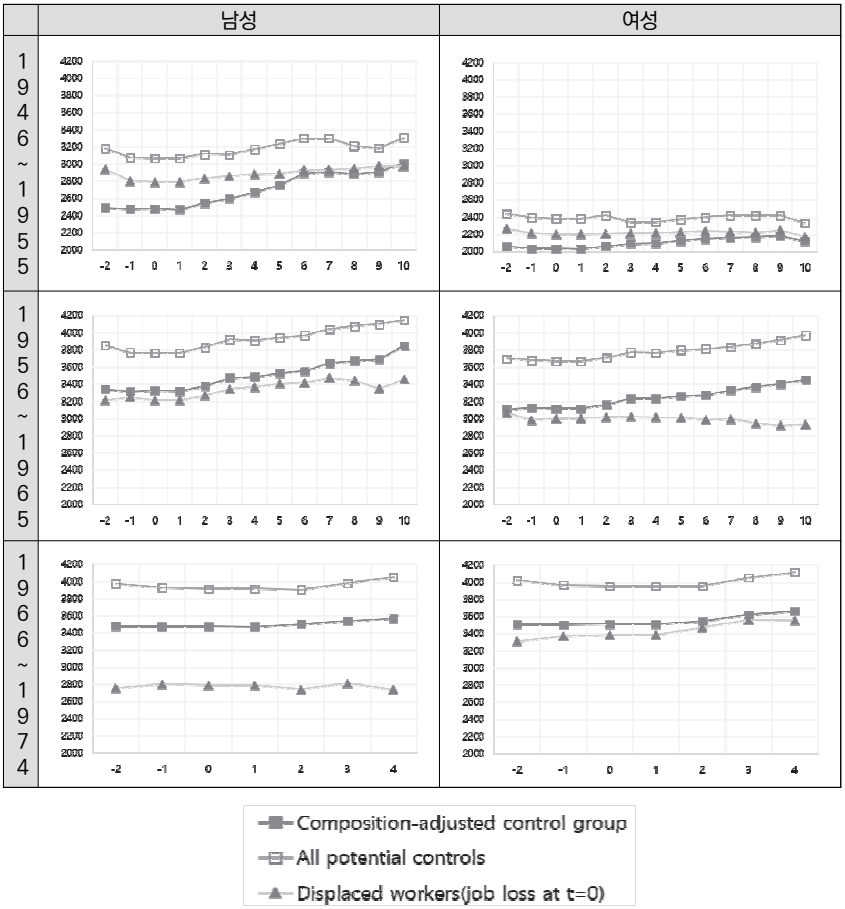
(단위: 만 원)



주: 가로축은 직업 상실(t=0) 전후 년도, 세로축은 균등화한 가구 총소득(만 원)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6차 연도~23차 연도 활용 저자 작성

〔그림 5-7〕 출생 코호트별 후기 직업 상실이 소득에 미치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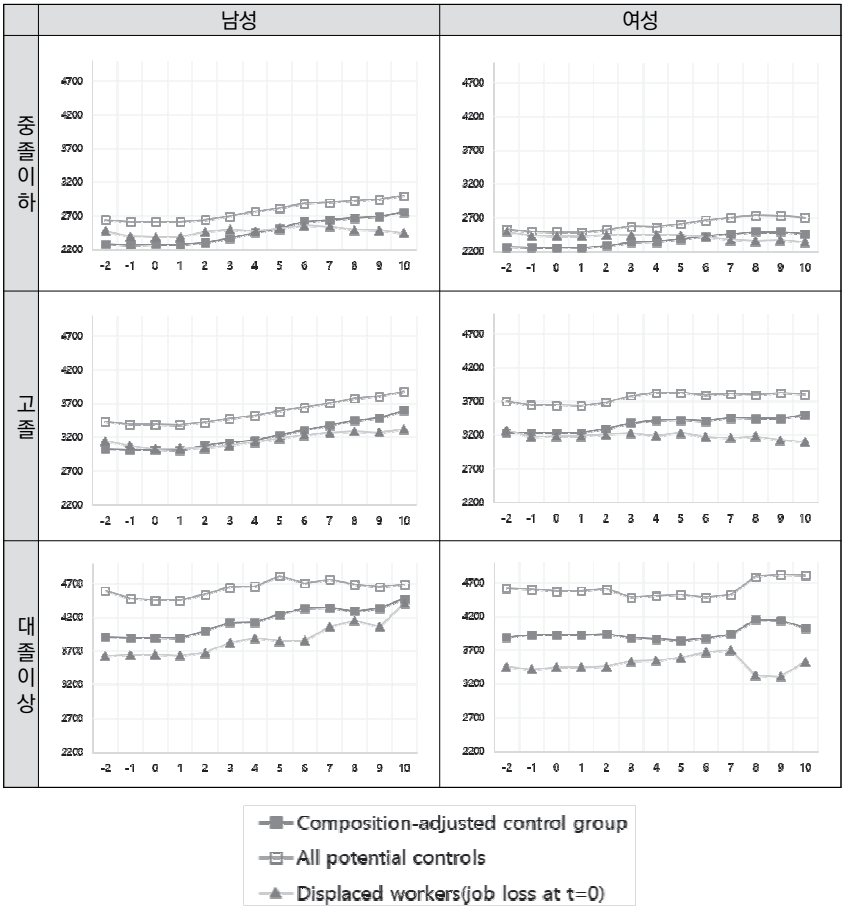
(단위: 만 원)



주: 가로축은 직업 상실(t=0) 전후 년도, 세로축은 균등화한 가구 총소득(만 원)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6차 연도~23차 연도 활용 저자 작성

〔그림 5-8〕 교육수준별 후기 직업 상실이 소득에 미치는 효과

(단위: 만 원)



주: 가로축은 직업 상실(t=0) 전후 년도, 세로축은 균등화한 가구 총소득(만 원)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6차 연도~23차 연도 활용 저자 작성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노동 불안정성이 야기할 수 있는 중장기 결과를 살펴봤다. 노동 불안정을 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 후기 직업 상실, 즉 45세에서 59세 사이 주된 일자리에서의 비자발적 실직이 이후 노동궤적과 소득 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이때 소득은 개인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 종합 소득 변수에 가구원 수를 고려한 소득을 이용하여 후기 직업 상실이 이후(최대 10년 동안) 취업 참여 및 소득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다.

분석 결과, 45세에서 64세의 한국 중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직업 상실이 중장기적 취업궤적과 소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다. 45세에서 59세 사이에 비자발적으로 주된 일자리(main job)를 잃은 남성과 비자발적 주된 일자리 실직을 경험하지 않은 비교집단(Composition-adjusted control group)의 미취업률 격차는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긴 하나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다. 특히 비자발적 실직 당시 연령별로 이들 집단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조기 직업 상실(45세에서 52세 주된 일자리에서의 비자발적 실직)이 이후 이들의 취업궤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층의 후기 직업 상실 이후 이들의 취업 참여 궤적은 은퇴로 접어드는 연령이 됨에 따른 자발적 은퇴 행동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제4장에서 분석한 대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노동 생애 궤적을 보이는 중년층의 비율이 높음을 고려하면 비자발적인 실직 후 일자리를 잃고 쉽게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기 어려움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53세에서 59세에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하는 경우 은퇴 행동

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45세에서 52세의 비자발적 실직 경험 이후 노동궤적은 은퇴 행동의 반영이기보다는 실직 후 일자리를 잃고 쉽게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기 어려움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45세에서 59세에 비자발적으로 주된 일자리를 잃은 남성의 비교집단과의 연간 소득 격차는 단기에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나 실직 후 5년차부터 격차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재취업 확률이 남성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시간에 따른 소득 변화 추세는 남성과 반대이나, 격차에 있어서는 남성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또한 조기 직업 상실이 이후 이들의 취업궤적뿐 아니라 소득에도 더욱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기 직업 상실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됨에 따라 지속적인 흉터효과(scarring effect)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후기 직업 상실이 취업 참여 및 소득수준에 주는 영향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직업 상실의 단기적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으나, 그 영향이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경우 대졸 이상의 학력에서 주된 일자리에서의 비자발 실직이 소득에 주는 영향은, 남성의 경우 장기적으로 소득 격차가 수렴해가는 반면 여성의 경우 격차가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고학력에서의 직업 상실로 인한 소득 격차는 다른 학력수준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며 길게 지속된다. 다만 고학력 중년의 경우 실제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을 반영하므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경력 후반기의 실직은 점점 더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재정적 압박에 직면한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늦

은 퇴직을 장려하기 위해 연금정책과 기타 사회 프로그램을 개혁했다. 이러한 개혁 중 상당수는 조기 퇴직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살펴봤듯 우리나라 중년층의 높은 비율이 이른 나이에 비자발적 퇴직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된 일자리에서의 비자발적 퇴직, 즉 직업 상실은 자발적 은퇴 행동을 유도할 수도 있으나, 비자발적인 실직 후 일자리를 잃고 쉽게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기 어려움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직업 상실은 이후 이들의 취업궤적뿐 아니라 소득에도 지속적인 부정적 효과를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10년 후까지 살펴봤으나, 평생 소득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다면 더 큰 경제적 충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노동시장 재진입 기회는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며(Zabel, 2022), 후기중년은 연령에 대한 고정관념, 기술 노후화, 건강 문제 등으로 노동 이동 및 노동시장 재진입 기회를 갖는 데 더 큰 장벽에 직면해 있다(Ebbinghaus & Radl, 2015). 그리고 Shahbazian & Bihagen(2022)의 연구에서는 근로연령층(prime age)의 소득 격차가 종종 영구 소득과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중노동시장 구조에 더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 및 직종, 그리고 직업의 생성·소멸 등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 이동이 어려운 특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노동 불안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중년 근로자가 조기 퇴직을 피하고, 노년에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 및 고민하는 것은 중요하다.

제6장

중년층 지원 정책 현황 및 한계점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중년층 지원 정책 현황
제3절 중년층 지원 정책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

제 6 장 중년층 지원 정책 현황 및 한계점

제1절 분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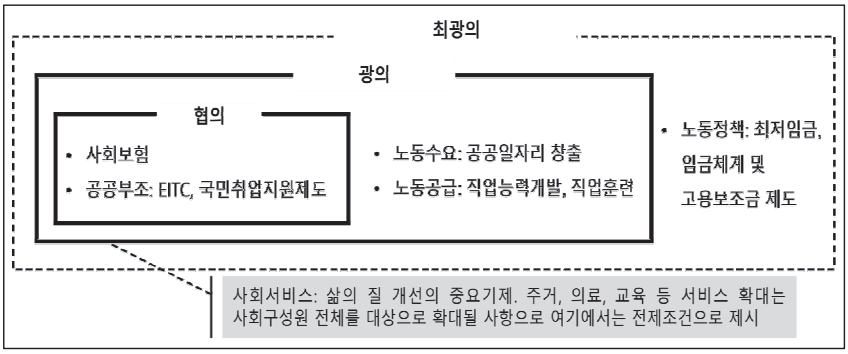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중장년 지원 정책은 모든 근로연령대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다룬다. 그 이유는 연구 배경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사회의 중년층은 핵심적인 경제활동 참여자라는 인식이 강해서 중년층 내에서 노동시장 진입과 탈퇴를 거듭하는 노동 불안정성이 높은 집단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며 이들에 대한 특화된 사회정책적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년층만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정책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중장년내일센터,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층 지원 정책의 범위를 노동 생애 불안정성이 높아서 실업·소득중단이나 저소득 위험에 놓인 중년층이 수혜할 수 있는 사회정책으로 폭넓게 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 살펴보는 중년층 지원 정책은 구체적으로 고용보험제도(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 국민연금제도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장과 고용촉진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며, 고용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사회보험은 중년층, 특히 노동 생애 불안정성이 높은 중년층의 실업과 은퇴로 인한 위험을 대비하는 데 주요한 정책 수단이다.

각 제도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앞에서 분석한 중년층 노동 생애 불안정성 현상을 고려할 경우 중년층 지원 관점에서 정책의 한계점이 무엇

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그림 6-1〕 중년층 지원 정책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범위



주: 1) 협의의 사회보장: 불평등을 보완하고 빈곤을 예방하는 대책으로 시장 외부에서 작동하는 기제로 사회보험, 공공부조(실업부조 등)
2) 광의의 사회보장: 직접 개입
3) 최광의: +노동정책
4) 지원 목적상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와 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장 정책.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와 일자리 창출 및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자료: 저자 작성

제2절 중년층 지원 정책 현황

1. 고용보험제도

가. 실업급여[15)]

고용보험제도는 실업 예방과 고용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로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범위는 1) 65세 이전 근로자[16)]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 2) 월평균 보수 50만 원 이상인 예술인, 3)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직종 종사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업장(이하, 노무제공자)이다. 고용보험제도의 지원 내용은 적용 대상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가 적용받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17)]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현금급여로, 실업기간 동안 생계유지 및 재취업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고용보험 홈페이지. 2023.10.14.). 실업급여는

15)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안전망(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safety/list.do),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16)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17)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비교적 최근인, 2020년 12월과 2021년 7월부터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자가 되었다.

실업 이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사실 확인을 거쳐 현금수당을 지급하며, 보험료율은 1.8%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9%씩 부담한다.

실업급여의 종류로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으며,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이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 지급한다. 구직급여 지급 조건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업 직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하며,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다. 구직급여는 1일 66천 원의 상한을 적용한다.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증가하여 50세 이상 피보험자의 경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이 된다.[18][19]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현금급여이며,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분된다. 지급 대상과 지급요건은 〈표 6-1〉을 참고하기 바란다.

18) 2019년 10월부터 이와 같은 지급 수준과 지급기간 연장 등의 제도 개편이 이루어졌다. 50세 미만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40일이다.

19) 구직자가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는 세 가지 연장급여가 있다. 먼저 개별연장급여는 특히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구직급여의 70%를 60일 연장 지급하고, 훈련연장급여는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훈련 참여기간을 실업으로 인정받은 경우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한다. 특별연장급여는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 연장 지급한다.

〈표 6-1〉 취업촉진수당 지원 요건 및 지원 내용

구분	지원 요건	지원 내용
조기재취업 수당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소정 급여일수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잔여 소정 급여일수의 1/2 지급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훈련을 받은 날 1일 7,530원 지급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때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 및 숙박료 지급
이주비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한 때	5톤까지 실비, 5톤 초과~7.5톤까지 실비의 50% 지급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분야별 정책, 고용안정망.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safety/list4.do (검색일:2023.10.14.)을 참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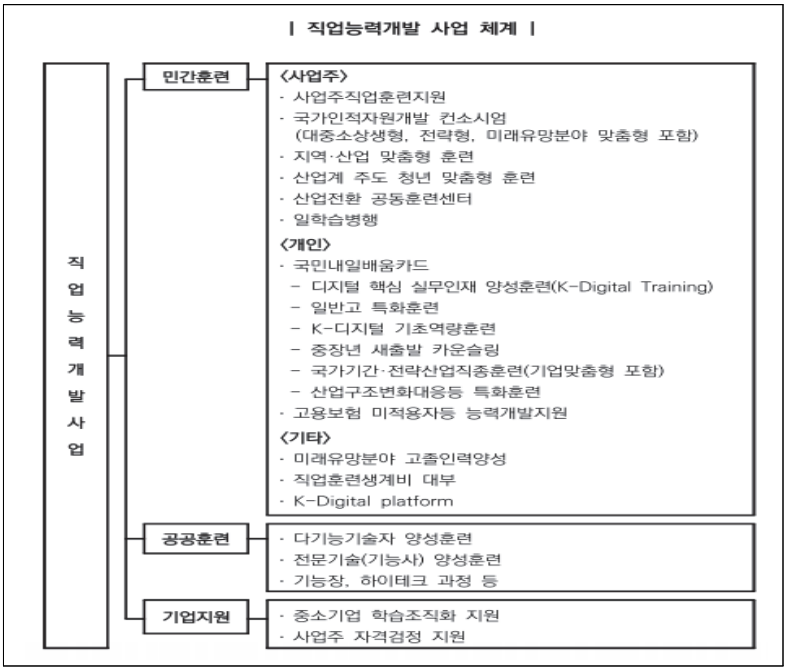
나. 직업능력개발사업[20)]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제도는 1967년에 직업훈련법이 제정되어 정식 도입되었으며, 이후 법 폐지, 제정, 변경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종전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법명 변경과 함께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직업능력개발은 실업자와 재직자 중심이었으나 일하는 모든 국민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범위도 직무와 직접 관련된 훈련에서 지능정보화 등 포괄적 직무능력 향상 훈련 및 경력 재설계 지원으로 확대하였다(한국고용정보원, 2022, pp.1-2). 현행 직업능력개발 사업 체계는 〔그림 6-2〕와 같다.

20) 한국고용정보원. (2022). 2022 직업능력개발 통계연보를 주로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그림 6-2] 직업능력개발 사업 체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22). 2022 직업능력개발 통계연보. p.2.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크게 사업주 지원과 개인 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사업주 지원은 사업주직업훈련지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일학습 병행이 대표적이다. 사업주직업훈련지원은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 예정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 실시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과정에 소속 근로자, 채용 예정자 등을 직접 또는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이다. 훈련은 자체 훈련시설에서 직접 실시하

거나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며, 훈련 방법은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인터넷, 우편), 혼합훈련 등이 있다. 지원 내용은 〈표 6-2〉와 같다.

〈표 6-2〉 직업능력개발 지원 내용

구분	내용
훈련비	NCS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훈련 시간과 훈련 수료 인원, 기업 규모별 지원율을 곱하여 산출(우선지원 대상 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유급휴가훈련 인건비	소정 훈련 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우선지원 대상 기업 100분의 150)
훈련수당	사업주가 채용 예정자에게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월 20만 원 한도 지원
숙식비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을 실시하고 식사 및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비는 1일 3,300원까지, 숙박비는 1일 14,000원(월 330,000원)까지 지원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22). 2022 직업능력개발 통계연보. p.3을 이용하여 연구진 작성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은 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이 상대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공동 훈련 협약을 맺어 재직자 및 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제공하며, 이때 정부가 훈련 지원을 위한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자체 훈련시설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재직자 등에게 맞춤형 공동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공공기관 등이다. 지원 내용은 연간 최대 20억 원 범위에서 시설·장비비(최대 15억 원), 운영비(최대 4억 원), 프로그램 개발비(최대 1억 원)를 지원한다. 주요 사업유형은 컨소시엄의 주체 및 목적에 따라 대중소상생형(대기업-협력사 컨소시엄 구성), 전략 분야(특정 산업·직종에 필요한 인력 양성), 지역산업 맞춤형(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주도로 지역 기업 훈련수요 반영) 등으로 구분한다.

일학습 병행은 독일·스위스 등의 일터 기반 학습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로 기업이 청년 등을 먼저 채용한 후, 체계

적인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보완적으로 학교·공동훈련센터 등에서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형성 및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제도이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3.10.14.). 현재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두 번째로, 개인 지원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 대표적이며, 직업능력개발에 소요되는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을 지급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 대상은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소득) 300만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만 75세 이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고용센터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본인이 원하는 훈련기관에 제시하여 훈련받고, 훈련기관은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다. 여기서 훈련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곳이어야 한다. 지원 수준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간 실제 훈련비의 45~100%, 최대 500만 원까지이며, 단위기간(1개월)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월 최대 11.6만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원한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 대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훈련이다. 훈련 대상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 중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 적합성이 인정된 자이다. 훈련과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 통합심사 등을 거쳐 적합성을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위탁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훈련과정이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며, 훈련장려금은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2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2021년에 도입되었으며,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지원 대상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에 〈표 6-3〉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다. Ⅰ유형은 한국형 실업부조이며, Ⅱ유형은 기존의 사례관리 중심의 취업성공패키지에 해당된다. Ⅱ유형은 재산이나 취업 경험에 대한 요건을 두지 않고 정책 대상별로 접근하며, 중년층의 경우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35~69세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유형에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생계지원에서 유형별 차이가 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상담과 진단을 통해 취업역량을 파악한 후 취업지원 경로를 설정한다. 이후 직업훈련, 일 경험, 창업, 해외취업 및 복지프로그램 등을 연계한다. 또한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연계와 집중 취업알선 진행 등도 이루어진다. 생계지원은 Ⅰ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며, Ⅱ유형의 경우 취업활동비용,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수급 자격이 인정된 이후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100% 이행해야 구직촉진수당을 전액,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생계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6-4〉를 참조하기 바란다.

---

2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정책자료, 취업 및 채용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support/list.do(검색일: 2023.10.14.)을 주로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표 6-3〉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요건

필수요건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취업 경험
Ⅰ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 원 이하(청년 5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제 활동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5억 원 이하	×
Ⅱ유형	특정 계층		15~69세	×	×	×
	청년		18~34세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취업 및 채용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support/list.do(검색일: 2023.10.14.)

〈표 6-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생계지원
Ⅰ유형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 지원 경로 설정 -직업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및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등 연계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 취업알선 진행 등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부양가족*1인당 10만 원(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6개월 *부양가족: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중위소득 60% 이하)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 원*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월 28.4만 원×6개월) 등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50만 원(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 계층)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취업 및 채용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support/list.do(검색일: 2023.10.14.)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원칙적으로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다시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취업이나 창업 등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근속 및 사업 유지 기간에 따라 재참여 가능일이 1~2년 등으로 차이가 있다(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2023.10.14.).[22]

3.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23]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환급형 세액공제제도로 2009년 9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에는 크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있다. 먼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수준이 낮아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구성과 소득 원천별(근로, 사업, 종교인 등)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소득 지원 및 근로 장려를 도모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국세청 홈페이지).[24]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에 차등을 두며,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가구유형별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 장려금의 점증-평탄-점감 구조로 이루어져, 점증구간에서 근로유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그림 6-3). 가구유형, 가구 총소득요건 이외에도 가구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이 된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근로장려세제의 신청 자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구유형,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23년 수혜 가구는 2022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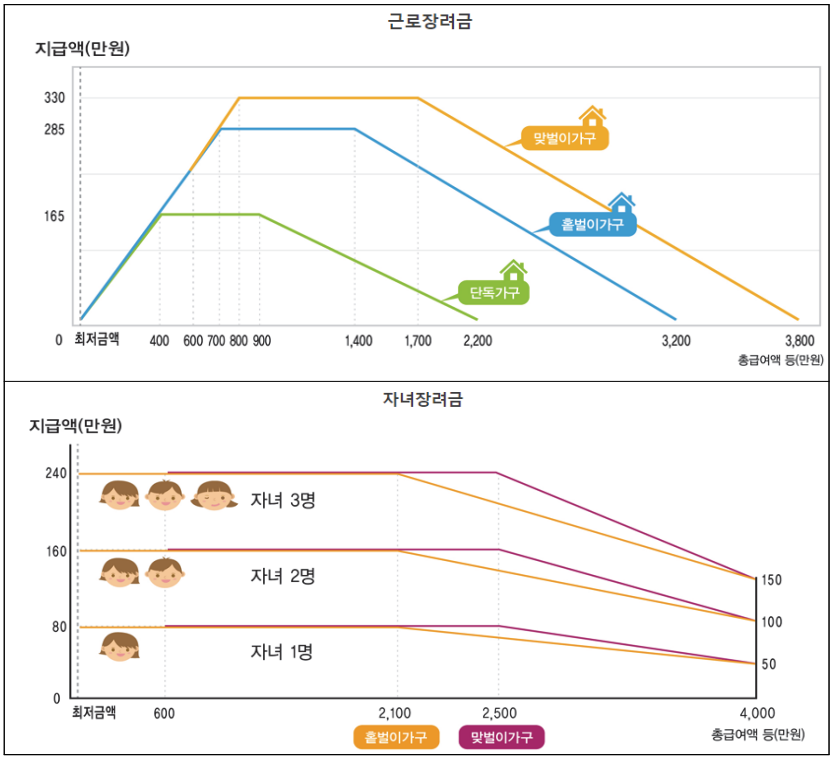
22)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주 하는 질문(FAQ), (검색일: 2023.10.15.)
23)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책/제도, 근로·자녀장려금.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검색일:2023.06.26.) 설명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24)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책/제도, 근로·자녀장려금.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검색일:2023.06.26.)

월 31일 현재 기준을 적용받으며(즉 전년도 말 기준),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 등에 따라 가구유형을 분류한다. 여기서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의 배우자로 한정하며,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한다.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의 범위에 포함한다. 부양자녀는 소득요건이 있어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자녀와 동일하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받는다.

총소득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표 6-6〉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한다. 여기서 총소득 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25]),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25) 10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조정률은 20~90%이다. 도매업이 20%로 최저이며,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가 90%로 최대 조정률을 적용받는다.

〔그림 6-3〕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책/제도, 근로·자녀장려금.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검색일:2023.06.26.)

〈표 6-5〉 가구유형별 가구원 구성

가구유형	가구원 구성
단독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책/제도, 근로·자녀장려금.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검색일:2023.06.26.)

〈표 6-6〉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해당 없음	4,0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 원(최소 50만 원)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책/제도, 근로·자녀장려금.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검색일:2023.06.26.)

재산요건은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재산은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전세금의 경우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한다. 또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을 적용한다.

한편 근로장려금의 가구유형,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신청제외자로 정하고 있다. 1)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한 근로장려세제는 장려금 산정 시 〈표 6-7〉과 같이 감액 및 체납충당을 적용한다.

〈표 6-7〉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3.6.1.~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 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 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책/제도, 근로·자녀장려금.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검색일:2023.06.26.)

4. 국민연금제도

가. 일반적 현황[26)]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내 거주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으로, 최소 납입 기간 10년을 충족하면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27)]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개시 연령 5년 전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지급액의 6%씩을 1세마다 감액하여 지급한다.[28)]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제도 개혁으로 출생연도별로 지급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중년 범위인 45~64세(2023년 기준 1959~1978년 출생)는 〈표 6-8〉과 같이 62~65

26) 주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연금정보.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2.jsp(검색일:2023.10.12.)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27) 이외에도 연금 종류는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이 있으며, 납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게 된다.
28) 조기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5세이전은 총 30%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된다.

세에 노령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고, 57~60세에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표 6-8〉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

출생연도	지급개시 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9~1960년	62세	57세
1961~1964년	63세	58세
1965~1968년	64세	59세
1969년 이후	65세	60세

자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연금정보,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2.jsp(검색일:2023.10.12.)

국민연금은 가입자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데 경제활동인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29]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보험료 9% 전부를 납부하나,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사용자가 보험료를 4.5%씩 부담한다.

나. 국민연금 가입자 지원제도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경제적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보험료를 내더라도 임금 수준이 낮아 연금급여가 충분하지 않은 데 대응하여 가입자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제도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크레딧제도, 보험료 추후납부제도이다.

29) 비경제활동인구 및 당연적용제외자 중에서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10조와 제13조).

먼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 및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규모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이다. 지원 수준은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한다(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홈페이지, 2023.10.12.).

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출산, 군복무, 실업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출산 크레딧은 가입자가 둘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가입기간 12개월을 추가 인정하며, 최대 50개월을 상한으로 이후 자녀 1인마다 18개월을 합산하여 추가로 인정한다.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이후에 입대하여 6개월 이상 군복무를 한 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한다. 실업 크레딧은 실직하여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에게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25% 본인 부담)를 지원하고 해당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준다(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2023.10.12.).

보험료 추후납부제도는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나 적용 제외에 해당되는 경우, 이후 본인의 신청에 의해 해당 기간에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추후 납부는 최대 10년 미만(119개월)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보험료는 일시 전액 납부 또는 최대 60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NPS 사이버홍보관 홈페이지, 2023.10.12.).

제3절 중년층 지원 정책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

1. 고용 지원 정책[30][31]

먼저, 고용보험제도는 2020년에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여 2020년 12월 예술인, 2021년 7월 노무제공자를 대상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이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자영업자 적용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계획 이외에 논의된 바가 없으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의 적용 확대는 더 이상 진전이 없으며, 구직급여의 하한액을 사실상 폐지하는 등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둔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갈 경우 구직자가 어떤 일자리 제의든 수락하게 되어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적인 구직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확인했듯 주된 일자리에서의 비자발 실직을 경험한 이들이 비자발 실직을 경험하지 않은 이들에 비해 지속적인 노동 불안정을 경험하며 경제적 손실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상황에서 일자리 관련 탐색 기간이 좀 더 길게 주어지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제도 개편 방향은 특히 생애 노동 불안정성이 높은 중년의 저임금 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최근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실업에 대한 안정망 역할을 하기에는 급여 수준과 수급기간이 매우 불충분하다.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 지급받는 것은, 1인 가구 생계급여보다도 낮

30) 본 연구에서 개최한 8월 16일 정책 포럼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경과와 과제', 이병희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의 발표 자료와 토론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31) 본 연구에서 개최한 6월 8일 정책 포럼의 '중장년층 직업훈련', 문상균 부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발표 자료와 토론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은 수준이며 고용보험제도의 구직급여와 비교해서도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중년층은 가족을 구성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사실상 부양가족과 함께 살아가기에, 구직촉진수당이 생활 안정 기능의 역할은 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2023년부터 부양가족 관련 부양가족 1명당 10만 원 추가지원,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그럼에도 중년층이 실업 상태에서 월 50만 원, 가족 부양을 고려해도 최대 9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으로 생계를 보장받을 수는 없으며, 취업을 준비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앞에서 살펴본 중년층의 노동 특성을 반영하더라도 생계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현실에서 반복적으로 실직과 저임금, 최저임금 일자리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 중년층에게 월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할 경우 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방식은 소득 활동 자체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책 접근 방식이 청년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생긴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근로빈곤층 대상의 진정한 실업부조가 될 수 있도록 실제 근로빈곤층 대상을 면밀히 고려한 제도의 재조정이 요구된다.

한편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제도 초기인 1990년대에는 사업별로 정책의 대상 연령을 정하지 않고 15~64세 생산가능연령층을 대상으로 실시해왔으며, 중장년층의 직업능력훈련 참여자 역시 소수에 불과하였다. 또한 1992년에 제정된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기반으로 2006년 12월 고용노동부 제1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발표, 중장년층의 계속 고용 및 재취업 지원 관련 사업으로 시작됨에 따라 고령층 지원정책과 혼용되고 있는 측면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베이비붐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를 앞둔 2000년대 후반 시점에서 55세 이상 고령 실업자 대상 훈련(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이나, 45~60 실업자 대상 폴리텍대학 특화 과정

이 생긴 이후, 2010년대에 들어서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생애경력설계 및 이·전직 및 재취업을 위한 종합적인 고용서비스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현재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중장년 ICT 훈련, K-디지털 기초역량 교육(K-Digital Credit),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등 중장년층에 특화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계속 마련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했듯 50대를 전후하여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서 중년층 대상의 직업훈련개발과 생애경력설계서비스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크게 훈련기관의 형태에 따라 민간훈련, 공공훈련으로 구분되며, 이 중 민간훈련은 개인 지원, 사업주 지원, 기타로 세분화된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그 취지와 내용이 매우 유사하여 세부 사업들의 간의 차별성이 매우 낮아 훈련 내용이 겹치며, 복잡하다는 점에서 최근 개인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하는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복잡성과 세부 사업 간의 차별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최근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등 일자리 진입 이후부터 생애 일자리 경력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참여와 성과가 낮은 편이다.

또한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과정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신기술·신산업, 디지털 관련 훈련사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 수혜 규모가 매우 작고 실제 취업으로 연계되기에는 훈련 내용이 단기적이고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퇴직을 앞두거나 새롭게 일자리를 구하는 중년층이 단기의 교육 수료 후 디지털 관련 취업이나 창업은 더욱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한계로 미루어볼 때, 노동 생애 불안정성이 높은 중년층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운영해 사회보장을 이루

는 방식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애 노동 불안정성이 높은 중년층을 대상으로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동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공급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며, 훈련 내용의 질적인 향상과 그에 따라 길어지는 훈련기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확대가 요구된다. 사업의 지나친 세분화는 정책 대상을 타게팅하는 데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정책 대상과 운영자의 선택에서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대상이나 정책 목표가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하여 더 규모 있고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소득 지원 정책[32)]

근로장려세제는 최초 도입 이후 많은 제도 변화가 있었으나 이는 중년층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형태로 변화해 왔다. 제도 개편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지급 자격과 규모를 달리하는 개편이 있었으며, 2013년부터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60세 이상인 경우 수급 가능하도록 연령요건이 완화되어 제도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듬해인 201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하며 자녀 수에 따른 지급이 아닌 가구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따른 지급으로 전환되는 구조적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후 단독가구의 연령요건이 2016년 50세 이상, 2017년 40세 이상, 2018년 30세 이상으로 조정되고, 2019년에는 폐지되어 단독가구의 수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2019년 전체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중 절반 이상이 단독가구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

32) 본 연구에서 개최한 5월 27일 정책 포럼의 '근로장려세제(EITC)가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고지현 부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표 자료와 토론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한 추세는 더욱 확대되어 2021년 수혜 가구의 4분의 3이 무자녀 단독가구이다. 이들 단독가구는 청년층과 고령층이 다수이며, 중년층은 상대적으로 수혜 비중이 감소하였다. 2021년 기준 가구주 연령별로 수급 가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30세 미만 28%, 60세 이상 28%, 50~60세 미만 17%, 40~50세 미만 14%, 30세~40세 미만 12% 순이다. 30~50세 미만의 구성비는 2010년 84%(40~50세 미만 45%, 30~40세 미만 39%)와 비교하여 58%p 감소한 수치이다.

근로장려세제의 총소득요건(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자녀장려금 4,000만 원)은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어, 핵심 근로연령대인 중년층이 민간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전일제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제도의 수혜자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노동자들이 제외된 근로장려세제로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을 적용받은 근로자의 연봉은 약 24백만 원(월급 2,010,580원)이고, 부부가 맞벌이하는 경우 약 48백만 원으로 근로 및 자녀장려금 선정 소득을 초과한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의하면 2022년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526천 원(연간 42,312천 원)이고, 비정규직근로자는 1,826천 원(연간 21,912천 원)으로 비정규직 홑벌이 가구에서 근로장려세제를 수혜할 수 있는 수준이다(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23.10.15.). 또한 근로장려세제는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자녀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하여 맞벌이 3인 가구를 상정할 경우 최대 410만 원(월 34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수혜 규모 역시 매우 작은 수준이다.

따라서 노동 생애 불안정성이 높은 중년층의 세제 지원을 통한 소득보장으로 근로장려세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제도의 취지상 저소

득 근로빈곤 중년층 가구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장과 고용촉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현행 신청주의 방식을 개편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근로장려세제를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자격요건을 증빙하여 정산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저소득 가구에서 추가적인 취업자 확보는 빈곤 탈출을 위한 주요 통로 중 하나이다. 취업능력이 있으나 가구 또는 개인의 취업 관련 애로사항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시장임금으로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취업자가 부족한 가구 또는 불완전취업자 가구에 대해 취업지원서비스와 연계된 소득지원을 강화하며, 적정 소득수준에 미달하는 액수에 대해 소득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운용하는 것 또한 방안일 수 있다.

3. 노후소득 지원 정책[33)]

국민연금은 현재 삶의 소득보장이 아닌 은퇴 후 노후준비의 일환으로 근로연령대에 가입 및 납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동 생애 불안정성이 높은 중년층도 은퇴 이후 노후 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연금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노동 생애 불안정성은 낮은 임금, 잦은 직장 이동과 그 사이의 공백으로 인해 국민연금 기여 수준과 가입기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

33) 본 연구에서 개최한 9월 25일 정책 포럼의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 조정 논의와 조기노령연금 페널티에 관한 정책 현황과 과제', 성혜영 연구위원(국민연금연구원)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현황과 대응방안', 유희원 연구위원(국민연금연구원)의 발표 자료와 토론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적으로 연금 수급 시점에 저연금 상황을 이끌 수 있다. 더욱 심한 경우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해 노후에 연금소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2022년 말 기준 65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43.9%에 불과하며(유희원, 2023.9.25), 향후 약 10년 후에는 현재와 거의 유사한 48.8%(1964년생으로 2022년 기준 58세), 약 20년 후에도 72.1%(1974년생으로 2022년 기준 48세)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감사원, 2021). 따라서 중년층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중년층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연령 상향 조정을 시행하고, 현재 지원 중인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되나 의무가입연령은 60세 미만이다. 이는 법정 정년 연령인 60세 이후 연금 수급 개시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1년 전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이다미, 정해식, 전지현, 2021; 성혜영, 한정림, 김아람, 2022). 또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50대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53.4개월로 나타나, 향후 가입 가능 기간이 짧아 무연금이나 저연금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유희원, 김혜진, 류재린, 2022).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한은 노동 불안정이 높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중년층에게도 유익한 정책 대안일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여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수치로 살펴보면 60~64세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2011년 4.0%에서 2021년 17.8%로 5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는 60~64세에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국민연금 가입연령을 현재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사업주와 보험료를 분담할 수 있

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60~64세 중년층에 대한 고용을 꺼리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노동 생애 불안정이 높은 경우 실업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고 실업기간이 길어질 가능성 역시 높다. 이런 측면에서 실업기간 중 실업 크레딧을 통해 국가로부터 75%의 보험료 지원을 받아 연금 가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이나 군복무 크레딧제도는 본인부담금 없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한다는 점에서(가입기간 인정 방식), 실업 크레딧은 본인부담금 25%가 요구되는 것(보험료 매칭 방식)이 과연 크레딧제도라 할 수 있는 것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최소 납입기간 10년 중 실업 크레딧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에 불과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최대 12개월까지만 실업 크레딧을 인정하고 있으나, 근로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생애 노동 불안정성이 더욱 높아지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업 크레딧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등 한층 관대한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현 중년층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 및 지원 정책의 재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였으나 저연금의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년 이전 퇴직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경험하는 연금가입자들의 노후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저소득층에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이전의 소득중단으로 인

한 노후소득보장을 취지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기노령연금 신청 결정은 노년층 내에서 중산층에 해당하며 연금제도 자체보다는 사회보험료 부과 대상의 확대나 기초연금 선정 기준의 탈락 등과 같이 다른 사회복지 제도의 불이익이나 연금 소진 등에 대한 우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혜진, 산승희, 유현경, 2022). 가령 국민연금액이 높을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거나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어, 연금 수급자들은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34] 실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가입기간이 길고 평균 수급액도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가입기간은 평균 20년으로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의 20년보다 약 3년 길고,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 월액은 64.6만 원으로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의 52.4만 원보다 많다(김혜진 외, 2022).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생애 불안정성이 높은 중장년층이 소득단절로 인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이전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들의 노후 경제적 불안정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제5장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했듯 늦은 나이의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재취업이 어려우며, 완전한 은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로 소득과의 부정적인 관계 또한 높은 특성을 보인다. 또한 노동 생애 불안정성이 높은 경우 낮은 학력수준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상대적으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제도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 연금 수급액이 감액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 이에 앞서 근로연령기에 노후를 대비한 국민연금의 가입과 유지

34) 최근 건강보험의 피부양 자격을 2,00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을 스스로 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된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이후 수급 시점에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요구된다.

제7장

결론

제1절 분석 결과 요약
제2절 정책 시사점 요약

제 7 장 결론

제1절 분석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중년층의 노동 생애 불안정성과 그로 인해 발생 가능한 노동 궤적 및 소득 손실에 대해 살펴봤다.

중년층의 노동 생애 양상에 대한 동태 분석에 앞서 대표성 있는 통계청 통계자료를 이용해 중년층의 경제활동 실태와 경제상태 실태를 우선 살펴봤다. 전기중년층(45~54세) 및 후기중년층(55~64세) 모두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종사상지위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전기중년층의 경우 상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가운데 이들 연령대의 해당 종사상지위의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았으며, 후기중년층의 경우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즉 종사상지위를 통해 살펴본 일자리 질에서는 중년층, 특히 후기중년층의 경우 노동 불안정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되는 종사상지위에 속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상태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중년층 가구의 경우 소득액이 타 연령대(청·장년층, 은퇴연령층)에 비해 높았다. 다만, 중년층 가운데 전기중년층과 후기중년층 간 평균의 차이는 제법 컸는데, 후기중년층(55~64세) 가구주 가구의 평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이들의 가구 균등화 소득은 15~44세 가구주 가구의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소득의 내부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소득 분위별 특성을 통

해 이들(특히 후기중년)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양극단에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주의 학력별, 성별에 따른 가구 균등화 소득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이들의 집단 내 차이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기중년층은 가구를 형성해서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비율이 높음에 따라 소득액 평균도 높지만 소득액 대비 지출액 비중이 2021년 기준 약 46.2%로 가장 높다. 그리고 55~64세(후기중년층) 가구주 가구는 평균 소득액과 지출액 모두 전기중년층에 비해 적었지만 지출의 감소 정도가 더 커 소득액 대비 지출액의 비중이 비교적 낮게(2021년 기준 42.1%) 나타났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가구소득과 유사하게 연령에 따른 지출 양상에서도 중년층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교육수준, 성별에 따른 집단 내 차이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년층의 노동 생애 불안정성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45~64세 중년층을 대상으로 동태 분석을 진행하였다. 노동 불안정성은 고용 지위(경제활동 상태 및 종사상지위), 시간당 임금 수준(최저임금, 저임금 및 생활임금 기준), 직업 숙련도(고숙련, 중숙련, 저숙련 등) 세 가지 하위 차원에서 지표를 구성하였으며, 각 연령 시점에서 노동 불안정성 지표를 측정한 후 집단중심 다중추세분석법을 활용하여 중년층이 경험하는 노동 불안정성 궤적을 유형화하였다. 남성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노동 생애 궤적은 6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크게 보면 40대 중반에서 50대 중후반까지 임금근로자로 근로하다 이후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유형과, 40대 중반 이후 고용주 또는 자영업 상태를 유지하는 유형으로 나타난다. 코호트별 비교 시, 56~65년생 코호트에서 자영업 유형의 비중은 다소 감소한 모습을 보이며, 특히 저숙련 자영업 불안정형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56~65년생 코호트에서 50대 후반 이후 노동 불안

정성이 높아지는 후기 불안정형 비중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 있다. 반면, 50대 초중반부터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중숙련 조기 불안정형의 경우, 56~65년생 코호트에서 해당 유형의 구성비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노동 불안정성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연령대가 더 당겨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여성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이들의 노동 생애 궤적은 7개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대체로 남성 중년층에 비해 고용 불안정성, 임금 불안정성, 직업 숙련 불안정성이 모두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40대 중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비경제활동 상태로 있는 만성 미취업 유형의 비중이 약 19.9%로 나타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저숙련 자영업 유지형으로 약 32.5%의 구성비를 보인다. 물론, 이러한 양상의 기저에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임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여성 중년층 표본에서 좀 더 특징적인 점은 중-저숙련 무급가족 유지형이 약 9.9% 수준으로 관찰되며, 50대 중후반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저숙련 후기 노동시장 진입형도 10.6% 수준으로 관찰된다는 것이다. 남성 중년층 중 40~50대에 임금근로자였던 경우,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고용 지위, 임금 수준, 직업 숙련도 측면에서 측정한 노동 불안정성이 다소 높아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비임금근로자(고용주 및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출생 코호트별로 특별히 불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볼 만한 현상은 관찰되지 않는다. 여성 중년층의 경우 미취업 유형을 제외하면,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노동시장 참여가 더욱 증가하면서 노동 불안정성도 더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영업자와 일부 임금근로자를 제외하고는 50대 이후 연령에서 대체로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임금 불안정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노동 불안정을 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 후기 직업 상실, 즉 45세에서 59세 사이 주된 일자리에서의 비자발적 실직이 이후 노동궤적과 소득 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45세에서 59세 사이에 비자발적으로 주된 일자리(main job)를 잃은 남성과 비자발적 주된 일자리 실직을 경험하지 않은 비교집단(Composition-adjusted control group)의 미취업률 격차는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긴 하나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특히 비자발적 실직 당시 연령별로 이들 집단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조기 직업 상실(45세에서 52세 주된 일자리에서의 비자발적 실직)이 이후 이들의 취업궤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3세에서 59세에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하는 경우 은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45세에서 52세의 비자발적 실직 경험 이후 노동궤적은 은퇴 행동의 반영이기보다는 실직 후 일자리를 잃고 쉽게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기 어려움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45세에서 59세에 비자발적으로 주된 일자리를 잃은 남성의 비교집단과의 연간 소득 격차는 단기에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나 실직 후 5년 차부터 격차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재취업 확률이 남성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시간에 따른 소득 변화의 추세는 남성과 반대이나, 격차에 있어서는 남성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또한 조기 직업 상실이 이후 이들의 취업궤적뿐 아니라 소득에도 더욱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기 직업 상실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됨에 따라 지속적인 흉터 효과(scarring effect)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후기 직업 상실이 취업 참여 및 소득수준에 주는 영향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직업 상실의 단기적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으나, 그 영향이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나타났다. 또한 고학력 근로자라도 주된 일자리에서의 비자발적 실직이 이들의 이후 취업궤적 및 소득 손실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정책 시사점 요약

경력 후반기의 노동 불안정, 실직은 점점 더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재정적 압박에 직면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늦은 퇴직을 장려하기 위해 연금정책과 기타 사회 프로그램을 개혁했고 현재도 개혁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개혁 중 상당수는 조기 퇴직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살펴봤듯 우리나라 중년층의 높은 비율이 이른 나이에 비자발적 퇴직을 경험하고 노동 생애에 걸친 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직업 상실, 노동 불안정은 이후 이들의 노동궤적뿐 아니라 소득에도 지속적인 부정적 효과를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10년 후까지 살펴봤으나, 평생 소득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다면 더 큰 경제적 충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직과 관련한 기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30대의 실직은 다른 일자리로의 이동을 통한 회복이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반면 법정 연금 수급 연령에 가까워졌을 때의 실직은 직업 상실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은퇴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중년층의 40대 후반과 50대 초반의 직업 상실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노동궤적 및 소득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관례적인 은퇴 연령과는 아직 한참 떨어진 연령대이다. 노동시장 재진입 기회는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며(Zabel, 2022), 후기중년은 연령에 대한 고정관념, 기술 노후화, 건강 문제 등으로 노동 이동 및 노동시장 재진입 기회를 갖는 데 더 큰 장벽에 직면해 있다(Ebbinghaus & Radl, 2015). 그리고 Shahbazian & Bihagen(2022)의 연구에서는 근로연령층(prime age)의 소득 격차가 종종 영구 소득과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 직종, 그리고 직업의 소멸과 생성의 속도는 중년층이 도저히 따라잡기 힘들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거기에 이중노동시장 구조의 특성을 가진 한국에서는 중년 근로자의 비자발적 실업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문제로 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시각이 올바른 접근이라 생각된다.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모든 계층에 동일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중년층 중에서도 교육수준이 낮거나 1차 노동시장의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한 계층에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명확하다. 분석결과에서도 비자발적 실직 경험, 이로 인해 유발되는 노동 생애 불안정은 교육수준에 따라 계층화되어 나타났다. 그럼에도 고학력 근로자 역시 주된 일자리에서의 비자발적 실직 이후 취업궤적 및 소득에서 손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구조 하에서 이러한 중년의 비자발적 실업은 주변부 노동시장의 진입과 퇴출을 반복하거나 최악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이 불가능해 짐을 의미한다. 그 결과 계층간 소득 격차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 불안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중년 근로자의 조기 비자발적 퇴직을 피하고, 노년에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노동시장의 재진입과 관련한 고용 장벽은 고용주 간의 연령 차별과 같은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고령화 사회에서는 조기 퇴직을 막고 근로 수명을 연장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따라서 후기 직업 상실(비자발적 실직)로 발생 가능한 경제적 손실을 일정 부분 해결하고 실직한 중년 근로자가 기술이 적합한 고용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정책은 중년층의 노동 불안정(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한 근로자를 재흡수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위한 일자리 관련 탐색 기간이 좀 더 길게 주어지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생애 노동 불안정성이 높은 중년의 저임금 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제6장에서 살펴본 현 제도의 한계점 및 개선 방안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용보험제도 유지를 위한 재정건전성은 중요한 문제임은 틀림없다. 한편으로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둔 개편 논의는 구직자가 어떤 일자리 제의든 수락하게 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최근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실업에 대한 안정망 역할을 하기에는 급여수준과 수급기간이 불충분하다.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 지급받는 것은, 1인 가구 생계급여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고용보험제도의 구직급여와 비교해서도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중년층은 가족을 구성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사실상 부양가족과 함께 살아가기에 구직촉진수당이 생활 안정 기능의 역할은 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으로 생계를 보장받을 수 없으며 취업을 준비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앞에서 살펴본 이들의 노동 특성을 반영하더라도 생계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현실에서 반복적으로 실직과 저임금, 최저임금 일자리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 중년층에게 월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할 경우 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방식은 소득 활동 자체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책 접근 방식이 청년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염려가 든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근로빈곤층 대상의 진정한 실업부조가 될 수 있도록 실제 근로빈곤층 대상을 면밀히 고려한 제도의 재조정이 요구된다.

최근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등 일자리 진입 이후부터 생애 일자리 경력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참여와 성과가 낮은 편이다. 이제까지 정부 일자리 정책이 청년, 여성, 고령자 등에 집중돼 온 만큼 중년, 특히 중년층 남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로 미루어볼 때, 노동 생애 불안정성이 높은 중년층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운영해 사회보장을 이루는 방식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애 노동 불안정성이 높은 중년층을 대상으로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동하기 위한 직업능력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공급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며, 훈련 내용의 질적인 향상과 그에 따라 길어지는 훈련기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확대가 요구된다. 사업의 지나친 세분화는 정책 대상을 타게팅하는 데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정책 대상과 운영자의 선택에서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대상이나 정책 목표가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하여 보다 좀더 규모 있고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최초 도입 이후 많은 제도 변화가 있었으나 이는 중년층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형태로 변화해 왔다. 근로장려세제의 총소득요건(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자녀장려금 4,000만 원)은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어, 핵심 근로연령대인 중년층이 민간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전일제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제도의 수혜자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노동자들이 제외된 근로장려세제로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노동 생애 불안정성이 높은 중년층의 세제 지원을 통한 소득보장으로 근로장려세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제도의 취지상 저소득 근로빈곤 중년층 가구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장과 고용촉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근로연령층의 유보임금을 높여주며, 시장임금으로 충분하지 않은 취업자에게 추가적 지원을 해줌으로서 보완적 지원 제도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부양 가족이 있는

이들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저소득 가구에서 추가적인 취업자 확보는 빈곤 탈출을 위한 주요 통로 중 하나이다. 취업능력이 있으나 가구 또는 개인의 취업 관련 애로사항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시장임금으로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취업자가 부족한 가구 또는 불완전취업자 가구에 대해 취업지원서비스와 연계된 소득지원을 강화하며, 적정 소득 수준에 미달하는 액수에 대해 소득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운용하는 것 또한 방안일 수 있다. 현행 신청주의 방식에 대한 변화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근로장려세제를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자격요건을 증빙하여 정산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삶의 소득보장이 아닌 은퇴 후 노후 준비의 일환으로 근로연령대에 가입 및 납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동 생애 불안정성이 높은 중년층도 은퇴 이후 노후 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연금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노동 생애 불안정성은 낮은 임금, 잦은 직장 이동과 그 사이의 공백으로 인해 국민연금 기여수준과 가입기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연금 수급 시점에서 저연금 상황을 이끌 수 있다.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 및 지원 정책의 재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이들의 지출 수준을 고려하면, 직접적인 소득과 고용지원정책도 물론 중요하나 가구의 '가장'이라는 측면에서 자녀 양육과 교육, 결혼 등에 대한 지출 측면의 지원정책과 주거 및 의료 등의 특정 지출에 대한 지원정책에 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본 연구에서 지출 세부 항목을 분석하지 않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에 중년층 지출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추후 연구 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외된 중년층에서 불안정한 노동을 경험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늦은 퇴직을 장려하는 현 정책 방향하에서 이들의 사회적 격차를 최소화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년층의 노동 생애 불안정이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 불안정 노동은 다양한 유형,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들을 체계적으로 포괄하며 적절한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단순하지 않다. 그럼에도 중년층의 노동 생애 불안정을 경험하는 근로자를 노동시장으로 재통합하는 것이 노동시장뿐 아니라 사회정책의 주요 과제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비자발적 사유로 노동시장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거나 실직으로 유발된 불안정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중년층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이 어떤 조건하에서 비자발적 조기 퇴직을 피하고 노년에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정책제언에서는 기존 저임금계층을 지원하는 성격의 일부 제도들을 보완하거나 확대하는 수준에서 검토하였다. 기존 구조에서 포괄하기 어려운 집단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을 고려하거나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안들에 대한 고민을 담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임을 밝히며,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감사원. (2021). 감사보고서-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II(노후소득보장 분야). 서울: 감사원.

강세미. (2022). 남성 중고령 근로자의 은퇴행위에 관한 연구-집단중심추세모형을 활용하여.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2, 1991-2003.

강지영, 함선유, 윤하림. (2022). 자본주의모델과 불안정 노동: 생애일자리 관점에서 본 미국, 독일, 한국의 비교. 사회복지연구, 53(4), 55-87.

고지현. (2023. 5. 27.). 근로장려세제(EITC)가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내부자료.

금재호, 송영남, 전영준, 김병덕, 이윤경. (2013). 베이비부머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김수영, 오혜인. (2020). 생애과정적 관점에서 바라본 빈곤노인의 노동. 사회복지연구, 53(3), 71-112.

김영아, Bonneuil, N. (2019). 불안정 고용의 동태적 분석 -주관적 불안정성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김은경, 김경희. (2022). 여성 노동의 불안정성 깊이와 이질성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115(4), 223-247.

김자영. (2017). **가구주의 장애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산수준과 자아존중감의 다중매개효과 검증**.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서울).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37441에서 인출.

김태완, 이주미, 김기태, 정세정, 오성욱, 송치호. (2022). 근로연령층 사회보장 현황과 복지-고용서비스 연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이주미, 정은희, 최옥금, 최유석, 송치호, 박은정, 김보미. (2020). 우리나라 소득분배 진단과 사회보장재구조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혜진, 신승희, 유현경. (2022). 조기노령연금 개선방안 연구.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문상균. (2023. 6. 8.). 중장년층 직업훈련. 내부자료.

민현주, 이수경. (2018). 중· 고령자의 노동시장지위 변화 유형화: 중심추세모형(Group-based Trajectory Model)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34(2), 169-194.

박나리, 김교성. (2021). 청년 불안정성의 궤적과 유형: 20대 청년의 고용, 소득, 부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8(3), 45-74.

백승호. (2014). 서비스경제와 한국사회의 계급, 그리고 불안정 노동 분석. 한국사회정책, 21(2), 57-90.

성혜영. (2023. 9. 25.).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 조정 논의와 조기노령연금 페널티에 관한 정책 현황과 과제. 내부자료.

성혜영, 한정림, 김아람. (2022).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 조정을 위한 기초연구.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2023. 9. 25.). 국민연금 사각지대 현황과 대응방안. 내부자료.

유희원, 김혜진, 류재린. (2022).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 비판사회정책, 75, 7-31.

윤석명, 방하남, 김지경, 황수경, 손유미, 장석인 … 최환용. (2011). 베이비부머 은퇴 대비 정책개발 연구-인적자원관리와 관련산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휴먼뉴딜 종합연구 총서

윤하림, 홍백의. (2020). 한국 중·장년층 남성의 노동 생애 불안정은 보편화되고 있는가? - 세대 및 학력 간 노동궤적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7(2), 31-58.

이다미, 정해식, 전지현. (2021).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병희. (2023. 8. 16.). 고용보험 적용 확대 경과와 과제. 내부자료.

이승호, 변금선, 고혜진. (2019). 근로생애와 고령노동. 한국노동연구원.

이아영. (2020). 신중년의 경제활동 실태와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2020(9), 35-44.

이아영, 황남희, 양준석, 안영. (2019). 자영업가구 빈곤 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2021). 생애주기의 연령기준와 연령규범에 대한 인식. 보건복지포럼 통권, 293호, 39-54.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예지. (2022). 중·고령자가 경험하는 불안정 노동은 성별에 따라 분절적으로 나타나는가?. 노인복지연구, 77(1), 69-97.

정경희, 남상호, 오영희, 이소정, 이윤경, 정홍원 … 한정림. (2011). 베이비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현황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2022.12.1.).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40300&bid=215&act=view&list_no=422053에서 2023.11.11. 인출.

통계청. (2023a).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정보보고서. 대전: 통계청.

통계청. (2023b).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정보보고서, 대전: 통계청.

통계청. (2023c). 균등화 개인소득. https://www.kostat.go.kr/menu.es?mid=b80301000000에서 2023.8.15. 인출.

통계청. (2023d).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대전: 통계청

한국고용정보원. (2022). 2022 직업능력개발 통계연보. 한국고용정보원.

황남희,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박신아, 김만희. (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rulampalam, W. (2001). Is unemployment really scarring? Effects of unemployment experiences on wages. The Economic Journal, 111, 585-606. doi:10.1111/1468-0297.00664.

Barbieri, P., & Filippo, G. (2002). Work-life instability and life-course income volatility. An age-cohort analysis of the stratified economic penalty of de-standardized work trajectories in Germany and the UK. Retrieved from https://www.economia.unicampania.it/images/Ricerca/Convegni_Conferenze_Workshops/Transition_

in_youth_2022/Papers/4.pdf, 2023.1.2. 인출.

Beck, U.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Vol. 17. Sage.

Beck, U. (1997).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를 찾아서. 홍성태 역. 서울: 새물결. (원서 출판 1992).

Biemann, T., Fasang, A., & Grunow, D. (2011). Do economic globalization and industry growth destabilize careers? An analysis of career complexity and career patterns over time. Organization Studies, 32(12), 1639-1663. doi:10.1177/0170840611421246.

Billari, F. C., & Liefbroer, A. C. (2010). Towards a new pattern of transition to adulthood?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15(2-3), 59-75. doi:10.1016/j.alcr.2010.10.003.

Brand, J. E. (2015). The far-reaching impact of job loss and unemploy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41, 359-375. doi:10.1146/annurev-soc-071913-043237.

Brand, J. E., & Simon Thomas, J. (2014). Job displacement among single mothers: Effects on children's outcomes in young adulthoo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9, 955-1001. doi:10.1086/675409.

Britannica. (2022). middle age | psychology | Britannica. Retrieved from https://www.britannica.com./science/middle-age, 2023.2.6. 인출.

Brückner, H., & Mayer, K. U. (2005). De-Standardization of the Life Course: What it Might Mean? And if it Means Anything, Whether it Actually Took Place?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9(04), 27-53. doi:10.1016/S1040-2608(04)09002-1.

Chan, S., & Stevens, A. H. (2004). How does job loss affect the timing of retirement? Contributions to Economic Analysis & Policy, 3, 1-24. doi:10.2202/1538-0645.1187.

Collins dictionary. (2012). Middle Age: definition of middle age in Collins dictionary. Retrieved from collinsdictionary.com.

Dieckhoff, M. (2011). The effect of unemployment on subsequent job quality in Europe: A comparative study of four countries. Acta Sociologica, 54, 233-249. doi:10.1177/0001699311412798.

Ebbinghaus, B., & Radl, J. (2015). Pushed out prematurely? Comparing objectively forced exits and subjective assessments of involuntar y retirement across Europe.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41, 115-130. doi:10.1016/j.rssm.2015.04.001.

Ganzeboom, H. B. G. (2010). A new 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ISEI) of occupational status for the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 2008 (ISCO-08) constructed with data from the ISSP 2002-2007. Annua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Lisbon, 1.

Hainmueller, J. (2012). Entropy balancing for causal effects: A multivar iate reweighting method to produce balanced samples in observ ational studies. Political analysis, 20(1), 25-46. doi:10.1093/pan/mpr025.

Heisig, J. P., & Radl. (2017). Adding scars to wrinkles? Long-run Effects of Late-Career Job loss on Retirement behavior and personal income. Work, Aging and Retirement. 3(3). 257-272. doi:10.1093/workar/wax006.

Jones, B., Nagin, D. & Roeder, K. (2001). A SAS procedure based on mi xture models for estimat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Sociolog ical Methods and Research, 29(3), 374-393. doi:10.1177/004912 4101029003005.

McKernan, S.-M., & Sherraden, M.. (2008). Asset Building And Low-Income Families.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Press.

Noelke, C., & Beckfield, J. (2014). Recessions, job loss, and mortality among older US adults. 104(11), 126-134.

OECD. (2015). Pensions at a glance 2015: OECD and G20 indicators. Paris, France: OECD.

OECD. (2017). "How technology and globalisation are transforming th e labour market", in OECD employment Outlook 2017. Retrieved from https://www.oecd-ilibrary.org/employment/oecd-employ ment-outlook-2017_empl_outlook-2017-en, 2023.5.15. 인출.

Oliver, M. L., & Shapiro, T. M.. (1990). Wealth of a Nation.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49(2), 129-151. doi:10.1111/j.1536-7150.1990.tb02268.x.

Oxford dictionaries. (2016). Middle Age: definition of middle age in Oxford dictionary (American English) (US). Retrieved from Oxforddictionaries.com.

Riekhoff, A. (2022). Good or bad(in)stability? A cross-cohort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career stability and earnings mobility in Finland.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77. 100674. doi:10.1016/j.rssm.2022.100674.

Riekhoff, A., Ojala, S., & Py¨ori¨a, P. (2021). Career stability in turbu lent times: A cross-cohort study of mid-careers in Finland. Acta Sociologica, 64(4), 437-458. doi:10.1177/0001699320983422.

Ritschard, G., Bussi, M., & O'Reilly, J. (2018). An index of precarity for measuring early employment insecurity. Sequence Analysis and Related Approaches, 279.

Rose, D., & Harrison, E. (2007). The European socio-economic classification: A new social class schema for comparative European research. European Societies, 9(3), 459-490. doi:10.1080/14616690701336518.

Shahbazian, R., & Bihagen, E. (2022). Does your class give more than a hint of your lifetime earnings?: Assessing indicators for lifetime earnings over the life course for Swede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8(4), 527-542.

Vosko, L. F. (2011). Managing the margins: Gender, citizenship, and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of precarious employment. OUP Oxford.

Zabel, C. (2022). Diversity of employment biographies and prospects of middle-aged welfare recipients. Longitudinal and Life Course Studies, 14(3), 358-402. doi:10.1332/175795921X16643819920960.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Retrieved from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2023.5.15. 인출.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Retrieved from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2023.5.15. 인출.

한국노동연구원. (각 연도). 한국노동패널조사. Retrieved from https://www.kli.re.kr/klips에서 2023.6.20. 인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안전망.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safety/list4.do에서 2023.10.14. 인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support/list4.do에서 2023.10.14. 인출.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에서 2023. 12. 17. 인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학습병행.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list4.do에서 2023. 12. 17. 인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자주 하는 질문(FAQ). https://www.kua.go.kr/uapae010/selectQstn.do에서 2023.10.15. 인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연금정보.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2.jsp에서 2023.10.12.. 인출.

국민연금법. 제10조.

국민연금법. 제13조.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책/제도, 근로·자녀장려금.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에서 2023. 06.26. 인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php에서 2023. 10. 12. 인출.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 현황.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에서 2023. 6. 20. 인출.

NPS 사이버홍보관. 알기 쉬운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https://www.nps.or.kr/jsppage/cyber_pr/easy/easy_03_06.jsp에서 2023.10.12. 인출.